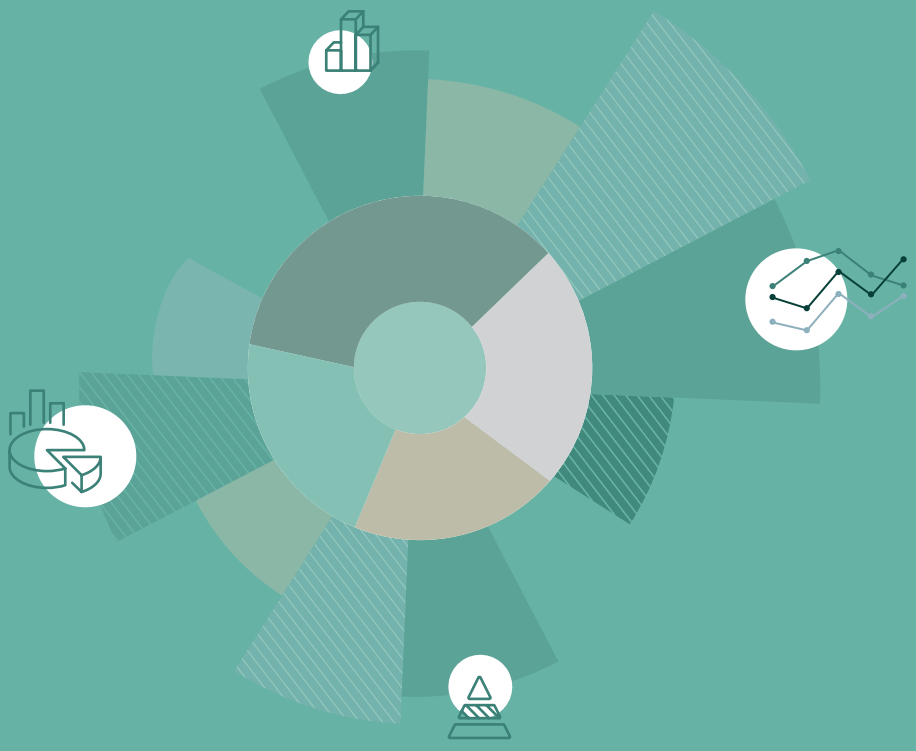
#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 NABO Medium-Term Fiscal Projection: 2023~203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총 괄 |** 신항진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이현경 경제비용추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오명희 행정비용추계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작성·추계 |** 윤주철 (작성 총괄)
박정환 (국세수입 작성 총괄)
윤주철 신헌태 문지은
남 희 김우림 임슬기
정혜승 이윤경 박선아
이미연 여은구 강민지
김효경 박지원 문석휘
박성은 최천규 박정환
이정훈 고은비

**경제전망 |**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황종률 박승호 유근식

**지 원 |** 양희열 성유정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국회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02) 6788-3776 | etc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3. 10.

국회예산정책처
www.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10. 2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발 간 사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국가재정의 역할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복지 수요에 대응한 의무지출의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한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9월 1일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수입은 612.1조원, 총지출은 656.9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과 비교할 때 총수입은 2.2% 감소한 규모이고, 총지출은 2.8%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2024년 3.9%로 3%를 초과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본예산 기준 50.4%에서 2027년에 53.0%로 증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의 추이를 전망하였습니다. 전망 결과, 국세수입과 총지출 전망 등의 차이로 정부가 의도하는 관리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재정총량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 일러두기

1. GDP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이상 경상GDP를 의미함
2. 각 표에서 "-"는 "0"을 포함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수를 의미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둠
3. 단수 차이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차 례


요 약

Ⅰ. NABO 중기재정전망 개요 / 1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 1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 2
   가. 인구변수 ····· 2
   나. 거시경제변수 ····· 3
   다. 전망 방법 ····· 6

Ⅱ.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 8

1. 개 관 ····· 8
2. 총수입 전망 ····· 11
   가. 국세수입 ····· 11
   나. 국세외수입 ····· 15
3. 총지출 전망 ····· 21
   가. 의무지출 ····· 21
   나. 재량지출 ····· 36
4. 재정수지 전망 ····· 40
5. 국가채무 전망 ····· 46

Ⅲ. 2024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51

1. 개 요 ····· 51
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 ····· 52
   가. 개 관 ····· 52
   나. 총수입 ····· 54
   다. 총지출 ····· 56

라. 재정수지 ····· 64
마. 국가채무 ····· 65
3.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67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 67
나.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 68
다. 중기재정운용 평가 ····· 76

Ⅳ. **요약 및 결론** / 84

# 표 차례

[표 1]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인구변수 ····· 3
[표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 4
[표 3] 중기재정전망: 재정총량표 ····· 8
[표 4] 중기재정전망: 국세수입 ····· 11
[표 5]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소득세 ····· 12
[표 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법인세 ····· 13
[표 7]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부가가치세 ····· 13
[표 8]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세목 ····· 14
[표 9] 중기재정전망: 국세외수입 ····· 15
[표 10]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사회보장기여금 ····· 17
[표 11] 중기재정전망: 사회보장기여금 ····· 18
[표 1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연금수입 ····· 19
[표 13] 중기재정전망: 연금수입 ····· 19
[표 14]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국세외수입 ····· 20
[표 15] 중기재정전망: 의무지출 ····· 21
[표 1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적연금 의무지출 ····· 23
[표 17] 중기재정전망: 공적연금 의무지출 ····· 24
[표 18]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사회보험 의무지출 ····· 26
[표 19] 중기재정전망: 사회보험 의무지출 ····· 27
[표 20]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공부조 의무지출 ····· 28
[표 21] 중기재정전망: 공공부조 의무지출 ····· 29
[표 2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복지지출 ····· 31
[표 23] 중기재정전망: 기타 복지지출 ····· 32
[표 24]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지방이전재원 ····· 33
[표 25] 중기재정전망: 지방이전재원 ····· 34
[표 2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이자지출 ····· 35

[표 27] 중기재정전망: 이자지출 ····· 36
[표 28] 중기재정전망: 기타 의무지출 ····· 36
[표 29]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재량지출 ····· 37
[표 30] 중기재정전망: 재량지출 ····· 37
[표 31]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 ····· 40
[표 3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국가채무 ····· 47
[표 33]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 48
[표 34] 주요 정책 변화: 총수입 ····· 51
[표 35] 주요 정책 변화: 총지출 ····· 52
[표 36] 기준전망: 재정총량표 ····· 53
[표 37]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수입 ····· 54
[표 38]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국세수입 ···· 55
[표 39] 주요 정책 변화: 소득세 ····· 55
[표 40] 주요 정책 변화: 법인세 ····· 56
[표 41] 주요 정책 변화: 기타 세목 ····· 56
[표 4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지출 ····· 57
[표 43]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의무지출 ···· 58
[표 44] 주요 정책 변화: 사회보험 ····· 59
[표 45] 주요 정책 변화: 공공부조 ····· 61
[표 46] 주요 정책 변화: 기타 복지지출 ····· 62
[표 47] 중기재정전망: 재량지출 ····· 63
[표 48]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정수지 ····· 64
[표 49]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 66
[표 50]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 68
[표 51]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경상GDP 성장률 ····· 69
[표 52]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증감) ····· 70
[표 53]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원인: 총수입 ····· 72
[표 54]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원인: 총지출 ····· 75
[표 55]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복지 분야 의무지출 ····· 77

[표 56] 복지 분야 의무지출의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증감) ····· 77
[표 57]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재정수지 비율 ····· 82
[표 58]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재량지출 ····· 83
[표 59] 재량지출 수준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비율 변화 ····· 83

# 그림 차례

[그림 1] NABO 중기재정전망 흐름도 ····· 6
[그림 2] 중기재정전망: 총수입 및 총지출 ····· 9
[그림 3]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 ····· 10
[그림 4]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 10
[그림 5] 관리재정수지 비율 추이 및 전망 ····· 41
[그림 6] 국가채무 비율 추이 및 전망 ····· 48
[그림 7]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량지출 ····· 63
[그림 8]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관리재정수지 ····· 65
[그림 9]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 67
[그림 10]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경상GDP 성장률 ····· 69
[그림 11]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복지 분야 의무지출 ····· 73
[그림 12]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공적연금 의무지출 ····· 78
[그림 13]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사회보험 의무지출 ····· 80
[그림 14]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초생활보장 의무지출 ·· 81

# 요 약

# Ⅰ. NABO 중기재정전망 개요

##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예산안 등”)에 반영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총량에 대해 전망

- ○ 예산안 등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총량(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을 10년 기간에 대해 전망함으로써 중기적 시계에서의 재정운용 방향 분석
- ○ 또한, 예산안 등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baseline)과 비교함으로써 정책 변화의 효과 추정

## 2. 중기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 가. 인구변수

❑ 인구변수는 통계청이 2021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중 2023~2032년 추계치(중위 가정) 활용

- ○ 총 인구는 2023년 5,156만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2년 5,108만명으로 추계
- ○ 출생아 수는 2023년에 23만명(합계출산율 0.73명)에서 2032년 32만명(합계출산율 1.04명)으로 증가
- ○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950만명(총 인구 수 대비 18.4%)에서 2032년 1,391만명(27.2%)으로 증가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인구변수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
| 총 인구 수(만명) | 5,156 | 5,150 | 5,145 | 5,140 | 5,135 | 5,130 | 5,125 | 5,120 | 5,114 | 5,108 |
| 총 인구 증가율(%) | -0.14 | -0.11 | -0.10 | -0.10 | -0.10 | -0.09 | -0.10 | -0.10 | -0.11 | -0.12 |
| 출생아 수(만명) | 23 | 23 | 25 | 26 | 27 | 29 | 30 | 31 | 31 | 32 |
| 합계출산율(명) | 0.73 | 0.70 | 0.74 | 0.78 | 0.83 | 0.87 | 0.91 | 0.96 | 1.00 | 1.04 |
| 0~5세 인구 수(만명) | 172 | 160 | 152 | 147 | 146 | 148 | 152 | 159 | 166 | 172 |
| 0~5세 인구 비중(%) | 3.3 | 3.1 | 2.9 | 2.9 | 2.9 | 2.9 | 3.0 | 3.1 | 3.2 | 3.4 |
| 65세 이상 인구 수(만명) | 950 | 1,001 | 1,059 | 1,120 | 1,167 | 1,220 | 1,260 | 1,306 | 1,349 | 1,391 |
| 65세 이상 인구 비중(%) | 18.4 | 19.4 | 20.6 | 21.8 | 22.7 | 23.8 | 24.6 | 25.5 | 26.4 | 27.2 |
| 사망자 수(만명) | 33 | 34 | 35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자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2021.1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나. 거시경제변수

❑ 경제변수는 NABO의 2023~2032년 거시경제 전망 활용

- 명목GDP 성장률은 2023년 2.2%에서 2024년 4.2%, 2025년 5.1%로 상승 후 상승세가 둔화되어 2032년에 3.7% 전망
- 취업자 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3~2027년 동안 0.3~1.2% 수준, 2028년 이후 0.1~0.3% 수준으로 예상
- 명목임금상승률은 2023년 2.9%에서 소폭 상승하여 2032년 3.1%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 3.4%에서 점차 하락하고 장기적으로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인 2.0% 수준 유지
-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23년 3.5% 수준이나 이후 하락하여 2032년 2.2% 전망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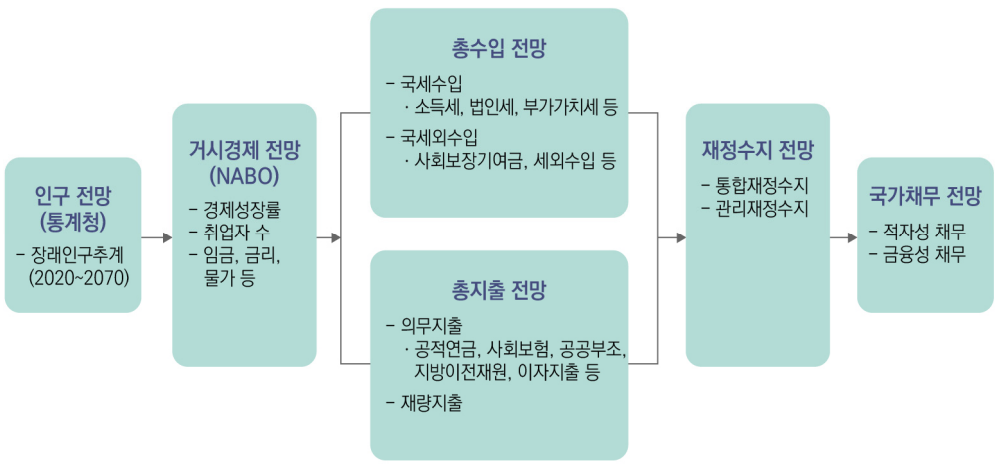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
| 명목GDP 성장률 | 2.2 | 4.2 | 5.1 | 4.8 | 4.4 | 4.0 | 3.9 | 3.8 | 3.7 | 3.7 |
| 실질GDP 성장률 | 1.1 | 2.0 | 3.0 | 2.6 | 2.3 | 2.1 | 2.0 | 1.9 | 1.9 | 1.8 |
| 디플레이터 | 1.1 | 2.2 | 2.0 | 2.2 | 2.1 | 1.9 | 1.9 | 1.8 | 1.8 | 1.9 |
| 소비자물가상승률 | 3.4 | 2.4 | 2.2 | 2.2 | 2.1 | 2.1 | 2.1 | 2.0 | 2.0 | 2.0 |
| 명목임금상승률 | 2.9 | 3.0 | 3.4 | 3.2 | 3.2 | 3.2 | 3.2 | 3.1 | 3.1 | 3.1 |
| 취업자 증감률 | 1.2 | 0.8 | 0.8 | 0.5 | 0.3 | 0.3 | 0.2 | 0.1 | 0.1 | 0.1 |
| 실업률 | 2.7 | 3.0 | 3.2 | 3.3 | 3.3 | 3.4 | 3.4 | 3.4 | 3.3 | 3.3 |
| 국고채금리(3년) | 3.5 | 3.0 | 2.8 | 2.6 | 2.5 | 2.5 | 2.4 | 2.4 | 2.3 | 2.2 |
| 회사채금리(3년, AA-) | 4.3 | 3.6 | 3.3 | 3.2 | 3.1 | 3.1 | 3.0 | 3.0 | 2.9 | 2.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 전망 방법

❑ NABO 중기재정전망은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 그리고 항목별 전망에 사용된 주요 가정을 바탕으로 총수입과 총지출을 경상가격으로 전망하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재정수지를 산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 전망

NABO 중기재정전망 흐름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Ⅱ.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 1. 개 관

❑ 2024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국가채무는 2023년 1,128.8조원(GDP 대비 51.1%)에서 2032년 1,901.8조원(59.4%)으로 연평균 6.0% 증가 전망

- ○ 총수입은 2023년 571.2조원에서 2032년 886.8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
- ○ 총지출은 2023년 607.6조원에서 2032년 921.4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
- ○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3.9%에서 2032년 △1.8%로 전망

중기재정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총수입 | 571.2 | 604.5 | 649.4 | 683.4 | 716.8 | 749.6 | 783.0 | 816.7 | 851.2 | 886.8 | |
| (전년 대비 증가율) | (-7.5) | (5.8) | (7.4) | (5.2) | (4.9) | (4.6) | (4.5) | (4.3) | (4.2) | (4.2) | 5.0 |
| 국세수입 | 340.3 | 361.4 | 390.4 | 416.6 | 438.8 | 461.8 | 484.0 | 507.2 | 531.1 | 556.1 | |
| (전년 대비 증가율) | (-14.1) | (6.2) | (8.0) | (6.7) | (5.3) | (5.3) | (4.8) | (4.8) | (4.7) | (4.7) | 5.6 |
| 국세외수입 | 230.9 | 243.2 | 259.0 | 266.8 | 278.1 | 287.7 | 299.0 | 309.5 | 320.2 | 330.7 | |
| (전년 대비 증가율) | (4.2) | (5.3) | (6.5) | (3.0) | (4.2) | (3.5) | (3.9) | (3.5) | (3.4) | (3.3) | 4.1 |
| 총지출 | 607.6 | 655.2 | 689.3 | 724.2 | 756.6 | 787.8 | 820.3 | 853.4 | 887.1 | 921.4 | |
| (전년 대비 증가율) | (-11.0) | (7.8) | (5.2) | (5.1) | (4.5) | (4.1) | (4.1) | (4.0) | (3.9) | (3.9) | 4.7 |
| 의무지출 | 321.3 | 346.5 | 373.8 | 401.8 | 427.4 | 451.7 | 477.2 | 503.4 | 530.1 | 557.3 | |
| (전년 대비 증가율) | (-3.4) | (7.8) | (7.9) | (7.5) | (6.4) | (5.7) | (5.6) | (5.5) | (5.3) | (5.1) | 6.3 |
| 재량지출 | 286.2 | 308.7 | 315.5 | 322.4 | 329.2 | 336.1 | 343.2 | 350.0 | 357.0 | 364.2 | |
| (전년 대비 증가율) | (-15.4) | (7.9) | (2.2) | (2.2) | (2.1) | (2.1) | (2.1) | (2.0) | (2.0) | (2.0) | 2.7 |
| 통합재정수지 | -36.4 | -50.6 | -39.9 | -40.9 | -39.8 | -38.2 | -37.3 | -36.7 | -35.9 | -34.7 | |
| (GDP 대비 비율) | (-1.6) | (-2.2) | (-1.6) | (-1.6) | (-1.5) | (-1.4) | (-1.3) | (-1.2) | (-1.2) | (-1.1) |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49.8 | 49.3 | 45.7 | 42.5 | 39.3 | 38.4 | 35.6 | 32.6 | 28.8 | 24.5 | |
| (GDP 대비 비율) | (2.3) | (2.1) | (1.9) | (1.7) | (1.5) | (1.4) | (1.2) | (1.1) | (0.9) | (0.8) | |
| 관리재정수지 | -86.2 | -99.9 | -85.7 | -83.3 | -79.1 | -76.6 | -72.9 | -69.3 | -64.6 | -59.2 | |
| (GDP 대비 비율) | (-3.9) | (-4.3) | (-3.5) | (-3.3) | (-3.0) | (-2.8) | (-2.5) | (-2.3) | (-2.1) | (-1.8) | |
| 국가채무 | 1,128.8 | 1,203.2 | 1,292.4 | 1,379.3 | 1,463.2 | 1,555.0 | 1,647.4 | 1,736.6 | 1,821.6 | 1,901.8 | |
| (전년 대비 증가율) | (5.8) | (6.6) | (7.4) | (6.7) | (6.1) | (6.3) | (5.9) | (5.4) | (4.9) | (4.4) | 6.0 |
| (GDP 대비 비율) | (51.1) | (52.2) | (53.4) | (54.3) | (55.2) | (56.4) | (57.5) | (58.4) | (59.0) | (59.4)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 총수입 전망

❑ 총수입은 2023년 571.2조원(GDP 대비 25.8%)에서 2032년 886.8조원(27.7%)으로 연평균 5.0% 증가 전망

❑ (국세수입)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감안하여 추정한 결과, 국세수입은 2023년 340.3조원(GDP 대비 15.4%)에서 2032년 556.1조원(17.4%)으로 연평균 5.6% 증가 전망

- ○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 (소득세)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해외근로자 비과세 확대 등
  - −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 − (기타 세목)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등
- ○ 소득세는 2023년 114.2조원에서 2032년 210.1조원으로 연평균 7.0% 증가
- ○ 법인세는 2023년 79.1조원에서 2032년 126.3조원으로 연평균 5.3% 증가
- ○ 부가가치세는 2023년 74.4조원에서 2032년 118.1조원으로 연평균 5.3% 증가
- ○ 기타 세목은 2023년 72.6조원에서 2032년 101.6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

❑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은 2023년 230.9조원(GDP 대비 10.4%)에서 2032년 330.7조원(10.3%)으로 연평균 4.1% 증가 전망

- ○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2023년 87.4조원에서 2032년 120.1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
- ○ 연금수입(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2023년 18.5조원에서 2032년 28.3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
- ○ 사회보장기여금과 연금수입을 제외한 기타 국세외수입은 2023년 125.1조원에서 2032년 182.2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

중기재정전망: 총수입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총수입 | 571.2 | 604.5 | 649.4 | 683.4 | 716.8 | 749.6 | 783.0 | 816.7 | 851.2 | 886.8 | 5.0 |
| (GDP 대비 비율) | (25.8) | (26.2) | (26.8) | (26.9) | (27.0) | (27.2) | (27.3) | (27.5) | (27.6) | (27.7) | |
| 국세수입 | 340.3 | 361.4 | 390.4 | 416.6 | 438.8 | 461.8 | 484.0 | 507.2 | 531.1 | 556.1 | 5.6 |
| (GDP 대비 비율) | (15.4) | (15.7) | (16.1) | (16.4) | (16.6) | (16.7) | (16.9) | (17.1) | (17.2) | (17.4) | |
| 소득세 | 114.2 | 124.8 | 137.6 | 149.1 | 159.3 | 169.1 | 178.6 | 188.7 | 199.1 | 210.1 | 7.0 |
| 법인세 | 79.1 | 75.0 | 82.8 | 89.7 | 96.4 | 102.8 | 108.6 | 114.4 | 120.2 | 126.3 | 5.3 |
| 부가가치세 | 74.4 | 81.1 | 86.9 | 92.0 | 96.5 | 100.8 | 104.9 | 109.3 | 113.6 | 118.1 | 5.3 |
| 기타 | 72.6 | 80.5 | 83.1 | 85.9 | 86.5 | 89.1 | 91.9 | 94.9 | 98.1 | 101.6 | 3.8 |
| 국세외수입 | 230.9 | 243.2 | 259.0 | 266.8 | 278.1 | 287.7 | 299.0 | 309.5 | 320.2 | 330.7 | 4.1 |
| (GDP 대비 비율) | (10.4) | (10.6) | (10.7) | (10.5) | (10.5) | (10.4) | (10.4) | (10.4) | (10.4) | (10.3) | |
| 사회보장기여금 | 87.4 | 91.0 | 95.1 | 98.5 | 102.2 | 106.0 | 109.5 | 113.0 | 116.6 | 120.1 | 3.6 |
| 연금수입 | 18.5 | 20.2 | 21.2 | 22.6 | 23.9 | 24.9 | 26.1 | 26.8 | 27.5 | 28.3 | 4.8 |
| 기타 | 125.1 | 131.9 | 142.6 | 145.7 | 152.0 | 156.9 | 163.3 | 169.8 | 176.0 | 182.2 | 4.3 |

주: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기여금, 연금수입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기여금을 말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3. 총지출 전망

❑ 총지출은 2023년 607.6조원(GDP 대비 27.5%)에서 2032년 921.4조원(28.8%)으로 연평균 4.7% 증가 전망

❑ (의무지출) 예산안에 반영된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의무지출은 2023년 321.3조원(GDP 대비 14.5%)에서 2032년 557.3조원(17.4%)으로 연평균 6.3% 증가 전망

○ 주요 정책 변화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고용보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의 선정기준 완화(생계급여·주거급여) 등

○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23년 157.3조원에서 2032년 294.7조원으로 연평균 7.2% 증가

○ 지방이전재원은 2023년 133.0조원에서 2032년 213.0조원으로 연평균 5.4% 증가

○ 이자지출은 2023년 23.7조원에서 2032년 40.3조원으로 연평균 6.0% 증가

○ 기타 의무지출은 2023년 7.3조원에서 2032년 9.4조원으로 연평균 2.8% 증가

○ 의무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2.9%에서 2032년 60.5%로 상승

❑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2023년 286.2조원(GDP 대비 12.9%)에서 2032년 364.2조원(11.4%)으로 연평균 2.7% 증가 전망

○ (2023년) 세수 결손 규모와 정부의 지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전망

○ (2024년) 2024년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망

○ (2025~2032년)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

중기재정전망: 총지출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총지출 | 607.6 | 655.2 | 689.3 | 724.2 | 756.6 | 787.8 | 820.3 | 853.4 | 887.1 | 921.4 | 4.7 |
| (GDP 대비 비율) | (27.5) | (28.4) | (28.5) | (28.5) | (28.5) | (28.6) | (28.6) | (28.7) | (28.8) | (28.8) | |
| 의무지출 | 321.3 | 346.5 | 373.8 | 401.8 | 427.4 | 451.7 | 477.2 | 503.4 | 530.1 | 557.3 | 6.3 |
| (GDP 대비 비율) | (14.5) | (15.0) | (15.4) | (15.8) | (16.1) | (16.4) | (16.7) | (16.9) | (17.2) | (17.4) | |
| (총지출 대비 비중) | (52.9) | (52.9) | (54.2) | (55.5) | (56.5) | (57.3) | (58.2) | (59.0) | (59.8) | (60.5) | |
| 복지 분야 | 157.3 | 173.3 | 188.8 | 204.2 | 219.6 | 232.6 | 247.5 | 262.8 | 278.6 | 294.7 | 7.2 |
| 공적연금 | 70.7 | 78.6 | 87.7 | 96.6 | 105.9 | 112.4 | 121.1 | 130.0 | 139.7 | 149.5 | 8.7 |
| 사회보험 | 35.2 | 37.2 | 40.4 | 43.1 | 45.7 | 48.4 | 51.2 | 53.8 | 55.9 | 58.2 | 5.7 |
| 공공부조 | 37.6 | 40.8 | 43.7 | 46.9 | 49.7 | 52.8 | 55.5 | 58.4 | 61.5 | 64.7 | 6.2 |
| 기타 | 13.8 | 16.6 | 17.0 | 17.6 | 18.3 | 19.0 | 19.8 | 20.6 | 21.5 | 22.3 | 5.5 |
| 지방이전재원 | 133.0 | 137.6 | 147.6 | 158.6 | 167.2 | 176.2 | 184.9 | 193.9 | 203.2 | 213.0 | 5.4 |
| 이자지출 | 23.7 | 27.2 | 29.1 | 31.0 | 32.8 | 34.8 | 36.4 | 38.0 | 39.2 | 40.3 | 6.0 |
| 기타 의무지출 | 7.3 | 8.3 | 8.3 | 8.1 | 7.8 | 8.1 | 8.4 | 8.7 | 9.0 | 9.4 | 2.8 |
| 재량지출 | 286.2 | 308.7 | 315.5 | 322.4 | 329.2 | 336.1 | 343.2 | 350.0 | 357.0 | 364.2 | 2.7 |
| (GDP 대비 비율) | (12.9) | (13.4) | (13.0) | (12.7) | (12.4) | (12.2) | (12.0) | (11.8) | (11.6) | (11.4) | |
| (총지출 대비 비중) | (47.1) | (47.1) | (45.8) | (44.5) | (43.5) | (42.7) | (41.8) | (41.0) | (40.2) | (39.5)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4. 재정수지 전망

❑ (통합재정수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36.4조원 적자(GDP 대비 △1.6%), 2024년 50.6조원 적자(△2.2%), 2032년 34.7조원 적자(△1.1%)로 전망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2023년 49.8조원 흑자(GDP 대비 2.3%)에서 2032년 24.5조원 흑자(0.8%)로 전망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86.2조원 적자(GDP 대비 △3.9%), 2024년 99.9조원 적자(△4.3%), 2032년 59.2조원 적자(△1.8%)로 전망

○ 2027년 이후에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 △3.0% 미만 유지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
| 통합재정수지 | -36.4 | -50.6 | -39.9 | -40.9 | -39.8 | -38.2 | -37.3 | -36.7 | -35.9 | -34.7 |
| (GDP 대비 비율) | (-1.6) | (-2.2) | (-1.6) | (-1.6) | (-1.5) | (-1.4) | (-1.3) | (-1.2) | (-1.2) | (-1.1)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49.8 | 49.3 | 45.7 | 42.5 | 39.3 | 38.4 | 35.6 | 32.6 | 28.8 | 24.5 |
| (GDP 대비 비율) | (2.3) | (2.1) | (1.9) | (1.7) | (1.5) | (1.4) | (1.2) | (1.1) | (0.9) | (0.8) |
| 관리재정수지 | -86.2 | -99.9 | -85.7 | -83.3 | -79.1 | -76.6 | -72.9 | -69.3 | -64.6 | -59.2 |
| (GDP 대비 비율) | (-3.9) | (-4.3) | (-3.5) | (-3.3) | (-3.0) | (-2.8) | (-2.5) | (-2.3) | (-2.1) | (-1.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5. 국가채무 전망

❑ 국가채무는 2023년 1,128.8조원(GDP 대비 51.1%)에서 2032년 1,901.8조원(59.4%)으로 연평균 6.0% 증가 전망

○ 중앙정부 채무는 2023년 1,094.6조원(GDP 대비 49.5%)에서 2032년 1,865.4조원(58.3%)으로 연평균 6.1% 증가

– 적자성 채무는 2023년 683.8조원(GDP 대비 30.9%)에서 2032년 1,324.0조원(41.4%)으로 연평균 7.6%, 금융성 채무는 2023년 410.8조원(GDP 대비 18.6%)에서 2032년 541.4조원(16.9%)으로 연평균 3.1% 증가

○ 지방정부 순채무는 2023년 34.2조원(GDP 대비 1.5%)에서 2032년 36.4조원(1.1%)으로 연평균 0.7% 증가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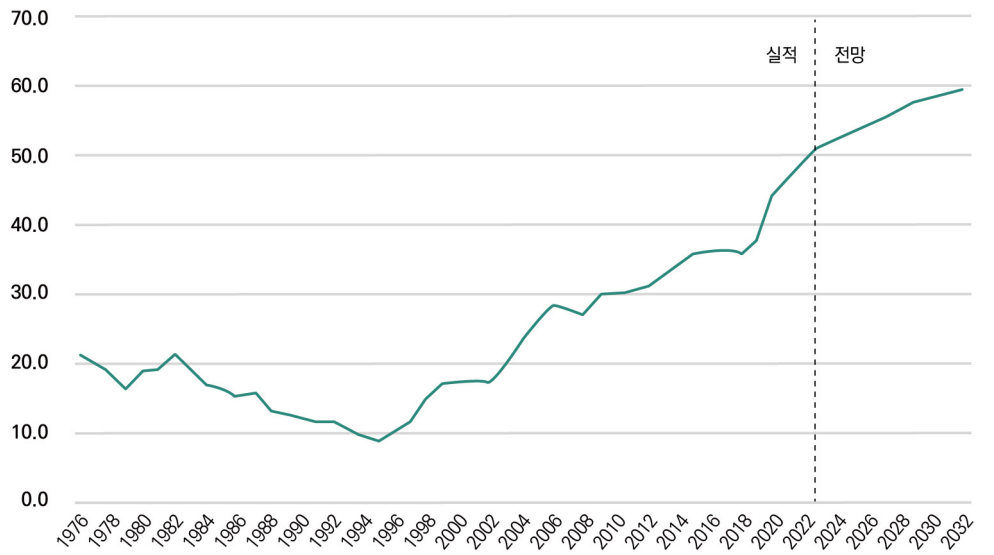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국가채무(A+B) | 1,128.8 | 1,203.2 | 1,292.4 | 1,379.3 | 1,463.2 | 1,555.0 | 1,647.4 | 1,736.6 | 1,821.6 | 1,901.8 | 6.0 |
| (GDP 대비 비율) | (51.1) | (52.2) | (53.4) | (54.3) | (55.2) | (56.4) | (57.5) | (58.4) | (59.0) | (59.4) | |
| 중앙정부 채무(A) | 1,094.6 | 1,170.4 | 1,261.1 | 1,349.1 | 1,433.0 | 1,523.6 | 1,614.8 | 1,702.8 | 1,786.5 | 1,865.4 | 6.1 |
| (GDP 대비 비율) | (49.5) | (50.8) | (52.1) | (53.2) | (54.1) | (55.3) | (56.4) | (57.3) | (57.9) | (58.3) | |
| 적자성 채무 | 683.8 | 766.7 | 837.6 | 912.8 | 984.0 | 1,057.2 | 1,130.4 | 1,199.8 | 1,264.7 | 1,324.0 | 7.6 |
| (GDP 대비 비율) | (30.9) | (33.3) | (34.6) | (36.0) | (37.1) | (38.3) | (39.5) | (40.3) | (41.0) | (41.4) | |
| 금융성 채무 | 410.8 | 403.7 | 423.5 | 436.3 | 449.0 | 466.4 | 484.4 | 502.9 | 521.8 | 541.4 | 3.1 |
| (GDP 대비 비율) | (18.6) | (17.5) | (17.5) | (17.2) | (16.9) | (16.9) | (16.9) | (16.9) | (16.9) | (16.9) | |
| 지방정부 순채무(B) | 34.2 | 32.8 | 31.3 | 30.1 | 30.2 | 31.4 | 32.6 | 33.8 | 35.1 | 36.4 | 0.7 |
| (GDP 대비 비율) | (1.5) | (1.4) | (1.3) | (1.2) | (1.1) | (1.1) | (1.1) | (1.1) | (1.1) | (1.1)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 비율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 Ⅲ. 2024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1. 개 요

❑ 2024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baseline)과 중기재정전망의 결과 비교

○ 중기재정전망에 반영한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음

주요 정책 변화

| | 주요 정책 변화 |
|---|---|
| 국세수입 | ○ (소득세)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해외근로자 비과세 확대 등<br>○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br>○ (기타 세목)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등 |
| 의무지출 | ○ (고용보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br>○ (건강보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br>○ (생계급여) 수급 선정기준 완화 등<br>○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br>○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br>○ (주거급여) 수급 선정기준 완화<br>○ (보훈) 보상금 단가 인상<br>○ (영유아보육) 보육료 단가 인상 |

## 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

❑ (총수입) 정부 세법개정안의 영향으로 총수입 재정전망은 기준전망에 비해 연도별로 0.4~0.9조원 작으며, 10년 동안 총 5.1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

○ 국세수입 재정전망은 정부 세법개정안의 영향으로 기준전망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수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소득세)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해외근로자 비과세 확대 등
-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 (기타 세목)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등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수입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중기재정전망(A) | | | | | | | | | | | |
| 총수입 | 571.2 | 604.5 | 649.4 | 683.4 | 716.8 | 749.6 | 783.0 | 816.7 | 851.2 | 886.8 | 5.0 |
| 국세수입 | 340.3 | 361.4 | 390.4 | 416.6 | 438.8 | 461.8 | 484.0 | 507.2 | 531.1 | 556.1 | 5.6 |
| 국세외수입 | 230.9 | 243.2 | 259.0 | 266.8 | 278.1 | 287.7 | 299.0 | 309.5 | 320.2 | 330.7 | 4.1 |
| 기준전망(B) | | | | | | | | | | | |
| 총수입 | 571.2 | 605.5 | 650.0 | 684.0 | 717.4 | 750.1 | 783.5 | 817.2 | 851.7 | 887.2 | 5.0 |
| 국세수입 | 340.3 | 362.3 | 391.1 | 417.2 | 439.3 | 462.4 | 484.5 | 507.7 | 531.5 | 556.5 | 5.6 |
| 국세외수입 | 230.9 | 243.2 | 259.0 | 266.8 | 278.1 | 287.7 | 299.0 | 309.5 | 320.2 | 330.7 | 4.1 |
| 차 이(A–B) | | | | | | | | | | | 합계 |
| 총수입 | 0.0 | -0.9 | -0.7 | -0.6 | -0.6 | -0.5 | -0.5 | -0.5 | -0.4 | -0.4 | -5.1 |
| 국세수입 | 0.0 | -0.9 | -0.7 | -0.6 | -0.6 | -0.5 | -0.5 | -0.5 | -0.4 | -0.4 | -5.1 |
| 국세외수입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국세수입

(단위: 조원)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합계 |
|---|---|---|---|---|---|---|---|---|---|---|---|
| 국세수입 | 0.0 | -0.9 | -0.7 | -0.6 | -0.6 | -0.5 | -0.5 | -0.5 | -0.4 | -0.4 | -5.1 |
| 소득세 | 0.0 | -0.9 | -0.7 | -0.6 | -0.5 | -0.4 | -0.4 | -0.4 | -0.3 | -0.3 | -4.4 |
| 법인세 | 0.0 | 0.0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8 |
| 부가가치세 | 0.0 | 0.0 | 0.0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4 |
| 기타 세목 | 0.0 | 0.0 | -0.1 | -0.1 | -0.1 | -0.1 | -0.2 | -0.2 | -0.1 | -0.1 | -1.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총지출) 의무지출 관련 정책 변화로 중기재정전망의 총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연도별로 1.9~4.8조원 크며, 10년 동안 총 29.5조원 클 것으로 전망

○ 의무지출 재정전망은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로 기준전망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고용보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건강보험), 수급 선정기준 완화(생계급여·주거급여), 보상금 단가 인상(보훈), 보육료 단가 인상(영유아보육) 등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중기재정전망(A) | | | | | | | | | | | |
| 총지출 | 607.6 | 655.2 | 689.3 | 724.2 | 756.6 | 787.8 | 820.3 | 853.4 | 887.1 | 921.4 | 4.7 |
| 의무지출 | 321.3 | 346.5 | 373.8 | 401.8 | 427.4 | 451.7 | 477.2 | 503.4 | 530.1 | 557.3 | 6.3 |
| 재량지출 | 286.2 | 308.7 | 315.5 | 322.4 | 329.2 | 336.1 | 343.2 | 350.0 | 357.0 | 364.2 | 2.7 |
| 기준전망(B) | | | | | | | | | | | |
| 총지출 | 607.6 | 653.3 | 687.0 | 721.7 | 753.8 | 784.7 | 816.9 | 849.3 | 882.6 | 916.6 | 4.7 |
| 의무지출 | 321.3 | 344.6 | 371.5 | 399.3 | 424.6 | 448.6 | 473.8 | 499.3 | 525.6 | 552.5 | 6.2 |
| 재량지출 | 286.2 | 308.7 | 315.5 | 322.4 | 329.2 | 336.1 | 343.2 | 350.0 | 357.0 | 364.2 | 2.7 |
| 차 이(A–B) | | | | | | | | | | | 합계 |
| 총지출 | 0.0 | 1.9 | 2.3 | 2.6 | 2.8 | 3.1 | 3.4 | 4.1 | 4.5 | 4.8 | 29.5 |
| 의무지출 | 0.0 | 1.9 | 2.3 | 2.6 | 2.8 | 3.1 | 3.4 | 4.1 | 4.5 | 4.8 | 29.5 |
| 재량지출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의무지출

(단위: 조원)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합계 |
|---|---|---|---|---|---|---|---|---|---|---|---|
| 의무지출 | 0.0 | 1.9 | 2.3 | 2.6 | 2.8 | 3.1 | 3.4 | 4.1 | 4.5 | 4.8 | 29.5 |
| 복지 분야 | 0.0 | 2.2 | 2.5 | 2.6 | 2.8 | 3.0 | 3.2 | 3.8 | 4.0 | 4.2 | 28.3 |
| 고용보험 | 0.0 | 0.2 | 0.4 | 0.4 | 0.4 | 0.5 | 0.5 | 0.5 | 0.6 | 0.6 | 4.2 |
| 건강보험 | 0.0 | 0.5 | 0.6 | 0.6 | 0.7 | 0.7 | 0.8 | 1.2 | 1.2 | 1.3 | 7.5 |
| 노인장기 | 0.0 | -0.1 | -0.1 | -0.1 | -0.1 | -0.1 | -0.1 | 0.0 | 0.0 | 0.0 | -0.4 |
| 기초생활보장 | 0.0 | 1.3 | 1.3 | 1.4 | 1.5 | 1.6 | 1.7 | 1.7 | 1.8 | 1.9 | 14.3 |
| 영유아보육료 | 0.0 | 0.2 | 0.2 | 0.2 | 0.2 | 0.2 | 0.3 | 0.3 | 0.3 | 0.3 | 2.3 |
| 지방이전재원 | 0.0 | -0.4 | -0.3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2.0 |
| 이자지출 | 0.0 | 0.0 | 0.1 | 0.2 | 0.3 | 0.3 | 0.4 | 0.5 | 0.6 | 0.7 | 3.2 |
| 기타 의무지출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주: 복지 분야의 하위 항목은 2024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의무지출 항목에 한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수지) 정부 세법개정안 및 의무지출 변화 등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 재정전망은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총 30.4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 %p)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중기재정전망(A) | | | | | | | | | | | |
| 관리재정수지 | -86.2 | -99.9 | -85.7 | -83.3 | -79.1 | -76.6 | -72.9 | -69.3 | -64.6 | -59.2 | |
| (GDP 대비 비율) | (-3.9) | (-4.3) | (-3.5) | (-3.3) | (-3.0) | (-2.8) | (-2.5) | (-2.3) | (-2.1) | (-1.8) | |
| 기준전망(B) | | | | | | | | | | | |
| 관리재정수지 | -86.2 | -97.3 | -83.1 | -80.6 | -76.1 | -73.4 | -69.5 | -65.2 | -60.3 | -54.6 | |
| (GDP 대비 비율) | (-3.9) | (-4.2) | (-3.4) | (-3.2) | (-2.9) | (-2.7) | (-2.4) | (-2.2) | (-2.0) | (-1.7) | |
| 차 이(A-B) | | | | | | | | | | | 합계 |
| 관리재정수지 | 0.0 | -2.6 | -2.6 | -2.7 | -3.0 | -3.2 | -3.4 | -4.1 | -4.3 | -4.6 | -30.4 |
| (GDP 대비 비율) | (0.0)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가채무) 정부 세법개정안 및 의무지출 변화 등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국가채무 재정전망은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29.7조원 클 것으로 전망(GDP 대비 비율은 2032년 기준 0.9%p 상승)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p)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중기재정전망(A) | | | | | | | | | | | |
| 국가채무 | 1,128.8 | 1,203.2 | 1,292.4 | 1,379.3 | 1,463.2 | 1,555.0 | 1,647.4 | 1,736.6 | 1,821.6 | 1,901.8 | 6.0 |
| (GDP 대비 비율) | (51.1) | (52.2) | (53.4) | (54.3) | (55.2) | (56.4) | (57.5) | (58.4) | (59.0) | (59.4) | |
| 기준전망(B) | | | | | | | | | | | |
| 국가채무 | 1,128.8 | 1,200.9 | 1,287.8 | 1,372.0 | 1,453.0 | 1,541.7 | 1,630.6 | 1,715.8 | 1,796.4 | 1,872.1 | 5.8 |
| (GDP 대비 비율) | (51.1) | (52.1) | (53.2) | (54.1) | (54.8) | (55.9) | (56.9) | (57.7) | (58.2) | (58.5) | |
| 차 이(A-B) | | | | | | | | | | | |
| 국가채무 | 0.0 | 2.3 | 4.6 | 7.3 | 10.2 | 13.3 | 16.8 | 20.8 | 25.1 | 29.7 | |
| (GDP 대비 비율)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3.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2027년 동안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3.9~△2.5% 수준 유지,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53.0%로 전망

○ 정부는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을 △3.0% 미만으로 관리할 계획

– 정부가 「재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2022. 7. 7.) 등을 통해 법제화하려는 재정준칙(이하 "재정준칙(안)")은 관리재정수지의 한도를 GDP 대비 △3%로 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동 한도를 △2%로 축소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 | 2023 본예산 | 2024 예산안 | 2025 계획 | 2026 계획 | 2027 계획 | 연평균 증가율 |
|---|---|---|---|---|---|---|
| 총수입 | 625.7 | 612.1 | 661.5 | 692.0 | 722.3 | 3.7 |
| 국세수입 | 400.5 | 367.4 | 401.3 | 423.2 | 444.9 | 2.7 |
| 국세외수입 | 225.2 | 244.7 | 260.2 | 268.8 | 277.4 | 5.4 |
| 총지출 | 638.7 | 656.9 | 684.4 | 711.1 | 736.9 | 3.6 |
| 의무지출 | 340.3 | 348.2 | 373.3 | 394.0 | 413.5 | 5.0 |
| 재량지출 | 298.4 | 308.7 | 311.1 | 317.1 | 323.4 | 2.0 |
| 통합재정수지 | -13.1 | -44.8 | -22.9 | -19.2 | -14.6 | |
| (GDP 대비 비율) | (-0.6) | (-1.9) | (-0.9) | (-0.7) | (-0.5) | |
| 관리재정수지 | -58.2 | -92.0 | -72.2 | -69.5 | -65.8 | |
| (GDP 대비 비율) | (-2.6) | (-3.9) | (-2.9) | (-2.7) | (-2.5) | |
| 국가채무 | 1,134.4 | 1,196.2 | 1,273.3 | 1,346.7 | 1,417.6 | |
| (GDP 대비 비율) | (50.4) | (51.0) | (51.9) | (52.5) | (53.0) | |
| 경상GDP 성장률 | 4.0 | 4.9 | 4.6 | 4.4 | 4.2 | |

주: GDP 대비 비율은 정부의 경상GDP 전망치 기준임(경상GDP 성장률은 2023년의 경우 본예산 확정 시 4.0%이었으나, 2024년도 예산안 제출 시 3.4%로 조정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 9.

❑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NABO 중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총수입은 5년 동안 88.3조원 작으며, 총지출은 4.9조원 큰 수준

○ 이러한 차이는 총수입의 경우 국세수입의 전망 차이, 총지출은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전망 차이 등에 주로 기인

○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정부의 재추계(9. 17.)를 기준으로 하면, 총수입은 NABO가 정부보다 5년 동안 29.3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

–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이전재원도 달라지므로 NABO와 정부의 의무지출 차이는 1.6조원에서 24.0조원으로 확대

○ 총수입은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작고, 총지출은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크기 때문에 중기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동안 76.5조원 크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7년 기준으로 2.2%p 높음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증감)

(단위: 조원, %p)

| | 2023 | | 2024 | 2025 | 2026 | 2027 | 합계 | |
|---|---|---|---|---|---|---|---|---|
| | 본예산 | 세수재추계 | | | | | 본예산 | 세수재추계 |
| 총수입 | -54.5 | 4.6 | -7.5 | -12.2 | -8.6 | -5.5 | -88.3 | -29.3 |
| 국세수입 | -60.2 | -1.1 | -6.0 | -10.9 | -6.6 | -6.1 | -89.8 | -30.7 |
| 국세외수입 | 5.7 | | -1.6 | -1.3 | -2.0 | 0.6 | 1.5 | |
| 총지출 | -31.2 | | -1.7 | 4.9 | 13.1 | 19.7 | 4.9 | |
| 의무지출 | -19.0 | 3.5 | -1.7 | 0.5 | 7.8 | 13.9 | 1.6 | 24.0 |
| 복지 분야 | 2.6 | | 0.7 | 8.1 | 13.6 | 20.0 | 45.0 | |
| 지방이전재원 | -22.4 | 0.0 | -2.2 | -7.1 | -4.5 | -4.2 | -40.4 | -18.0 |
| 이자지출 | 0.8 | | -0.1 | -0.5 | -1.3 | -1.9 | -3.0 | |
| 기타 의무지출 | 0.0 | | 0.0 | 0.0 | 0.0 | 0.0 | 0.0 | |
| 재량지출 | -12.2 | | 0.0 | 4.4 | 5.3 | 5.8 | 3.3 | |
| 통합재정수지 | -23.3 | | -5.9 | -17.0 | -21.7 | -25.2 | -93.1 | |
| (GDP 대비 비율) | (-1.0) | | (-0.3) | (-0.7) | (-0.9) | (-1.0) | | |
| 관리재정수지 | -28.0 | | -7.9 | -13.5 | -13.8 | -13.3 | -76.5 | |
| (GDP 대비 비율) | (-1.3) | | (-0.4) | (-0.6) | (-0.6) | (-0.5) | | |
| 국가채무 | -5.6 | | 7.0 | 19.1 | 32.5 | 45.6 | | |
| (GDP 대비 비율) | (0.7) | | (1.2) | (1.5) | (1.8) | (2.2) | | |

주: 1.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를 뺀 값임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3년 전망치는 2023년 본예산 기준이며, 음영 부분은 정부의 2023년 세수 재추계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 (복지 분야 의무지출 계획의 적정성)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중기재정전망에 비해 5년 동안 45.0조원 낮게 전망

○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전망은 과거 추세와 2024년 이후 정책 변화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계획

–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율은 2023~2027년 동안 연평균 6.6% 수준으로 NABO 중기재정전망의 8.7%보다 낮은 수준

○ 하위 항목별로 보면,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합계 기준으로 공적연금은 25.1조원, 사회보험은 10.9조원, 공공부조는 9.0조원 큼

– 이러한 차이는 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연금 등에서 발생

❑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 필요) 중기재정전망에 근거할 경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7년부터 △3% 미만으로 유지될 전망

- ○ 정부는 2025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하기 위해 지출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으나, 중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를 경우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
- ○ NABO 중기재정전망의 총수입이 정부보다 작고 의무지출은 크기 때문에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증가율로 계획된 정부의 재량지출을 반영하더라도 2025년 관리재정수지 비율 △3% 초과

# Ⅳ. 요약 및 결론

❑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총량 전망

- ○ 총수입은 2023년 571.2조원(GDP 대비 25.8%)에서 2032년 886.8조원(27.7%)으로 연평균 5.0% 증가 전망
- ○ 총지출은 2023년 607.6조원(GDP 대비 27.5%)에서 2032년 921.4조원(28.8%)으로 연평균 4.7% 증가 전망
- ○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86.2조원 적자(GDP 대비 △3.9%), 2024년 99.9조원 적자(△4.3%), 2032년 59.2조원 적자(△1.8%) 전망
- ○ 국가채무는 2023년 1,128.8조원(GDP 대비 51.1%)에서 2032년 1,901.8조원(59.4%)으로 연평균 6.0% 증가 전망

❑ 중기재정전망 결과를 기준전망(예산안 등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전망)과 비교할 때, 이번 예산안 등으로 향후 10년 동안 총수입은 5.1조원 감소, 총지출은 29.5조원 증가 예상

- ○ 예산안 등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총수입은 감소하고 총지출은 증가하므로 관리재정수지는 10년 동안 30.4조원 악화되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32년 기준으로 0.9%p 상승

❑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와 의무지출의 증가를 야기하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2027년 이후에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

- ○ 정부는 2025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를 경우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Ⅰ. NABO 중기재정전망 개요

##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정부는 지난 9월 1일 「2024년도 예산안」(이하 "예산안") 및 향후 5개년의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재원배분계획을 담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612.1조원, 총지출은 656.9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경우 총수입은 13.6조원 감소(△2.2%),[1] 총지출은 18.1조원 증가(2.8%)한 규모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둔" 예산안임을 강조하고 있다.[2]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중기적 시계에서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 이후 GDP 대비 △3.9~△2.5% 수준이며, 국가채무는 2023년 본예산 기준 1,134.4조원(GDP 대비 50.4%)에서 2027년 1,417.6조원(53.0%)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3]

국회예산정책처(이하 "NABO")의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이하 "중기재정전망")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전망한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전망치인 기준전망(baseline)과 비교

---

1) 이러한 증가율은 2023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정부의 세수 재추계(기획재정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2023. 9. 17.)를 기준으로 하면 2024년 예산안의 총수입 증가율은 전년 대비 8.0% 수준이다(국세외수입의 경우 본예산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2)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을 4대 중점 분야에 제대로 지원", 2023. 8. 29.

3) 이때 GDP는 정부의 경상GDP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총량의 변화를 추정한다. 이때 기준전망은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는 반영하지 않은 전망을 말한다.

본 보고서는 Ⅰ장에서 중기재정전망의 기초변수인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에 대해 설명하고, Ⅱ장에서 주요 재정총량(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에 대한 중기재정전망의 전망 방법과 결과를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중기재정전망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여 정부의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평가한다. Ⅳ장에서는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를 요약한다.

##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 가. 인구변수

재정전망에 필요한 인구변수는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2021. 12.)의 2023~2032년 추계치(중위 가정)를 사용한다.

중기재정전망에 적용한 총 인구 수는 2023년 5,156만명에서 2032년 5,10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출생아 수는 2023년에 23만명(합계출산율 0.73명)까지 감소하다가 2024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32년 32만명(합계출산율 1.04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0~5세 영유아 수는 2023년 172만명에서 2032년 172만명으로 변화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950만명에서 2032년 1,391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빠른 증가세로 총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중도 2023년 18.4%에서 2032년 27.2%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25년에 이르면 고령 인구 비중이 20.6%가 되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4]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4) UN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 한다.

[표 1]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인구변수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
| 총 인구 수(만명) | 5,156 | 5,150 | 5,145 | 5,140 | 5,135 | 5,130 | 5,125 | 5,120 | 5,114 | 5,108 |
| 총 인구 증가율(%) | -0.14 | -0.11 | -0.10 | -0.10 | -0.10 | -0.09 | -0.10 | -0.10 | -0.11 | -0.12 |
| 출생아 수(만명) | 23 | 23 | 25 | 26 | 27 | 29 | 30 | 31 | 31 | 32 |
| 합계출산율(명) | 0.73 | 0.70 | 0.74 | 0.78 | 0.83 | 0.87 | 0.91 | 0.96 | 1.00 | 1.04 |
| 0~5세 인구 수(만명) | 172 | 160 | 152 | 147 | 146 | 148 | 152 | 159 | 166 | 172 |
| 0~5세 인구 비중(%) | 3.3 | 3.1 | 2.9 | 2.9 | 2.9 | 2.9 | 3.0 | 3.1 | 3.2 | 3.4 |
| 65세 이상 인구 수(만명) | 950 | 1,001 | 1,059 | 1,120 | 1,167 | 1,220 | 1,260 | 1,306 | 1,349 | 1,391 |
| 65세 이상 인구 비중(%) | 18.4 | 19.4 | 20.6 | 21.8 | 22.7 | 23.8 | 24.6 | 25.5 | 26.4 | 27.2 |
| 사망자 수(만명) | 33 | 34 | 35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자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2021.1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나. 거시경제변수

재정전망에 필요한 거시경제변수는 NABO의 최근 중기 경제전망(「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IV」, 2023. 10.) 보고서의 거시경제 전망치를 사용한다. 주요 거시경제 변수로는 실질GDP 및 명목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취업자 수, 금리, 지출부문별 GDP디플레이터 등이다.

[표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단위: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3~'27 평균 |
|---|---|---|---|---|---|---|
| 명목GDP 성장률 | 2.2 | 4.2 | 5.1 | 4.8 | 4.4 | 4.1 |
| 실질GDP 성장률 | 1.1 | 2.0 | 3.0 | 2.6 | 2.3 | 2.2 |
| 디플레이터 | 1.1 | 2.2 | 2.0 | 2.2 | 2.1 | 1.9 |
| 소비자물가상승률 | 3.4 | 2.4 | 2.2 | 2.2 | 2.1 | 2.5 |
| 명목임금상승률 | 2.9 | 3.0 | 3.4 | 3.2 | 3.2 | 3.1 |
| 취업자 증감률 | 1.2 | 0.8 | 0.8 | 0.5 | 0.3 | 0.7 |
| 실업률 | 2.7 | 3.0 | 3.2 | 3.3 | 3.3 | 3.1 |
| 국고채금리(3년) | 3.5 | 3.0 | 2.8 | 2.6 | 2.5 | 2.9 |
| 회사채금리(3년, AA-) | 4.3 | 3.6 | 3.3 | 3.2 | 3.1 | 3.5 |

|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8~'32 평균 |
|---|---|---|---|---|---|---|
| 명목GDP 성장률 | 4.0 | 3.9 | 3.8 | 3.7 | 3.7 | 3.8 |
| 실질GDP 성장률 | 2.1 | 2.0 | 1.9 | 1.9 | 1.8 | 1.9 |
| 디플레이터 | 1.9 | 1.9 | 1.8 | 1.8 | 1.9 | 1.9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1 | 2.1 | 2.0 | 2.0 | 2.0 | 2.0 |
| 명목임금상승률 | 3.2 | 3.2 | 3.1 | 3.1 | 3.1 | 3.2 |
| 취업자 증감률 | 0.3 | 0.2 | 0.1 | 0.1 | 0.1 | 0.2 |
| 실업률 | 3.4 | 3.4 | 3.4 | 3.3 | 3.3 | 3.4 |
| 국고채금리(3년) | 2.5 | 2.4 | 2.4 | 2.3 | 2.2 | 2.4 |
| 회사채금리(3년, AA-) | 3.1 | 3.0 | 3.0 | 2.9 | 2.8 | 3.0 |

주: 평균은 기간 중 단순 평균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의 거시경제전망은 향후 5년(2023~2027년)과 그후 5년(2028~2032년) 기간으로 나누어 전망의 전제 및 방법론이 구분된다. 향후 5년(2023~2027년) 전망은 세계경제성장률, 세계교역량, 국제원자재가격, 금리, 환율 등 주요 대내외 변수에 대한 전제치로부터 출발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세계 경제 분절화, 재정여력 약화와 총인구 감소 등을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소비, 투자, 수출입 등의 지출부문별 실질변수 및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의 물가변수는 주어진 전제치와 부문별 결정요인 등을 고려한 시계열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전망치를 산출하였다. 민간소비는 가계 소득변수, 정부지출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재정지출 계획,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등의 자본재형태별 투자는 관련 수요 및 금리 등의 비용변수가 주요 결정요인으로 반영되었다.

2023~2027년 중 실질GDP 성장률은 연평균 2.2%로 지난해 9월 전망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연도별로 보면 2023년과 2024년이 1.1%, 2.0%로 각각 1.0%p, 0.3%p 하향 조정되고, 2025~2027년 중에는 0.7%p, 0.5%p, 0.2%p 상향 조정되었다.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였으나, 민간소비 상향 조정과 총수입의 하향 조정으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상승하며 연평균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동 기간 GDP디플레이터가 연평균 1.9% 상승하고 명목GDP는 연평균 4.1% 성장할 예상이다.

2023~2027년 중 소비자물가는 수요측 요인과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을 고려한 물가방정식을 이용하여 전망하였고, 2028년 이후에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에 수렴한다고 가정하였다. 2024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 원자재가격 오름세 둔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으로 점차 하락하면서 장기적으로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인 2.0%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최근 고용상황, 정부 정책 등 외생적 요인을 바탕으로 전망하였다. 2024년 취업자 수는 돌봄 부문의 노동수요 증가와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23.7만명(0.8%)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5년 기간 중 취업자 수 증감률은 경제성장률 및 노동공급 둔화 등으로 2024년 0.8%에서 2027년 0.3%로 낮아질 전망이다. 실업률은 2023년 2.7%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며 2032년에는 3.3%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에는 근로자 1인당 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노동시장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였다. 향후 5년 기간 중 명목임금상승률은 2023년 2.9%에서 2025년 3.4%로 상승한 후 하락하여 연평균 3.1%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8~2032년 중 전망치는 2027년까지의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과 부문별 장기추세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실질GDP는 2025~2026년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면서 잠재GDP 수준을 회복하고 2027년 이후로는 다시 잠재GDP 성장률 수준[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취업자 수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과 GDP-

5) 2023~2027년 기간 중 잠재GDP 성장률은 2.1% 내외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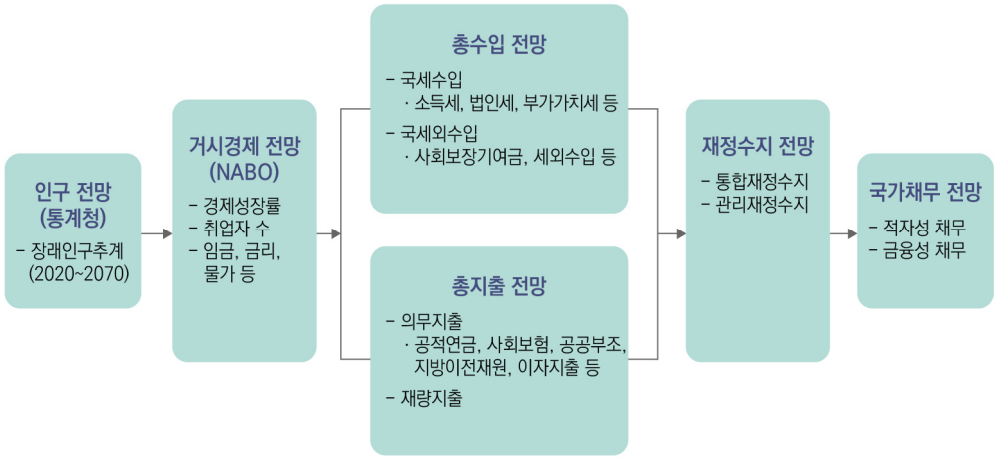
고용간 균형관계, 인구변화 등을 바탕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았다. 임금상승률은 2023~2027년과 동일한 방법론을 통해 전망한 결과 지속 하락하여 3%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물가 불안 완화 등으로 기준금리의 하방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하락한 연평균 3.0%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 경제·금융 불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조정 압력 등도 향후 국고채금리(3년 만기)의 하방압력을 높일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양적긴축 등에 따른 시중 유동성 증가세 둔화,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금융불안 등으로 금리의 가파른 하락세는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이후 국고채금리는 실질GDP 성장률 하락,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 등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이며 2025년 2.8%를 기록한 이후 2032년 2.2%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 다. 전망 방법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전망에 필요한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 그리고 각 전망항목에 사용된 주요 가정을 바탕으로 총수입과 총지출을 경상가격으로 전망하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재정수지를 산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를 전망한다.

[그림 1] NABO 중기재정전망 흐름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로,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입, 기타 국세외수입으로 구분한다. 국세수입은 세목별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하며, 국세외수입은 회계·기금을 구분하여 주요 수입항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며, 의무지출은 분야별·세부사업별로 법령의 지출요건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고, 재량지출은 의무지출과 달리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므로 총량 수준에서 전망한다.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로 구분하며, 복지 분야는 다시 공적연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타 복지지출로 구분한다.

총수입과 총지출 전망을 바탕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통합재정수지를 산출하며,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 전망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전망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관리재정수지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채무를 전망한다.

# Ⅱ.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 1. 개 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중기재정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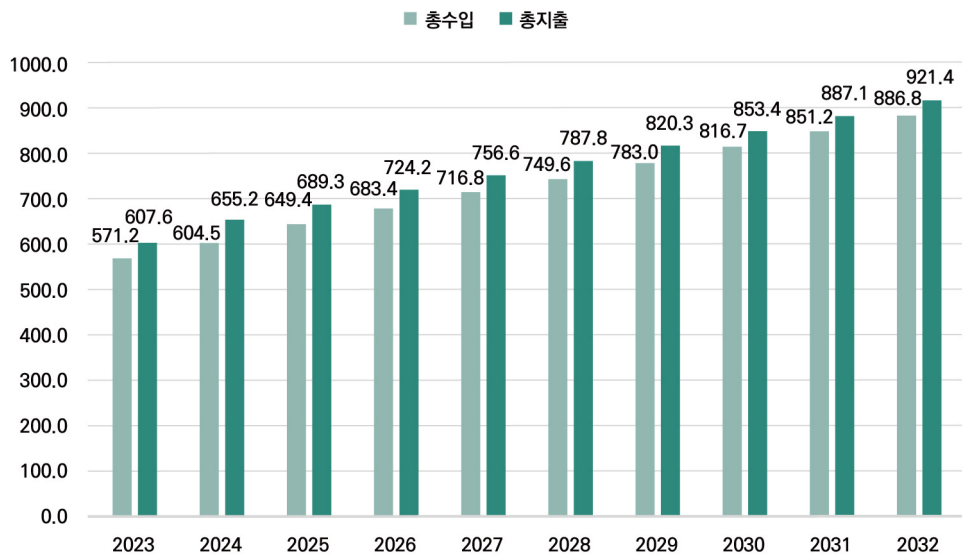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총수입 | 571.2 | 604.5 | 649.4 | 683.4 | 716.8 | 749.6 | 783.0 | 816.7 | 851.2 | 886.8 | |
| (전년 대비 증가율) | (-7.5) | (5.8) | (7.4) | (5.2) | (4.9) | (4.6) | (4.5) | (4.3) | (4.2) | (4.2) | 5.0 |
| 국세수입 | 340.3 | 361.4 | 390.4 | 416.6 | 438.8 | 461.8 | 484.0 | 507.2 | 531.1 | 556.1 | |
| (전년 대비 증가율) | (-14.1) | (6.2) | (8.0) | (6.7) | (5.3) | (5.3) | (4.8) | (4.8) | (4.7) | (4.7) | 5.6 |
| 국세외수입 | 230.9 | 243.2 | 259.0 | 266.8 | 278.1 | 287.7 | 299.0 | 309.5 | 320.2 | 330.7 | |
| (전년 대비 증가율) | (4.2) | (5.3) | (6.5) | (3.0) | (4.2) | (3.5) | (3.9) | (3.5) | (3.4) | (3.3) | 4.1 |
| 총지출 | 607.6 | 655.2 | 689.3 | 724.2 | 756.6 | 787.8 | 820.3 | 853.4 | 887.1 | 921.4 | |
| (전년 대비 증가율) | (-11.0) | (7.8) | (5.2) | (5.1) | (4.5) | (4.1) | (4.1) | (4.0) | (3.9) | (3.9) | 4.7 |
| 의무지출 | 321.3 | 346.5 | 373.8 | 401.8 | 427.4 | 451.7 | 477.2 | 503.4 | 530.1 | 557.3 | |
| (전년 대비 증가율) | (-3.4) | (7.8) | (7.9) | (7.5) | (6.4) | (5.7) | (5.6) | (5.5) | (5.3) | (5.1) | 6.3 |
| 재량지출 | 286.2 | 308.7 | 315.5 | 322.4 | 329.2 | 336.1 | 343.2 | 350.0 | 357.0 | 364.2 | |
| (전년 대비 증가율) | (-15.4) | (7.9) | (2.2) | (2.2) | (2.1) | (2.1) | (2.1) | (2.0) | (2.0) | (2.0) | 2.7 |
| 통합재정수지 | -36.4 | -50.6 | -39.9 | -40.9 | -39.8 | -38.2 | -37.3 | -36.7 | -35.9 | -34.7 | |
| (GDP 대비 비율) | (-1.6) | (-2.2) | (-1.6) | (-1.6) | (-1.5) | (-1.4) | (-1.3) | (-1.2) | (-1.2) | (-1.1) |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49.8 | 49.3 | 45.7 | 42.5 | 39.3 | 38.4 | 35.6 | 32.6 | 28.8 | 24.5 | |
| (GDP 대비 비율) | (2.3) | (2.1) | (1.9) | (1.7) | (1.5) | (1.4) | (1.2) | (1.1) | (0.9) | (0.8) | |
| 관리재정수지 | -86.2 | -99.9 | -85.7 | -83.3 | -79.1 | -76.6 | -72.9 | -69.3 | -64.6 | -59.2 | |
| (GDP 대비 비율) | (-3.9) | (-4.3) | (-3.5) | (-3.3) | (-3.0) | (-2.8) | (-2.5) | (-2.3) | (-2.1) | (-1.8) | |
| 국가채무 | 1,128.8 | 1,203.2 | 1,292.4 | 1,379.3 | 1,463.2 | 1,555.0 | 1,647.4 | 1,736.6 | 1,821.6 | 1,901.8 | |
| (전년 대비 증가율) | (5.8) | (6.6) | (7.4) | (6.7) | (6.1) | (6.3) | (5.9) | (5.4) | (4.9) | (4.4) | 6.0 |
| (GDP 대비 비율) | (51.1) | (52.2) | (53.4) | (54.3) | (55.2) | (56.4) | (57.5) | (58.4) | (59.0) | (59.4)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은 2023년 571.2조원에서 2032년 886.8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23년 607.6조원에서 2032년 921.4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36.4조원 적자(GDP 대비 △1.6%)에서 2024년 50.6조원 적자(△2.2%), 2032년 34.7조원 적자(△1.1%)로 전망되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86.2조원 적자(GDP 대비 △3.9%), 2024년 99.9조원 적자(△4.3%), 2032년 59.2조원 적자(△1.8%)로 전망된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아 전망기간 동안 수지는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채무는 2023년 1,128.8조원(GDP 대비 51.1%), 2032년 1,901.8조원(59.4%)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중기재정전망: 총수입 및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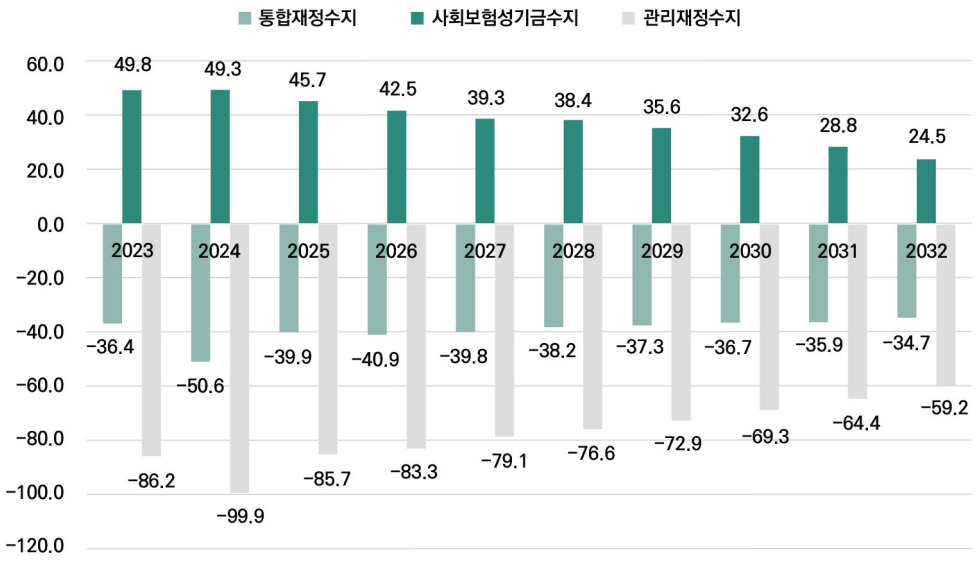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3]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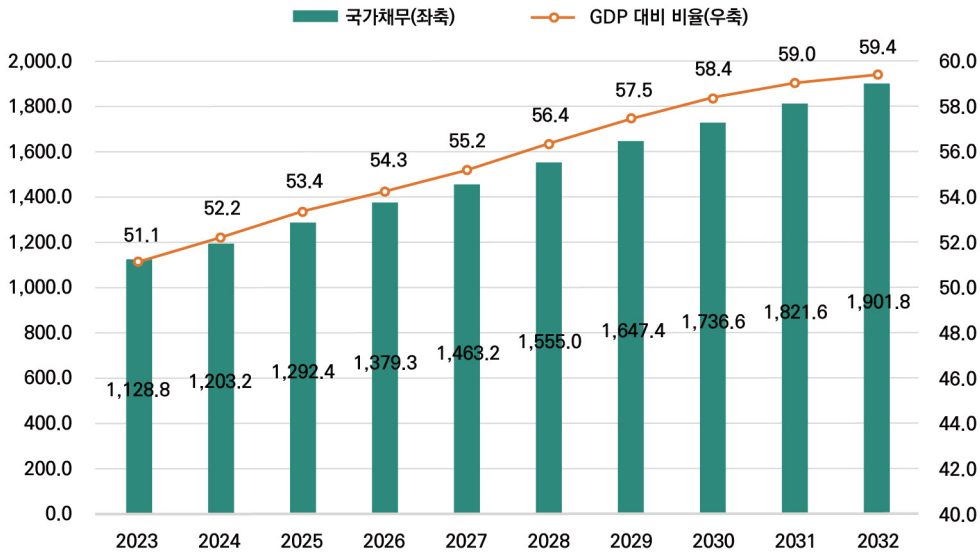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4]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 총수입 전망

### 가. 국세수입

국세수입은 현행 조세체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각 세목별로 기준전망을 하고, 여기에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여 추정한다.[6] 전망 결과, 국세수입은 2023년 340.3조원(GDP 대비 15.4%)에서 2032년 556.1조원(17.4%)으로 연평균 5.6%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자산시장 호조 및 법인실적 개선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자산 관련 세수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직전 5년(2018~2022년)의 연평균 증가율 7.8%와 비교하면 2.2%p 낮은 수준으로, 최근 국세수입을 견인하던 자산 관련 세수 및 법인세의 증가세 둔화 전망과 법인세율 인하 등 세수 감소형 세법 개정 등에 기인한다.

[표 4] 중기재정전망: 국세수입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국세수입 | 340.3 | 361.4 | 390.4 | 416.6 | 438.8 | 461.8 | 484.0 | 507.2 | 531.1 | 556.1 | 5.6 |
| (GDP 대비 비율) | (15.4) | (15.7) | (16.1) | (16.4) | (16.6) | (16.7) | (16.9) | (17.1) | (17.2) | (17.4) | |
| 소득세 | 114.2 | 124.8 | 137.6 | 149.1 | 159.3 | 169.1 | 178.6 | 188.7 | 199.1 | 210.1 | 7.0 |
| 법인세 | 79.1 | 75.0 | 82.8 | 89.7 | 96.4 | 102.8 | 108.6 | 114.4 | 120.2 | 126.3 | 5.3 |
| 부가가치세 | 74.4 | 81.1 | 86.9 | 92.0 | 96.5 | 100.8 | 104.9 | 109.3 | 113.6 | 118.1 | 5.3 |
| 기타 | 72.6 | 80.5 | 83.1 | 85.9 | 86.5 | 89.1 | 91.9 | 94.9 | 98.1 | 101.6 | 3.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 소득세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각 세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 등의 설명변수를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한다.

종합소득세는 민간소비, 비임금근로자수, 사업소득 신고율 등을, 근로소득세는 임금근로자수, 명목임금상승률, 실효세율 등을 바탕으로 전망한다. 양도소득세는 금리, 경상GDP 등으로 구성된 전망모형을 이용하였고,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금리, 경상GDP를 비롯하여 환율, 개인 채권 및 예금 잔액 등으로 구성된 전망모형을 이용하였다. 또한, 회귀모형을 통해 산출된 전망치에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6)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 중 2023년에 시행되는 제도변화에 대해서는 기준전망에 반영한다.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전망 결과, 소득세는 2023년 114.2조원에서 2032년 210.1조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하여 이전 5년(2018~2022년)의 연평균 증가율(1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임금근로자 수 및 명목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어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데 기인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영향으로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가율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소득세

| |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
|---|---|
| 소득세 | ○ 종합소득세는 민간소비, 비임금근로자수, 사업소득신고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br>○ 양도소득세는 금리, 경상GDP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br>○ 근로소득세는 임금근로자 수, 명목임금 상승률, 실효세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br>○ 이자·배당소득세는 금리, 경상GDP, 민간소비, 환율, 개인 채권 잔액, 개인 예금 잔액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 (2) 법인세

법인세는 신고분과 원천분 법인세를 구분하여, 각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한 회귀모형 등을 통해 각각을 전망한다.

신고분 법인세는 먼저 2023년 상반기까지의 법인의 영업이익 등 실적과 8월까지의 누적 법인세 실적을 고려하여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3년의 신고분 법인세수를 전망한다. 다음으로 경상GDP, 환율, 회사채금리, 통관수출, 설비투자, 교역조건, 특이요인을 반영한 연도별 더미변수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전망모형을 통해 2032년까지의 신고분 법인세수를 전망한다. 원천분 법인세는 8월까지의 누적 세수실적 및 금융여건을 반영하여 2023년 전망치를 추정한다.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업의 금융자산, 회사채금리, 경상GDP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전망모형을 통해 2032년까지 전망한다. 또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된 신고분 및 원천분 법인세를 합산한 후,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등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를 반영하였다.

전망 결과, 법인세는 2023년 79.1조원에서 2032년 126.3조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하여 이전 5년(2018~2022년)의 연평균 증가율(9.9%)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2022년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인한 법인실적의 부진한 흐름이 2023년 및 2024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쳐 이후 세수전망의 베이스를 낮추는 점과 법인세율 인하,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등 정책변화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에 기인한다.

[표 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법인세

| |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
|---|---|
| 법인세 | ○ 신고분은 경상GDP, 원/달러 환율, 회사채금리, 통관수출, 설비투자, 교역조건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br>○ 원천분은 경상GDP, 비금융법인의 자산, 회사채금리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상GDP, 통관수입 및 통관수출, 설비투자,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한 회귀모형 등을 통해 전망하며, 회귀모형을 통해 산출된 전망치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 부가가치세는 2023년 74.4조원에서 2032년 118.1조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하여 이전 5년(2018~2022년)의 연평균 증가율(3.9%)보다 높을 전망이다. 이는 2023~2032년 동안 민간소비는 연평균 4.3%, 통관수입은 연평균 4.8%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7]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부가가치세

| |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
|---|---|
| 부가가치세 | ○ 경상GDP, 통관수입액, 통관수출액, 설비투자, 환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 (4) 기타 세목

기타 세목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하여 세목별 모형을 통해 전망한다. 또한,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부가세(surtax, 附加稅)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전망치를 활용하여 전망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경상성장률 및 탄력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치에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전망 결과, 기타 세목은 2023년 72.6조원에서 2032년 101.6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관련 세수(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경우 과세대상인 품목의 소비량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였으며, 자산 관련 세수(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우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경기 부진 등 시장요인과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8]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세목

| |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
|---|---|
| 상속세 및 증여세 | ○ 토지 등 자산종류별 상속 및 증여가액 비중과 자산종류별 가격 상승률 전망, 증여거래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망<br>– 단, 상속세의 경우, 2026년까지는 자산가 사망 등으로 인한 세수증가를 고려하여 전망 |
| 개별소비세 | ○ 발전용 유연탄 및 유류분 개별소비세는 경상GDP, 민간소비 등을 반영한 향후 수요량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각 유종별 세율을 활용해 전망<br>○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최근의 출고량 추이를 반영하여 전망<br>○ 자동차분 개별소비세는 민간소비 및 신차출고량 등을 이용하여 전망 |
| 증권거래세 | ○ KOSPI와 KOSDAQ 시장별 거래대금을 경상GDP, 금리 등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한 후 시장별 세율 반영 |
| 인지세 | ○ 경상성장률 및 세수탄력성 등을 통해 전망 |
| 교통·에너지·환경세 |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휘발유 및 경유의 수요전망 및 각 유종별 세율을 활용해 전망 |
| 관세 | ○ 향후 통관수입액 증가율 전망 및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전망 |
| 종합부동산세 | ○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과표별 현황에 향후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 |

## 나.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 중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연금수입(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각 기금의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하며, 이상의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을 제외한 기금수입과 세외수입은 수입의 경제적 성질(수입관, 수입항)을 고려한 시계열 전망모형 등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국세외수입은 2023년 230.9조원에서 2032년 330.7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전망이다.

[표 9] 중기재정전망: 국세외수입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국세외수입 | 230.9 | 243.2 | 259.0 | 266.8 | 278.1 | 287.7 | 299.0 | 309.5 | 320.2 | 330.7 | 4.1 |
| (GDP 대비 비율) | (10.4) | (10.6) | (10.7) | (10.5) | (10.5) | (10.4) | (10.4) | (10.4) | (10.4) | (10.3) | |
| 사회보장기여금 | 87.4 | 91.0 | 95.1 | 98.5 | 102.2 | 106.0 | 109.5 | 113.0 | 116.6 | 120.1 | 3.6 |
| 연금수입 | 18.5 | 20.2 | 21.2 | 22.6 | 23.9 | 24.9 | 26.1 | 26.8 | 27.5 | 28.3 | 4.8 |
| 기타 | 125.1 | 131.9 | 142.6 | 145.7 | 152.0 | 156.9 | 163.3 | 169.8 | 176.0 | 182.2 | 4.3 |

주: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기여금, 연금수입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기여금을 말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보험료 수입을 말한다.

국민연금기여금 수입[7]은 유형별(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수에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을 곱하여 전망한다. 이때 유형별 가입자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NABO의 연령집단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와 제도변수인 가입률 및 연령별·성별에 따른 유형별 이동률, 연령별·성별 신규가입률 등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령별·성별·유형별 소득분포를 고려하되, NABO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전망한다.

7) 고용주부담금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수입(보험료율 9.0%)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보험료율 4.5%)이고, 피고용자분담금은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보험료율 4.5%)과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보험료율 9.0%)이다.

사학연금기여금 수입[8]은 직종별·재직기간별·성별 가입자 수에 기준소득월액과 개인 및 학교법인의 기여금부담률을 곱하여 전망한다. 이때 가입자의 직종은 교원, 사무직원, 병원직원으로 구분하는데, 교원과 사무직원 수는 학교급별 학령인구에 대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가입자 실적치를 바탕으로 전망하고, 병원직원 수는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연령집단별 의료비 지출 실적을 추가로 고려하여 전망한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직종별·재직기간별·성별 기준소득월액 실적치를 기준으로 NABO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다.

고용보험기여금 수입[9]은 보험사업별(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추정보수총액에 보험료율 등을 곱하여 전망한다. 임금근로자의 보수총액은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및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및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 및 기여금 증가율 등을 적용한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및 최근 적용 직종이 확대된 노무제공자 등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실적을 반영하였다.

산재보험기여금 수입[10]은 가입자의 추정보수총액에 보험료율 등을 곱하여 전망한다. 일반사업장의 추정보수총액은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보수총액 대비 기여금 총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최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되고, 적용 직종도 확대[11]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2023. 6. 27., 시행 2023. 7.

---

8) 고용주부담금은 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주인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연금부담금(보험료율 5.294%), 재해보상부담금(개인 연금부담금의 4.54%), 퇴직수당부담금(대학 소속 가입자 퇴직수당 소요액의 40%)이고, 피고용자분담금은 연금부담금 중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보험료율 9%)이다. 기여금 중 국가부담금은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분류된다.

9)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분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며(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분담금, 보험료율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용주부담금, 보험료율 0.25 ~ 0.85%).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되며,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6%이다. 자영업자인 보험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0.25%이다.

10)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매년 고시된다. 고시된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0.6~18.5%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0.1%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022. 6. 10., 시행 2023. 7. 1.)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제공자로 확대·개편되었다.

1.)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료 수입을 반영하였다.

[표 10]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사회보장기여금

| |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
|---|---|
| 국민연금 | ○ 유형별 가입자 수에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을 곱하여 전망<br>– (가입자 수)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연령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가입률, 연령별·성별에 따른 가입자 유형별 이동률, 연령별·성별 신규가입률 등을 고려하여 추계<br>– (기준소득월액) 연령별·성별·가입자 유형별 소득분포 등을 고려하고, NABO의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 사학연금 | ○ 유형별 가입자 수에 기준소득월액, 기여금부담률을 곱하여 전망<br>– (가입자 수)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가입자 실적치, 의료비 지출 실적치 등을 바탕으로 직종별·재직기간별·성별 가입자 수를 추계<br>– (기준소득월액) 가입자의 직종별·재직기간별·성별 기준소득월액 실적치를 기준으로 NABO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의 변화를 반영하여 추계 |
| 고용보험 | ○ 가입자의 추정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전망<br>– 보수총액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및 명목임금상승률 적용<br>– 자영업자의 경우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실적 및 기여금 증가율 등을 적용<br>– 보험사업별, 가입자 유형별 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 산재보험 | ○ 가입자의 추정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전망<br>– 일반사업장의 추정보수총액은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을 적용<br>– 평균 보험료율은 보수총액 대비 기여금 총액의 비율로 산출하며, 2022년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br>○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보험료 수입은 가입자 1인당 평균 보험료 부담액에 근거하여 산출 |

전망 결과, 국민연금기여금은 2023년 57.9조원에서 2032년 77.6조원으로 연평균 3.3%, 사학연금기여금은 2023년 3.6조원에서 2032년 5.2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전망기간 동안 가입자 수는 감소하지만, 명목임금상승률의 영향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기여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기여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3년 17.2조원에서 2032년 24.7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기여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3년 8.7조원에서 2032년 12.7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중기재정전망: 사회보장기여금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사회보장기여금 | 87.4 | 91.0 | 95.1 | 98.5 | 102.2 | 106.0 | 109.5 | 113.0 | 116.6 | 120.1 | 3.6 |
| 국민연금 | 57.9 | 60.1 | 62.6 | 64.5 | 66.8 | 69.2 | 71.3 | 73.4 | 75.5 | 77.6 | 3.3 |
| 사학연금 | 3.6 | 3.9 | 4.1 | 4.3 | 4.5 | 4.6 | 4.8 | 4.9 | 5.1 | 5.2 | 4.1 |
| 고용보험 | 17.2 | 17.9 | 18.8 | 19.6 | 20.4 | 21.3 | 22.1 | 22.8 | 23.8 | 24.7 | 4.1 |
| 산재보험 | 8.7 | 9.1 | 9.6 | 10.0 | 10.4 | 10.9 | 11.3 | 11.8 | 12.2 | 12.7 | 4.3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 연금수입

연금수입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부담금, 군인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의 합계를 말한다. 이때 공무원연금 수입 중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부담금에는 연금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없는 연금지출 부족액에 대한 보전금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연금기여금 수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기여금부담률과 가입자 수이며, 기여금부담률은 현행 9%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입자 수의 경우, 인사혁신처 자료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1.12.) 등을 반영하여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0.26%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군인연금기여금 수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기여금부담률과 가입자 수이며, 기여금부담률은 현행 7%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입자 수의 경우, 국방부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른 계급별 정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1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연금수입

| |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
|---|---|
| 공무원연금 | ○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br>– 직종별·재직기간별·연령별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br>– 기여금부담률 9% 유지<br>○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부담금<br>–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으로 구성<br>– 각 항목별 총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금액의 비율(최근 5년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추정)을 적용 |
| 군인연금 | ○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br>– 가입자 수는 국방부의 연도별 군인 정원 적용<br>– 계급별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br>– 기여금부담률 7% 유지 |

전망 결과, 공무원연금기여금은 2023년 17.7조원에서 2032년 27.4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자 수의 증가율은 0.26%로 낮아 공무원연금기여금의 증가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부담금 등의 증가에 기인한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지출 증가에 따라 기여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전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부담금의 증가로 기여금의 전체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12] 군인연금기여금의 경우 2023년 0.7조원에서 2032년 0.9조원으로 연평균 1.9% 증가할 전망이다.

[표 13] 중기재정전망: 연금수입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연금수입 | 18.5 | 20.2 | 21.2 | 22.6 | 23.9 | 24.9 | 26.1 | 26.8 | 27.5 | 28.3 | 4.8 |
| 공무원연금 | 17.7 | 19.4 | 20.5 | 21.8 | 23.1 | 24.1 | 25.3 | 25.9 | 26.7 | 27.4 | 5.0 |
| 군인연금 | 0.7 | 0.8 | 0.8 | 0.8 | 0.8 | 0.8 | 0.8 | 0.8 | 0.9 | 0.9 | 1.9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2) 2022~2032년 동안 퇴직연금 수급자 수는 연평균 3.3% 증가하고, 연금액 인상 시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망기간 전반부에 상대적으로 높아 퇴직연금 지출액 증가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지출액 중 기여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전금도 연동되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기타 국세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및 연금수입을 제외한 기타 국세외수입은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 등 수입의 경제적 성질(수입관, 수입항)에 따라 구분한 후[13] 각각을 전망한다.

2023년 기타 국세외수입은 경제적 성질 구분에 따른 수입관별로 진도율 등을 고려하여 전망하며, 2024년 이후는 NABO의 경상GDP와 명목회사채금리(3년 만기, AA－)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시계열 전망모형을 활용하여 전망한다. 수입관별 전망모형의 선정에 있어서는 설명변수의 구성을 달리하는 추정모형의 예측력 비교와 시계열 추세를 고려하였다.

전망 결과, 사회보장기여금 및 연금수입을 제외한 기타 국세외수입은 2023년 125.1조원에서 2032년 182.2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할 전망이다.

[표 14]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국세외수입

| |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
|---|---|
|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 ○ NABO 경상GDP 등으로 구성된 시계열 전망모형을 활용한 추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전망 |
| 재산수입 | ○ NABO 명목회사채금리(3년 만기, AA－)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으로 구성된 시계열 전망모형을 활용한 추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전망 |
| 관유물매각대 | ○ NABO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 경상이전수입 | ○ NABO 경상GDP, 명목회사채금리(3년 만기, AA－)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으로 구성된 시계열 전망모형을 활용한 추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전망 |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 ○ NABO 경상GDP, 명목회사채금리(3년 만기, AA－)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으로 구성된 시계열 전망모형을 활용한 추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전망 |
| 융자 및 전대 차관원금 회수 | ○ NABO 경상GDP, 명목회사채금리(3년 만기, AA－) 등으로 구성된 시계열 전망모형을 활용한 추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전망 |

13) 수입대체경비 수입관은 수입항에 따른 경제적 성질을 반영하여 다른 수입관에 배정하여 전망하였다.

## 3. 총지출 전망

### 가.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로 구분한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급여별 수급자 수와 지원단가 등을 추정하여 전망하며, 수급요건과 지원단가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거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한다. 지방이전재원은 국세수입 전망에 근거하여 전망하며, 현행 교부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자지출은 국고채 및 국민주택채 이자지출과 기타로 구분하여 전망하고, 기타 의무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반영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의무지출은 2023년 321.3조원에서 2032년 557.3조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23년 157.3조원에서 2032년 294.7조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할 전망이다.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2.9%에서 2032년 60.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5] 중기재정전망: 의무지출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의무지출 | 321.3 | 346.5 | 373.8 | 401.8 | 427.4 | 451.7 | 477.2 | 503.4 | 530.1 | 557.3 | 6.3 |
| (GDP 대비 비율) | (14.5) | (15.0) | (15.4) | (15.8) | (16.1) | (16.4) | (16.7) | (16.9) | (17.2) | (17.4) | |
| (총지출 대비 비중) | (52.9) | (52.9) | (54.2) | (55.5) | (56.5) | (57.3) | (58.2) | (59.0) | (59.8) | (60.5) | |
| 복지 분야 | 157.3 | 173.3 | 188.8 | 204.2 | 219.6 | 232.6 | 247.5 | 262.8 | 278.6 | 294.7 | 7.2 |
| 공적연금 | 70.7 | 78.6 | 87.7 | 96.6 | 105.9 | 112.4 | 121.1 | 130.0 | 139.7 | 149.5 | 8.7 |
| 사회보험 | 35.2 | 37.2 | 40.4 | 43.1 | 45.7 | 48.4 | 51.2 | 53.8 | 55.9 | 58.2 | 5.7 |
| 공공부조 | 37.6 | 40.8 | 43.7 | 46.9 | 49.7 | 52.8 | 55.5 | 58.4 | 61.5 | 64.7 | 6.2 |
| 기타 | 13.8 | 16.6 | 17.0 | 17.6 | 18.3 | 19.0 | 19.8 | 20.6 | 21.5 | 22.3 | 5.5 |
| 지방이전재원 | 133.0 | 137.6 | 147.6 | 158.6 | 167.2 | 176.2 | 184.9 | 193.9 | 203.2 | 213.0 | 5.4 |
| 이자지출 | 23.7 | 27.2 | 29.1 | 31.0 | 32.8 | 34.8 | 36.4 | 38.0 | 39.2 | 40.3 | 6.0 |
| 기타 의무지출 | 7.3 | 8.3 | 8.3 | 8.1 | 7.8 | 8.1 | 8.4 | 8.7 | 9.0 | 9.4 | 2.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 복지 분야 의무지출

#### (가) 공적연금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급여지출로, 연금별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국민연금급여는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을 다시 세분하여 지출액을 전망한 후 합산한다.[14] 급여유형별 지출액은 해당 유형별 수급자 수에 유형별 평균 단가를 곱하여 전망한다. 이때 수급자 수는 코호트 구조를 바탕으로 가입기간 충족률과 수급자 발생률, 급여 선택률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에서 수급자로 전환되는 사람의 수를 산출하고, 연금수급 개시 시점 이후에는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속수급자 수를 전망한다. 급여별 수급액 단가는 성별·가입기간별 소득과 가입기간, 수급요건 충족률 등을 활용하여 연금 유형별 산식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시점의 단가를 전망한 후 NABO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사학연금급여는 퇴직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로 구성되며, 각각의 급여는 해당 급여별 수급자 수에 수급액 단가를 곱하여 전망한다. 이때 수급자 수는 성별, 직종별(교원·사무직원·병원직원)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연금선택률, 사망률, 유유족률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고, 급여별 단가는 성별, 직종별,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 연금지급률, 가입기간 등을 적용하여 연금수급 개시 시점의 단가를 전망한 후 NABO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공무원연금급여는 퇴직급여(유족급여 포함),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장해연금, 순직유족연금 등), 부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로 구성된다. 퇴직자 수는 인사혁신처 자료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등을 반영하여 가입자 수를 전망한 후, 2022년 결산 기준 직종별·성별·재직기간별·연령별 퇴직률과 공무원 사망률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그리고 퇴직연금선택률, 유유족률 등을 활용하여 퇴직급여별 신규 수급자 수를 전망한다. 급여별 지출액은 2022년 직종별·재직기간별·연령별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각 급여별로 전망한다. 기수급자들이 수급하는 퇴직연금, 유족연금은 NABO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

14) 예를 들어, 노령연금의 경우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연계연금 등으로 구분하여 지출액을 추계한다.

군인연금급여는 공무원연금과 유사하게 퇴직급여(유족급여 포함),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등), 부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로 구성된다. 가입자 수는 국방부의 군인 계급별 정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수급자 수는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를 구분하여 전망한다. 기수급자는 2022년 급여별 수급자 수에 국방부의 군인과 유족의 사망률을 적용하여 전망하며, 신규 수급자는 국방부의 전역 예상 인원에 대한 전망치를 활용한다. 급여별 지출액은 2022년 계급별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각 급여별로 전망한다. 기수급자들이 수급하는 퇴역연금, 유족연금은 NABO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

[표 1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적연금 의무지출

| |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
|---|---|
| 국민연금 | ○ 급여지출액은 노령연금(조기, 특례, 소득활동, 연기, 연계 등), 유족연금, 장애연금, 일시금으로 구분하고, 각 급여유형별로 수급자 수에 급여 단가를 곱하여 추계한 후 합산 |
| 사학연금 | ○ 급여지출액은 연금급여(퇴직연금, 유족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등으로 구분하고, 각 급여유형별로 수급자 수에 급여 단가를 곱하여 추계한 후 합산 |
| 공무원연금 | ○ 급여지출액은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포함), 유족연금(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포함), 퇴직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전망<br>○ 가입자 수는 인사혁신처 자료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하여 전망하고, 퇴직률, 사망률 등을 적용하여 신규 수급자 수 추계<br>– 기수급자 수는 2022년 말 기준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공무원 사망률, 유유족률 등을 적용하여 전망 |
| 군인연금 | ○ 전역자에게 지급되는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전환유족연금 포함)과 퇴직수당, 기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역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구분하여 추계<br>○ 수급자 수는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구분하여 추계하고, 기수급자는 국방부의 사망률을 적용하여 전망하며 신규 수급자는 국방부의 전역 예상 인원 전망을 활용 |

전망 결과, 국민연금급여는 2023년 39.0조원에서 2032년 95.1조원으로 연평균 10.4%, 사학연금급여는 2023년 5.2조원에서 2032년 9.8조원으로 연평균 7.4%, 공무

원연금급여는 2023년 22.6조원에서 2032년 37.7조원으로 연평균 5.9%, 군인연금급여는 2023년 3.8조원에서 2032년 6.8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7] 중기재정전망: 공적연금 의무지출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공적연금 의무지출 | 70.7 | 78.6 | 87.7 | 96.6 | 105.9 | 112.4 | 121.1 | 130.0 | 139.7 | 149.5 | 8.7 |
| 국민연금 | 39.0 | 44.3 | 50.5 | 56.9 | 63.5 | 67.9 | 74.0 | 80.3 | 87.6 | 95.1 | 10.4 |
| 사학연금 | 5.2 | 5.6 | 6.1 | 6.6 | 7.1 | 7.7 | 8.2 | 8.8 | 9.3 | 9.8 | 7.4 |
| 공무원연금 | 22.6 | 24.7 | 26.7 | 28.4 | 30.1 | 31.2 | 33.0 | 34.7 | 36.3 | 37.7 | 5.9 |
| 군인연금 | 3.8 | 4.0 | 4.5 | 4.8 | 5.2 | 5.5 | 5.8 | 6.2 | 6.5 | 6.8 | 6.6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나) 사회보험

사회보험 의무지출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지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및 공무원·교원의 보험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보험별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세부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로 구성된다. 의무지출 사업비는 급여별 수급자 수에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을 곱하여 전망한다. 수급자 수의 경우 구직급여는 NABO 실업자 수 전망치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 등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은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였다.

산재보험 의무지출은 산재보상보험급여(이하 산재보험급여)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급여로 구성된다. 산재보험급여는 급여별 수급자 수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전망하는데, 급여별 신규 수급자 수는 산재보험급여 유형에 따라 재해율, 사망만인율, 신규 수급자 수 증가율 등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계속 수급자 수는 연령별 사망률(통계청의 일반사망률) 등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급여단가는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였다.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공무원·교원의 건강보험부담금으로 구성된다.[15]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일반회계)은 건강보험료 수입과 연동하여 전망하되 건강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 수에 1인당 보수월액 추계액과 납부개월 수(12개월), 해당연도 보험료율 전망치, 징수율을 곱하고 소득월액 보험료와 일부 정책 변화에 따른 보험료 추계액을 가감하여 전망한다. 이때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가입자 유형별, 연령군별 인구 대비 가입자 수 비중을 곱하여 전망한다. 건강보험료 수입 전망에는 2023년 9월 기준으로 세 가지 정책 변화를 반영하였다. 첫째, 건강보험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중 과징금 지원(2023년 예산 기준 130억원) 규정이 삭제되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2023.11.20. 시행 예정)), 이를 전망에 반영하였다. 둘째, 2024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7.09%)된 점과[16] 셋째, 2024년도 예산안이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일반회계)의 국고지원률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2.2%로 상향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정부지원금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과 공무원·교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부담금,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용에 대한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1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부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과 연동하여 전망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전망치를 곱하여 전망한다. 2024년 건강보험료율이 발표됨에 따라 이를 전망에 반영하였으나,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0월 10일 기준 아직 발표 전이므로 최근 3년(2021~2023년) 보험료율의 평균 인상률을 고려하여 전망하였다.

15) 건강보험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건강보험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만 국가재정에 포함된다.
16)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3. 9. 26.)
17)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만 국가재정에 포함된다.

[표 18]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사회보험 의무지출

| |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
|---|---|
| 고용보험 | ○ 급여별 수급자 수에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을 곱하여 추계<br>– 수급자 수는 NABO 실업자 수 전망치(구직급여),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모성보호육아지원) 등에 근거<br>–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은 최근 실적치 반영 |
| 산재보험 | ○ 급여별 수급자 수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추계<br>– 신규 수급자 수는 재해율, 사망만인율, 신규 수급자 수 증가율 등에 근거<br>– 계속 수급자 수는 연령별 사망률(통계청 일반사망률) 등 반영<br>– 지급단가는 최근 실적치 반영 |
| 건강보험 | ○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수입과 연동되며, 건강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 수에 1인당 보수월액 추계액과 납부개월 수(12개월), 해당연도 보험료율 전망치, 징수율을 곱하고 소득월액 보험료 등 제도에 따른 보험료를 가감하여 전망<br>○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율은 각각 최근 3년 평균 인상률과 2024년도 예산안 반영<br>– 건강보험료 인상률: '25년 이후 2.06%씩 인상(단, 건강보험료율 8% 상한 적용)<br>– 국고지원금: (일반회계) 2024년 예산안 비율(12.2%), (기금) 2024년 예산안 금액 유지 가정 |
| 노인장기요양보험 |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과 연동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 추계는 건강보험료 수입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br>–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은 건강보험 재정전망 전망과 동일하게 가정<br>– 장기요양보험료율: 2021~2023년 보험료율의 평균 인상률 적용<br>○ 공무원·교원 등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비율(20%) 적용<br>– 국고지원비율: 2023년 이후 보험료 수입 대비 20% 적용<br>○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최근 실적 추이를 반영하여 연령대별, 등급별, 급여종류별 조성법으로 추계하여 산출 |

전망 결과,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2023년 13.6조원에서 2032년 20.8조원으로 연평균 4.8%, 산재보험 의무지출은 2023년 7.3조원에서 2032년 10.6조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2023년 12.0조원에서 2032년 21.8조원으로 연평균 6.8%,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은 2023년 2.2조원에서 2032년 5.0조원으로 연평균 9.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9] 중기재정전망: 사회보험 의무지출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사회보험 의무지출 | 35.2 | 37.2 | 40.4 | 43.1 | 45.7 | 48.4 | 51.2 | 53.8 | 55.9 | 58.2 | 5.7 |
| 고용보험 | 13.6 | 13.6 | 15.2 | 16.3 | 17.3 | 18.2 | 19.2 | 19.8 | 20.3 | 20.8 | 4.8 |
| 산재보험 | 7.3 | 7.7 | 8.1 | 8.5 | 8.9 | 9.2 | 9.6 | 9.9 | 10.2 | 10.6 | 4.2 |
| 건강보험 | 12.0 | 13.3 | 14.2 | 15.1 | 16.1 | 17.2 | 18.4 | 19.6 | 20.6 | 21.8 | 6.8 |
| 노인장기요양보험 | 2.2 | 2.6 | 2.9 | 3.1 | 3.4 | 3.7 | 4.1 | 4.4 | 4.7 | 5.0 | 9.3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 공공부조

공공부조 의무지출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기초), 장애인연금으로 구성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보건복지부 소관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급여와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 교육부 소관 교육급여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과거 실적치와 거시·인구변수 등을 활용하여 급여항목별 대상자 수 또는 대상 가구 수를 추정한 후, 급여항목별 단가와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전망한다.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의 경우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된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3년 기준 기준연금액(최대 월 급여액)은 323,180원이다. 기초연금의 재정전망은 가구 및 수급자 유형을 구분(1인 및 단독·부부수급, 무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수급, 전액·감액 등)하여 유형별로 수급자 수에 1인당 평균 수급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수급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65세 인구를 바탕으로 수급률을 적용하여 전체 수급자 수를 추정한 후, 각 유형별 수급자 비중을 적용하여 유형별 수급자 수를 추정한다. 유형별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유형별 감액률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장애수당(기초)은 18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가 아닌 장애인(종전 3~6급)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애수당(기초)의 재정전망은 유형별 수급자 수에 유형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데, 이때 유형은 재가 수급 장애인과 시설급여 수급 장애인으로

나눈다. 수급자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18세 이상 인구에 장애발생률과 수급대상자 비율을 적용한 후, 재가 급여 수급 장애인 비율과 시설급여 수급 장애인 비율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유형별 단가는 유형별 1인당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전망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인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 2급 및 3급 중복)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연령집단별·유형별 수급자 수에 급여 단가를 곱하여 전망한다. 수급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18세 이상 인구에 중증장애인 비율과 수급자 비율을 적용한 후, 연령집단별·유형별 비중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이때 연령집단은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이며, 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재가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시설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특례 등으로 구분된다. 급여 단가는 기초급여의 경우 NABO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전망하되 부부 수급자에게는 감액률을 적용하여 전망하고, 부가급여의 경우 급여 단가가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한다.

[표 20]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공부조 의무지출

| |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
|---|---|
| 기초생활 보장 |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수 및 시설수급자 수에 연간 급여단가를 곱하여 추계<br>○ (의료급여) 종별(1종, 2종, 타법의료급여) 수급자 수에 연간 종별 단가,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추계<br>○ (교육급여)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전망인구에 급여항목별·학교급별 수급자 비율을 곱하여 수급자 수를 추정한 후 지원단가와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전망<br>○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수급자 수에 급여비 단가와 수급률을 곱하여 추산<br>○ (해산장제급여) 수급자 수에 급여단가를 곱하여 추계 |
| 기초연금 | ○ 유형별(가구 유형, 공적연금 수급유형, 전액·감액수급 등으로 구분) 수급자 수에 평균 수급액을 적용하여 추계 |
| 장애수당 (기초) | ○ 유형별(재가·시설) 수급자 수에 유형별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 |
| 장애인연금 | ○ 연령집단별·유형별(재가, 시설, 차상위, 차상위 초과, 특례 등) 수급자 수에 각각의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 |

전망 결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2023년 18.0조원에서 2032년 30.2조원으로 연평균 5.9%, 기초연금은 2023년 18.6조원에서 2032년 33.3조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할 전망이다. 장애수당(기초)는 2023년 0.1조원에서 2032년 0.2조원으로 연평균 1.9%, 장애인연금은 2023년 0.9조원에서 2032년 1.0조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전망이다.

[표 21] 중기재정전망: 공공부조 의무지출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공공부조 의무지출 | 37.6 | 40.8 | 43.7 | 46.9 | 49.7 | 52.8 | 55.5 | 58.4 | 61.5 | 64.7 | 6.2 |
| 기초생활보장 급여 | 18.0 | 19.4 | 20.6 | 22.0 | 23.3 | 24.7 | 25.9 | 27.2 | 28.7 | 30.2 | 5.9 |
| 기초연금 | 18.6 | 20.3 | 22.0 | 23.8 | 25.3 | 27.0 | 28.4 | 30.1 | 31.7 | 33.3 | 6.7 |
| 장애수당(기초) | 0.1 | 0.1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1.9 |
| 장애인연금 | 0.9 | 0.9 | 0.9 | 0.9 | 0.9 | 1.0 | 1.0 | 1.0 | 1.0 | 1.0 | 2.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라) 기타 복지지출

기타 복지지출은 보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부모급여,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보훈 분야 의무지출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보상금,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보철구지급, 고엽제환자검진,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보상금과 수당은 대상·훈격·급수별로 대상자 수를 산출한 후[18] 지급단가를 추정하여 이를 곱하여 전망한다.[19]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 대상자 및 단가는 결산 실적을 바탕으로 장기추계모형[20] 등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대상자 수의 경우 시계열

18) 보상금별 대상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9년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측모형 개발 및 보훈급여금 전망」의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19) 이때, 보상금 및 수당 단가의 인상률은 정책변수로서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지 않으며, 보상금, 간호수당, 6.25자녀수당은 최근 5년 간 평균인상률만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2023년에 각각 4만원씩 인상되었고, 2024년에는 각각 3만원씩 인상 예정으로 이후는 최근 5년 간 평균인상률만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0)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 사업의 대상자 및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2년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인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사업 장기전망 모형연구」의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전망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지급단가는 2023년 대비 10% 인상한 금액을 반영하며, 지급개월은 전망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0~2세반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연장보육료 등으로 구성된다. 영유아보육료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영유아 수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이용률 등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를 연령별·시설유형별로 각각 추정한 후 1인당 지원단가와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전망한다. 2023년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0세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예산의 일부가 2023년에, 1세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예산의 일부가 2024년에 각각 부모급여 예산으로 통합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2024년부터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가 신설되어 이를 포함하였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수급자 수를 추정한 후, 1인당 지원단가인 월 10만원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급여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수급자 수를 추정한 후 0세와 1세에 대한 1인당 지원단가를 각각 적용하여 전망한다.

보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제외한 기타 복지지출은 대지급금 지급,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3~2027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으로 하며, 2028년 이후는 NABO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2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복지지출

| |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
|---|---|
| 보훈 | ○ 보상금과 수당은 대상·훈격·급수별로 대상자 수를 산출한 후 지급단가를 추정한 후 이를 곱하여 전망<br>○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 대상자 및 단가는 장기추계모형 적용<br>○ 제대군인전직지원금 대상자는 시계열 분석 모형 적용, 지급단가는 2023년 대비 10% 인상한 금액을 반영하고 지급개월은 동일하게 유지 |
| 영유아 보육료 |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연령별 영유아 수에 인건비 지원 시설 및 미지원 시설 이용률 등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를 연령별·시설유형별로 각각 추정<br>○ 연령별·시설유형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에 지원단가와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전망 |
| 아동수당 |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수급자 수 추정<br>○ 수급자 수에 1인당 지원단가인 월 10만원을 적용하여 추계 |
| 부모급여 |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수급자 수 추정<br>○ 0세 및 1세 수급자 수에 연령별 1인당 지원단가를 각각 적용하여 추계 |
| 기타 | ○ 2023~2027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으로 하며, 2028년 이후는 NABO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전망 결과, 보훈 분야 의무지출은 2023년 5.2조원에서 2032년 7.3조원으로 연평균 3.9%, 영유아보육료는 2023년 3.0조원에서 2032년 3.8조원으로 2.8% 증가하나, 아동수당은 2023년 2.3조원에서 2032년 2.0조원으로 연평균 1.6% 감소할 전망이다. 2024년부터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부모급여는 2024년 2.9조원에서 2032년 3.9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23] 중기재정전망: 기타 복지지출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기타 복지지출 | 13.8 | 16.6 | 17.0 | 17.6 | 18.3 | 19.0 | 19.8 | 20.6 | 21.5 | 22.3 | 5.5 |
| 보훈 | 5.2 | 5.4 | 5.6 | 5.8 | 6.0 | 6.3 | 6.5 | 6.8 | 7.0 | 7.3 | 3.9 |
| 영유아보육료 | 3.0 | 2.6 | 2.6 | 2.6 | 2.8 | 3.0 | 3.2 | 3.4 | 3.6 | 3.8 | 2.8 |
| 아동수당 | 2.3 | 2.1 | 2.0 | 1.9 | 1.8 | 1.8 | 1.8 | 1.9 | 1.9 | 2.0 | -1.6 |
| 부모급여 | — | 2.9 | 2.9 | 3.1 | 3.2 | 3.4 | 3.5 | 3.7 | 3.8 | 3.9 | — |
| 기타 | 3.4 | 3.6 | 3.9 | 4.2 | 4.4 | 4.6 | 4.8 | 4.9 | 5.1 | 5.3 | 5.2 |

주: 부모급여(2022년 시행, 2023년 예산 1.6조원)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하게 2024년부터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 지방이전재원

의무지출 성격의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구성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재원은 내국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제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및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한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중기재정전망에 근거하며, 2023년의 경우 NABO 전망에 따른 세수 결손(△60.2조원)을 고려하여 전망하였다.[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재원은 내국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제외)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22]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및 교육세는 중기재정전망에 근거하며, 2023년의 경우 NABO 전망에 따른 세수 결손(△60.2조원)을 고려하여 전망하였다.

21) 2023년의 경우 2022년 지방교부세 정산분(0.4조원)을 포함하였다.

22) 이때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 참고). 이때 차감 항목과 관련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의 재정소요만을 반영한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재원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등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금액으로 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의 재정소요만을 반영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으로, 동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마찬가지로 2024년까지의 재정소요만을 반영한다.

[표 24]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지방이전재원

| |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
|---|---|
| 지방교부세 | ○ 내국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제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및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산출<br>– 2022년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2023년에 지출되었으므로 2023년 전망치에 포함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내국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제외)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로 산출<br>–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은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므로 2024년 전망치에 포함 |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 (2023~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 반영<br>○ (2026~2032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일몰(2025년 12월 31일)로 지출 미발생 |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 (2023~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 반영<br>○ (2025~203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2024년 12월 31일)로 지출 미발생 |

전망 결과, 지방교부세는 2023년 64.3조원에서 2032년 102.6조원으로 연평균 5.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3년 64.4조원에서 2032년 110.3조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지원근거 법률(조항)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각각 2025년과 2024년까지만 전망한다.

[표 25] 중기재정전망: 지방이전재원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지방이전재원 | 133.0 | 137.6 | 147.6 | 158.6 | 167.2 | 176.2 | 184.9 | 193.9 | 203.2 | 213.0 | 5.4 |
| 지방교부세 | 64.3 | 65.7 | 71.0 | 76.0 | 80.2 | 84.6 | 88.9 | 93.3 | 97.8 | 102.6 | 5.3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64.4 | 67.7 | 73.4 | 82.6 | 87.0 | 91.6 | 96.0 | 100.6 | 105.4 | 110.3 | 6.2 |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3.5 | 3.2 | 3.2 | — | — | — | — | — | — | — | — |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0.9 | 0.9 | — | — | — | — | — | — | — |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3) 이자지출

이자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지출, 주택도시기금의 국민주택채 이자지출, 기타 이자지출로 구성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지출은 기발행 국고채의 이자지출과 신규 발행 국고채의 이자지출로 구분하여 전망한다. 신규 발행 국고채는 관리재정수지 전망치의 일정 비율로 추정하는데, 동 비율은 2024~2027년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산출한 비율(88.9~98.2%)로 하며 2028년 이후는 100%로 가정한다. 신규 발행 국고채의 이자율은 발행 시점의 국고채 이자율 전망치를 적용하는데, NABO 국고채금리(3년 만기)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주택도시기금의 국민주택채 이자지출은 1종 국민주택채권(5년 만기)의 발행금액과 5년 만기 시의 이자율에 대한 전망치를 곱하여 전망한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이자지출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행된 국민주택채권과 이자율에 따라 결정되며, 2028년 이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발행 금액을 반영하여 전망한다.

기타 이자지출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지출, 청약저축 이자지급,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구분된다.[23] 우체국예금 수신고(평잔), 청약저축 수입액,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발행액 등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한 후 각각의 추세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이자지출에 반영하는 이자율은 NABO 회사채금리(3년, AA-) 또는 국고채금리(3년)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다.

23) 그밖에 기타 이자지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등이 있는데, 2023~2027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으로 하며, 2028년 이후는 2027년 금액과 동일하게 가정한다.

[표 2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이자지출

| |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
|---|---|
| 국고채 이자지출 | ○ 국고채 잔액은 기발행 국고채와 신규발행 국고채로 구분<br>– 전망 시점 보유 국고채는 기발행 국고채로 분류<br>– 신규 발행 국고채는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 전망치의 일정 비율로 발행한다고 가정(2024년 88.9%, 2025년 89.6%, 2026년 97.2%, 2027년 98.2%, 2028년 이후는 100% 가정)<br>○ 신규 발행 국고채의 이자율은 발행 시점의 국고채 이자율 전망치 적용<br>– 국고채 이자율 전망치는 NABO 국고채금리(3년 만기)에 근거하여 추정 |
| 국민주택채 이자지출 | ○ (2023~2027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및 해당 이자율에 따라 전망<br>○ (2028~203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발행 계획 반영 |
| 기타 이자지출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지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우체국예금 수신고(평잔) 반영 후 추세 반영, 이자율은 NABO 회사채금리(3년, AA-)에 근거하여 추정<br>○ (청약저축 이자지급)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청약저축 수입액 반영 후 추세 반영, 이자율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원금상환액 대비 이자상환액 비율 적용<br>○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발행액 반영 후 추세 반영, 이자율은 NABO 국고채금리(3년)에 근거하여 추정 |

전망 결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지출은 2023년 19.6조원에서 2032년 35.6조원으로 연평균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4] 국고채 이자지출은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누적 등으로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기금의 국민주택채 이자지출은 2023년 1.4조원에서 2032년 1.2조원으로 연평균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 이자지출은 2023년 2.8조원에서 2032년 3.4조원으로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4) 2023년의 경우 정부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재원(20조원 추정)을 활용할 계획이므로 외국환평형기금의 국고채 발행 및 상환 변동에 따른 이자지출 추가분을 반영하였다.

[표 27] 중기재정전망: 이자지출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이자지출 | 23.7 | 27.2 | 29.1 | 31.0 | 32.8 | 34.8 | 36.4 | 38.0 | 39.2 | 40.3 | 6.0 |
| 국고채 이자지출 | 19.6 | 22.0 | 24.3 | 26.3 | 28.2 | 30.0 | 31.6 | 33.1 | 34.5 | 35.6 | 6.9 |
| 국민주택채 이자지출 | 1.4 | 1.1 | 1.0 | 1.0 | 1.0 | 1.1 | 1.1 | 1.2 | 1.2 | 1.2 | -1.4 |
| 기타 | 2.8 | 4.1 | 3.9 | 3.8 | 3.7 | 3.7 | 3.7 | 3.6 | 3.5 | 3.4 | 2.3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4) 기타 의무지출

기타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의무지출로, 공익기능증진 직불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2023~2027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2028년 이후는 NABO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전망 결과, 2023년 7.3조원에서 2032년 9.4조원으로 연평균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8] 중기재정전망: 기타 의무지출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기타 의무지출 | 7.3 | 8.3 | 8.3 | 8.1 | 7.8 | 8.1 | 8.4 | 8.7 | 9.0 | 9.4 | 2.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나.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의무지출과 달리 그 규모가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향후 재량지출 수준을 전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제한다.

먼저, 2023년의 경우 본예산은 확정되었으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지출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망한다.[25] 정부는 올해 59.1조원(정부 세수 재추계 기준)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므로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

25) NABO의 재량지출에 대한 중기재정전망은 전망 시작연도의 경우 국회 확정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2023년의 경우는 세수 결손 상황을 고려하여 전망하였다.

은 본예산보다 감액할 계획이나, 여유재원(28조원, 세계잉여금 4조원 및 기금 여유재원 24조원)을 확보하여 "통상의 지출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26] 다시 말해,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28조원의 지출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NABO의 총수입 및 의무지출 전망치에 근거하여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본예산 대비 28조원 확대되는 수준(△58.2조원 → △86.2조원)에서 재량지출을 전망하였다. 따라서 2023년 재량지출 전망치는 2023년 본예산(298.4조원)보다 12.2조원 감소한 286.2조원으로 예상된다.

2024년의 재량지출은 예산안(308.7조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2025년 이후는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최근 증가한 재량지출 수준(2024년 예산안 기준 GDP 대비 13.4%)[27]의 실질가치가 향후 전망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한 것이다.

[표 29]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재량지출

| |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
|---|---|
| 재량지출 | ○ (2023년) 세수 결손 규모와 정부의 지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전망<br>○ (2024년) 2024년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망<br>○ (2025~2032년)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 |

전망 결과, 재량지출은 2023년 286.2조원에서 2032년 364.2조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12.9%에서 2032년 11.4% 수준으로 하락하며, 총지출에서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7.1%에서 2032년 39.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0] 중기재정전망: 재량지출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재량지출 | 286.2 | 308.7 | 315.5 | 322.4 | 329.2 | 336.1 | 343.2 | 350.0 | 357.0 | 364.2 | 2.7 |
| (GDP 대비 비율) | (12.9) | (13.4) | (13.0) | (12.7) | (12.4) | (12.2) | (12.0) | (11.8) | (11.6) | (11.4) | |
| (총지출 대비 비중) | (47.1) | (47.1) | (45.8) | (44.5) | (43.5) | (42.7) | (41.8) | (41.0) | (40.2) | (39.5)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6) 기획재정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2023. 9. 17.

27) GDP 대비 비율 산출에 사용한 GDP는 NABO 전망치에 근거한 것이며,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의 2012~2019년 평균은 11.7% 수준이다.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포함할 경우 2012~2022년 평균은 12.7%로 상승한다.

## [참고] 재량지출에 대한 전망 방식 변경

정부가 총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12년부터인데, 2012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커 정부의 재량지출 계획이 단순히 정부가 표방한 정책의지만으로 실현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 따라서 재량지출에 대한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는 이전과 달리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지 않는다.

재량지출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계획 비교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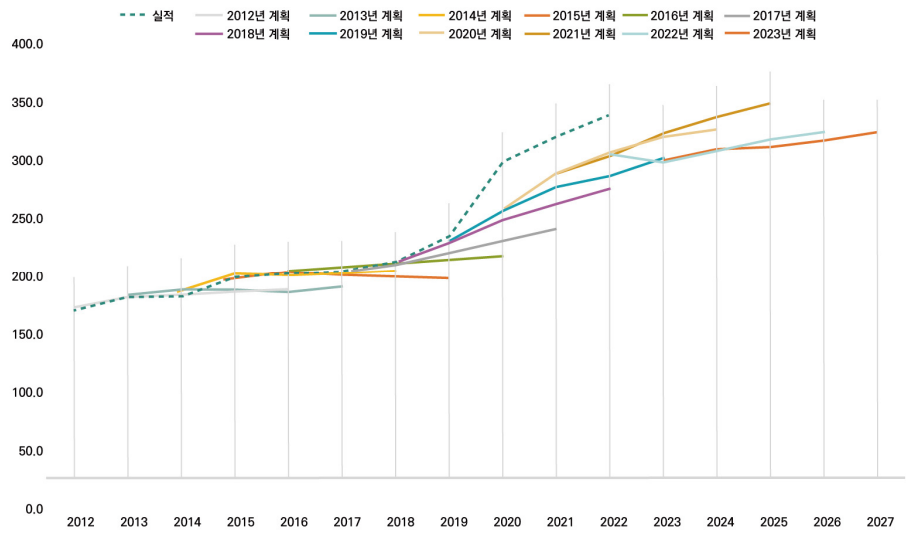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재량지출 실적 | 170.0 | 181.2 | 181.9 | 199.3 | 201.9 | 203.6 | 213.1 | 234.4 | 296.8 | 319.0 | 338.1 |
| 2012년 계획 | 173.5 | 181.9 | 183.3 | 186.4 | 188.6 | | | | | | |
| 2013년 계획 | | 183.6 | 188.9 | 187.6 | 189.6 | 193.5 | | | | | |
| 2014년 계획 | | | 188.6 | 202.0 | 201.4 | 203.3 | 204.3 | | | | |
| 2015년 계획 | | | | 202.8 | 203.3 | 201.8 | 199.7 | 197.3 | | | |
| 2016년 계획 | | | | | 203.8 | 205.1 | 209.5 | 213.3 | 216.8 | | |
| 2017년 계획 | | | | | | 203.5 | 211.0 | 220.0 | 230.2 | 240.9 | |
| 2018년 계획 | | | | | | | 211.9 | 228.8 | 248.3 | 262.3 | 274.7 |
| 2019년 계획 | | | | | | | | 230.3 | 257.8 | 276.1 | 285.8 |
| 2020년 계획 | | | | | | | | | 256.6 | 288.5 | 306.6 |
| 2021년 계획 | | | | | | | | | | 291.9 | 303.3 |
| 2022년 계획 | | | | | | | | | | | 304.5 |

주: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첫 해는 본예산 기준이며, 두 번째 해는 예산안임
2. 음영 부분은 계획보다 실적이 높았던 연도를 의미함(첫 해는 제외함)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각연도)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2016년 이후의 계획은 계획 기간 후반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적이 계획보다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재량지출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계획 비교

(단위: 조원)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첫 해는 본예산 기준이며, 두 번째 해는 예산안임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각연도)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4. 재정수지 전망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한다.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36.4조원 적자(GDP 대비 △1.6%), 2024년 50.6조원 적자(△2.2%), 2032년 34.7조원 적자(△1.1%)로 전망된다. 2024년의 경우 총수입은 전년 대비 5.8% 증가하나, 총지출은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통합재정수지가 악화된다. 2025년 이후는 국세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은 경상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4.6%로 증가할 전망이나, 총지출 증가율(4.2%)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적자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 규모는 2023년 49.8조원(GDP 대비 2.3%)에서 2032년 24.5조원(0.8%)으로 전망되는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등에 따른 기여금 수입 증가 둔화 및 급여지출 증가로 흑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86.2조원 적자(GDP 대비 △3.9%), 2024년 99.9조원 적자(△4.3%), 2032년 59.2조원 적자(△1.8%)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7년 이후에 △3% 미만으로 전망된다.

[표 31]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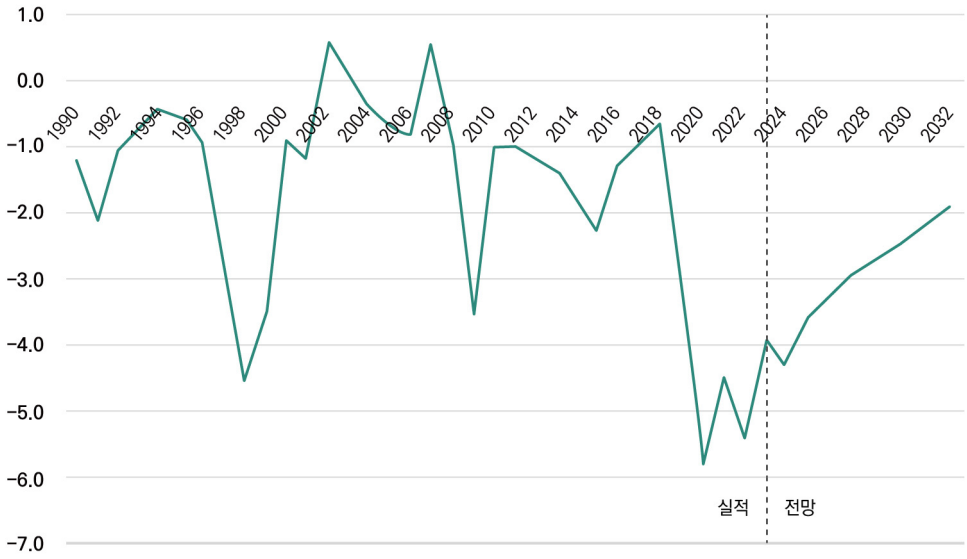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
| 통합재정수지 | -36.4 | -50.6 | -39.9 | -40.9 | -39.8 | -38.2 | -37.3 | -36.7 | -35.9 | -34.7 |
| (GDP 대비 비율) | (-1.6) | (-2.2) | (-1.6) | (-1.6) | (-1.5) | (-1.4) | (-1.3) | (-1.2) | (-1.2) | (-1.1)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49.8 | 49.3 | 45.7 | 42.5 | 39.3 | 38.4 | 35.6 | 32.6 | 28.8 | 24.5 |
| (GDP 대비 비율) | (2.3) | (2.1) | (1.9) | (1.7) | (1.5) | (1.4) | (1.2) | (1.1) | (0.9) | (0.8) |
| 관리재정수지 | -86.2 | -99.9 | -85.7 | -83.3 | -79.1 | -76.6 | -72.9 | -69.3 | -64.6 | -59.2 |
| (GDP 대비 비율) | (-3.9) | (-4.3) | (-3.5) | (-3.3) | (-3.0) | (-2.8) | (-2.5) | (-2.3) | (-2.1) | (-1.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5] 관리재정수지 비율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 [참고] 8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 전망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기금수지는 2023년 48.8조원 흑자에서 2032년 23.1조원 흑자로 전망기간 흑자 규모 감소

중기재정전망: 국민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수 입 | 88.8 | 91.8 | 95.3 | 98.7 | 102.5 | 106.3 | 109.8 | 113.2 | 116.5 | 119.6 | 3.4 |
| 지 출 | 40.0 | 45.2 | 51.5 | 57.9 | 64.7 | 69.1 | 75.2 | 81.6 | 89.0 | 96.5 | 10.3 |
| 수 지 | 48.8 | 46.5 | 43.8 | 40.8 | 37.8 | 37.2 | 34.6 | 31.6 | 27.5 | 23.1 | |
| 적립금 | 990.4 | 1,049.6 | 1,102.8 | 1,153.6 | 1,202.1 | 1,250.4 | 1,296.6 | 1,340.5 | 1,380.8 | 1,417.1 | 4.1 |

주: 각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지출·수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적립금은 국고지원, 예수금, 예수원금(이자)상환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 사학연금

○ 사학연금기금수지는 2023년 0.6조원 적자에서 2032년 2.1조원 적자로 전망기간 적자 규모 증가

– 다만, 국가부담 보험료 등 내부거래를 포함할 경우 2029년에 적자 전환 예상

중기재정전망: 사학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수 입 | 5.5 | 6.0 | 6.4 | 6.7 | 7.0 | 7.3 | 7.6 | 7.9 | 8.2 | 8.5 | 4.9 |
| 지 출 | 6.1 | 6.5 | 6.9 | 7.4 | 8.0 | 8.5 | 9.0 | 9.5 | 10.0 | 10.6 | 6.2 |
| 수 지 | -0.6 | -0.5 | -0.6 | -0.7 | -1.0 | -1.2 | -1.4 | -1.7 | -1.9 | -2.1 | |
| 적립금 | 25.5 | 26.3 | 27.0 | 27.5 | 27.8 | 27.9 | 27.7 | 27.4 | 26.7 | 25.8 | 0.1 |

주: 1. 각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지출·수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적립금은 국고지원, 예수금, 예수원금(이자)상환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

2. 내부거래인 국가부담금(전입금)을 포함하여 수지를 산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수지와 다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기금수지는 2023년 4.7조원 적자에서 2032년 9.8조원 적자로 전망기간 동안 적자 규모 확대

중기재정전망: 공무원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수 입 | 19.8 | 21.6 | 22.7 | 24.1 | 25.5 | 26.4 | 27.8 | 28.5 | 29.3 | 30.1 | 4.8 |
| 지 출 | 24.4 | 26.6 | 28.6 | 30.3 | 32.1 | 33.2 | 35.1 | 36.8 | 38.4 | 39.9 | 5.6 |
| 수 지 | -4.7 | -5.0 | -5.9 | -6.2 | -6.6 | -6.8 | -7.3 | -8.3 | -9.2 | -9.8 | |
| 적립금 | 15.5 | 15.6 | 15.9 | 16.0 | 16.3 | 16.4 | 16.7 | 16.8 | 17.1 | 17.2 | 1.2 |

주: 1. 각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지출·수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적립금은 국고지원, 예수금, 예수원금(이자)상환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
2. 공무원연금의 연금재정운영방식은 부과방식이고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금을 보유 중이며, 국민연금의 적립금과 기능, 역할 등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 군인연금

○ 군인연금기금수지는 2023년 3.1조원 적자에서 2032년 5.9조원 적자로 전망기간 동안 적자 규모 확대

중기재정전망: 군인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수 입 | 0.8 | 0.8 | 0.8 | 0.8 | 0.8 | 0.9 | 0.9 | 0.9 | 0.9 | 0.9 | 1.9 |
| 지 출 | 3.8 | 4.0 | 4.5 | 4.8 | 5.2 | 5.5 | 5.8 | 6.2 | 6.5 | 6.8 | 6.6 |
| 수 지 | -3.1 | -3.2 | -3.7 | -4.0 | -4.3 | -4.7 | -5.0 | -5.3 | -5.6 | -5.9 | |
| 적립금 | 1.2 | 1.3 | 1.3 | 1.3 | 1.3 | 1.3 | 1.3 | 1.4 | 1.4 | 1.4 | 1.4 |

주: 1. 각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지출·수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적립금은 국고지원, 예수금, 예수원금(이자)상환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
2. 군인연금의 연금재정운영방식은 부과방식이고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금을 보유 중이며, 국민연금의 적립금과 기능, 역할 등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고용보험

○ 고용보험기금수지는 2023년 1.0조원 흑자에서 2032년에는 1.9조원 흑자 전망

중기재정전망: 고용보험기금수지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수 입 | 17.9 | 18.7 | 19.6 | 20.5 | 21.4 | 22.4 | 23.3 | 24.1 | 25.1 | 26.0 | 4.3 |
| 지 출 | 16.9 | 16.1 | 17.8 | 19.0 | 20.0 | 21.1 | 22.2 | 23.0 | 23.5 | 24.2 | 4.1 |
| 수 지 | 1.0 | 2.6 | 1.8 | 1.5 | 1.4 | 1.3 | 1.2 | 1.2 | 1.6 | 1.9 | |
| 적립금 | 7.5 | 9.3 | 10.4 | 11.6 | 13.2 | 14.7 | 16.2 | 13.4 | 11.9 | 14.2 | 7.4 |

주: 각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지출·수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적립금은 국고지원, 예수금, 예수원금(이자)상환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산재보험

○ 산재보험기금수지는 2023년 0.7조원 흑자에서 2032년에는 1.6조원 흑자로 흑자 규모 확대

중기재정전망: 산재보험기금수지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수 입 | 9.8 | 10.3 | 10.8 | 11.3 | 11.9 | 12.4 | 12.9 | 13.4 | 13.9 | 14.4 | 4.4 |
| 지 출 | 9.1 | 9.7 | 10.1 | 10.5 | 10.8 | 11.2 | 11.6 | 12.0 | 12.4 | 12.8 | 3.8 |
| 수 지 | 0.7 | 0.6 | 0.7 | 0.9 | 1.1 | 1.2 | 1.3 | 1.4 | 1.5 | 1.6 | |
| 적립금 | 23.6 | 24.4 | 25.2 | 26.2 | 27.3 | 28.5 | 29.9 | 31.3 | 32.9 | 34.6 | 4.3 |

주: 각 사회보험 기금의 수입·지출·수지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총지출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나, 적립금은 국고지원, 예수금, 예수원금(이자)상환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건강보험[28]

○ 건강보험은 2024년에 적자 전환 후 2028년에 누적 준비금 소진 예상

–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 9.) 및 건강보험료율 상한(8%) 도달(2030년) 등에 따른 수입 증가분 감소,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자 지속

중기재정전망: 건강보험수지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수 입 | 93.3 | 99.5 | 107.2 | 115.7 | 124.8 | 134.6 | 145.3 | 156.7 | 166.1 | 176.4 | 7.3 |
| 지 출 | 92.0 | 100.2 | 109.7 | 121.6 | 132.7 | 144.4 | 154.8 | 166.1 | 180.1 | 195.1 | 8.7 |
| 수 지 | 1.3 | -0.7 | -2.5 | -5.9 | -7.9 | -9.8 | -9.5 | -9.4 | -14.0 | -18.8 | |
| 누적준비금 | 25.2 | 24.5 | 22.0 | 16.1 | 8.2 | | | | | | |

주: 2023년,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기결정된 7.09%, 2025~2032년은 매년 2.06%(최근 3년 평균)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2030년부터 8% 상한 유지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노인장기요양보험[29]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6년에 적자 전환 후 2031년 준비금 소진 예상

– 건강보험요율 상한(8%) 도달(2030년)과 수입에 비해 높은 지출 증가율로 수지 악화 예상

중기재정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수 입 | 15.1 | 16.6 | 18.4 | 20.2 | 22.1 | 24.1 | 26.2 | 28.4 | 30.3 | 32.4 | 8.9 |
| 지 출 | 14.6 | 16.3 | 18.2 | 20.3 | 22.4 | 24.6 | 27.0 | 29.3 | 32.1 | 34.7 | 9.0 |
| 수 지 | 0.5 | 0.2 | 0.1 | -0.1 | -0.3 | -0.5 | -0.8 | -0.9 | -1.8 | -2.3 | |
| 준비금 | 3.9 | 4.1 | 4.3 | 4.1 | 3.8 | 3.3 | 2.5 | 1.6 | | | |

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은 기 결정된 0.91%, 2024년부터는 2021~2023년 보험료율 인상 추이에 따라 연평균 2.93%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5. 국가채무 전망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30]로 구분할 수 있고, 성질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상환 시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하며, 일반회계 적자보전, 공적자금 국채상환 등이 있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를 의미하며,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이 있다.

총수입·총지출 전망에 근거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적자국채) 규모를 추정한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제외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그리고 지방정부 순채무는 2023~2027년 기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 금액과 동일하게 가정하며, 2028년 이후는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31]

---

28) 건강보험의 전망 결과는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일반회계 국고지원율과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고지원금이 추계기간 중 유지된다고 가정한 재정전망 결과이며, 현행 유지(결산 상 실국고지원율)를 가정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23. 10.)과는 소폭 차이가 있다.

2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망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에 연동된 건강보험료 수입 중 국가지원금에 대하여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일반회계 국고지원율과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고지원금이 추계기간 중 유지된다고 가정한 재정전망 결과이며, 현행 유지(결산 상 실국고지원율)를 가정하여 산출된 건강보험료 수입을 적용한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23. 10.)과는 소폭 차이가 있다.

30) 지방정부 순채무는 지방정부 지방채 및 지방교육채 잔액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 잔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31) 다만, 적자성 채무 중 규모가 작은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7년 수준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3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국가채무

| |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
|---|---|
| 국가채무 | ○ 적자성 채무<br>– (일반회계 적자보전) 관리재정수지의 일정 비율*만큼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가정<br>*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대비 적자성 국채 증가분의 비율(2024년 88.9%, 2025년 89.6%, 2026년 97.2%, 2027년 98.2%, 2028년 이후는 100% 가정)<br>–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2023~2027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 반영, 2028년 이후는 2027년 수준 유지<br>– (지방정부 순채무) 2023~2027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 반영, 2028년 이후는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br>○ 금융성 채무<br>– 2023~2027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 금액 반영, 2028년 이후는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 |

전망 결과, 국가채무는 2023년 1,128.8조원(GDP 대비 51.1%)에서 2032년 1,901.8조원(59.4%)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2023년 683.8조원(GDP 대비 30.9%)에서 2032년 1,324.0조원(41.4%)으로 연평균 7.6%, 금융성 채무는 2023년 410.8조원(GDP 대비 18.6%)에서 2032년 541.4조원(16.9%)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2023년 34.2조원(GDP 대비 1.5%)에서 2032년 36.4조원(1.1%)으로 연평균 0.7% 증가할 전망이다.

[표 33]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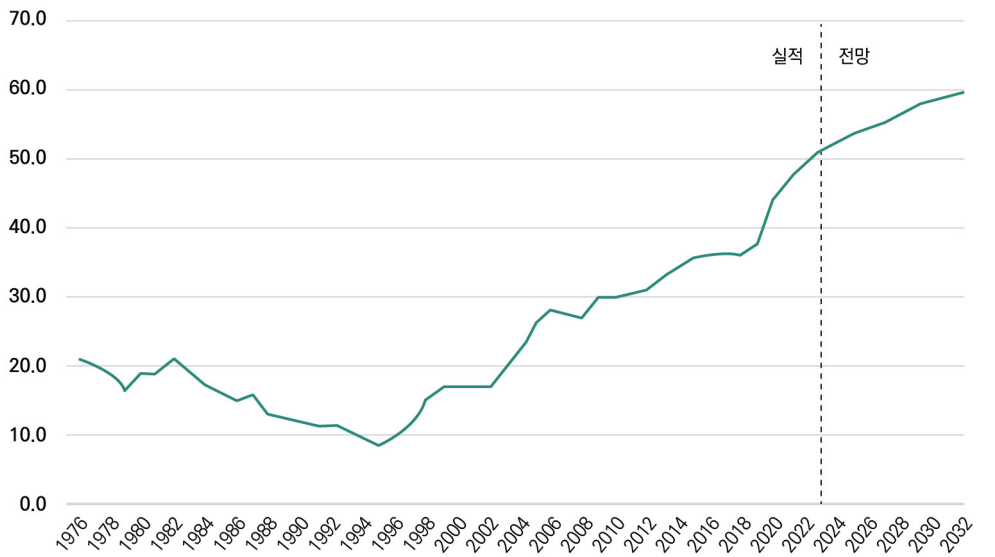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국가채무(A+B) | 1,128.8 | 1,203.2 | 1,292.4 | 1,379.3 | 1,463.2 | 1,555.0 | 1,647.4 | 1,736.6 | 1,821.6 | 1,901.8 | 6.0 |
| (GDP 대비 비율) | (51.1) | (52.2) | (53.4) | (54.3) | (55.2) | (56.4) | (57.5) | (58.4) | (59.0) | (59.4) | |
| 중앙정부 채무(A) | 1,094.6 | 1,170.4 | 1,261.1 | 1,349.1 | 1,433.0 | 1,523.6 | 1,614.8 | 1,702.8 | 1,786.5 | 1,865.4 | 6.1 |
| (GDP 대비 비율) | (49.5) | (50.8) | (52.1) | (53.2) | (54.1) | (55.3) | (56.4) | (57.3) | (57.9) | (58.3) | |
| 적자성 채무 | 683.8 | 766.7 | 837.6 | 912.8 | 984.0 | 1,057.2 | 1,130.4 | 1,199.8 | 1,264.7 | 1,324.0 | 7.6 |
| (GDP 대비 비율) | (30.9) | (33.3) | (34.6) | (36.0) | (37.1) | (38.3) | (39.5) | (40.3) | (41.0) | (41.4) | |
| 금융성 채무 | 410.8 | 403.7 | 423.5 | 436.3 | 449.0 | 466.4 | 484.4 | 502.9 | 521.8 | 541.4 | 3.1 |
| (GDP 대비 비율) | (18.6) | (17.5) | (17.5) | (17.2) | (16.9) | (16.9) | (16.9) | (16.9) | (16.9) | (16.9) | |
| 지방정부 순채무(B) | 34.2 | 32.8 | 31.3 | 30.1 | 30.2 | 31.4 | 32.6 | 33.8 | 35.1 | 36.4 | 0.7 |
| (GDP 대비 비율) | (1.5) | (1.4) | (1.3) | (1.2) | (1.1) | (1.1) | (1.1) | (1.1) | (1.1) | (1.1)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6] 국가채무 비율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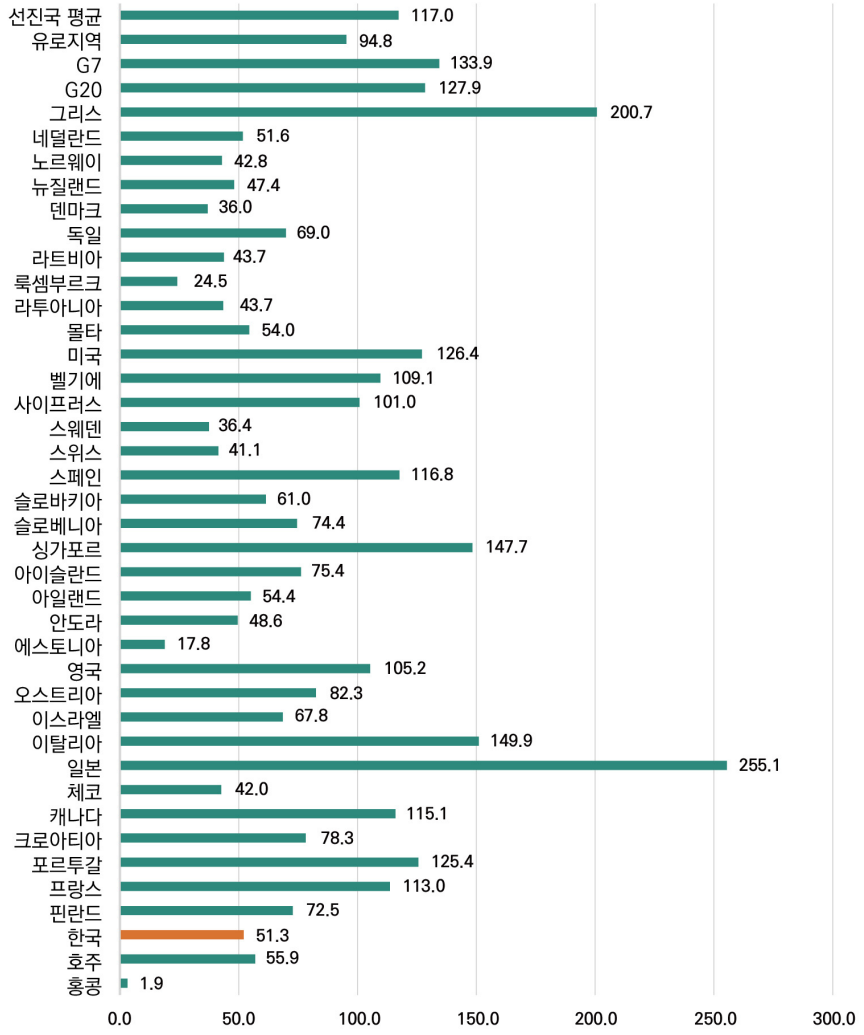
## [참고] 일반정부 부채(D2) 국제 비교: 2021년 기준

❑ IMF의 선진국(Advanced Economies)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현황

○ 일반정부 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및 비영리공공기관 포괄

– 중기재정전망의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 기준이며, 포괄범위 상이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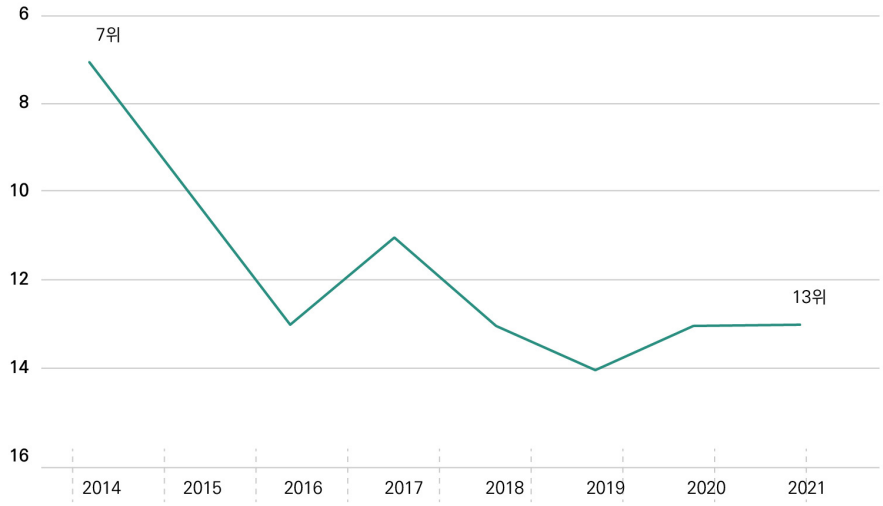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3. 10.

❑ IMF에 따르면, 선진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103.7%에서 2019년 104.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122.9%, 2021년 117.0% 수준

- ○ 한국의 경우 2014년 39.7%에서 2019년 42.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48.7%, 2021년 51.3%
- ○ 한국의 부채 비율 순위는 2014년 기준 7위로 선진국 37개국* 중 일곱 번째로 부채 비율이 좋았으나(낮았으나), 2021년에는 13위로 하락

*IMF의 선진국(Advanced Economies)에는 총 41개국이 포함되나, 부채 비율 자료는 마카오, 푸에르토리코, 산마리노, 타이완 제외




자료: IMF의 Fiscal Monitor(2023.1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Ⅲ. 2024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1. 개 요

2024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baseline)과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를 비교한다.

기준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중기재정전망에 반영된 주요 정책 변화를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수입의 경우 세수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및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등, 법인세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으며, 기타 세목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등이 있다.

[표 34] 주요 정책 변화: 총수입

| | 주요 정책 변화 |
|---|---|
| 국세수입 | ○ (소득세)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해외근로자 비과세 확대 등<br>○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br>○ (기타 세목)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등 |

총지출의 주요 정책 변화를 보면, 의무지출의 경우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수급선정기준 완화, 보훈 및 영유아보육의 단가 인상 등이 있다. 재량지출의 경우 지출규모가 향후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결정되므로 기준전망과 재정전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35] 주요 정책 변화: 총지출

| | 주요 정책 변화 |
|---|---|
| 의무지출 | ○ (고용보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br>○ (건강보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br>○ (생계급여) 수급 선정기준 완화 등<br>○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br>○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br>○ (주거급여) 수급 선정기준 완화<br>○ (보훈) 보상금 단가 인상<br>○ (영유아보육) 보육료 단가 인상 |

## 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

### 가. 개 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의 결과를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한다.

기준전망의 주요 재정총량의 전망 결과를 보면, 총수입은 2023년 571.2조원에서 2032년 887.2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23년 607.6조원에서 2032년 916.6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1.6%에서 2032년 △0.9%로 전망되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3.9%에서 2032년 △1.7%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2023년 1,128.8조원(GDP 대비 51.1%)에서 2032년 1,872.1조원(58.5%)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6] 기준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총수입 | 571.2 | 605.5 | 650.0 | 684.0 | 717.4 | 750.1 | 783.5 | 817.2 | 851.7 | 887.2 | |
| (전년 대비 증가율) | (-7.5) | (6.0) | (7.4) | (5.2) | (4.9) | (4.6) | (4.5) | (4.3) | (4.2) | (4.2) | 5.0 |
| 국세수입 | 340.3 | 362.3 | 391.1 | 417.2 | 439.3 | 462.4 | 484.5 | 507.7 | 531.5 | 556.5 | |
| (전년 대비 증가율) | (-14.1) | (6.5) | (7.9) | (6.7) | (5.3) | (5.2) | (4.8) | (4.8) | (4.7) | (4.7) | 5.6 |
| 국세외수입 | 230.9 | 243.2 | 259.0 | 266.8 | 278.1 | 287.7 | 299.0 | 309.5 | 320.2 | 330.7 | |
| (전년 대비 증가율) | (4.2) | (5.3) | (6.5) | (3.0) | (4.2) | (3.5) | (3.9) | (3.5) | (3.4) | (3.3) | 4.1 |
| 총지출 | 607.6 | 653.3 | 687.0 | 721.7 | 753.8 | 784.7 | 816.9 | 849.3 | 882.6 | 916.6 | |
| (전년 대비 증가율) | (-11.0) | (7.5) | (5.2) | (5.1) | (4.4) | (4.1) | (4.1) | (4.0) | (3.9) | (3.9) | 4.7 |
| 의무지출 | 321.3 | 344.6 | 371.5 | 399.3 | 424.6 | 448.6 | 473.8 | 499.3 | 525.6 | 552.5 | |
| (전년 대비 증가율) | (-3.4) | (7.2) | (7.8) | (7.5) | (6.3) | (5.6) | (5.6) | (5.4) | (5.3) | (5.1) | 6.2 |
| 재량지출 | 286.2 | 308.7 | 315.5 | 322.4 | 329.2 | 336.1 | 343.2 | 350.0 | 357.0 | 364.2 | |
| (전년 대비 증가율) | (-15.4) | (7.9) | (2.2) | (2.2) | (2.1) | (2.1) | (2.1) | (2.0) | (2.0) | (2.0) | 2.7 |
| 통합재정수지 | -36.4 | -47.8 | -37.0 | -37.7 | -36.4 | -34.5 | -33.4 | -32.1 | -31.0 | -29.4 | |
| (GDP 대비 비율) | (-1.6) | (-2.1) | (-1.5) | (-1.5) | (-1.4) | (-1.3) | (-1.2) | (-1.1) | (-1.0) | (-0.9) |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49.8 | 49.5 | 46.1 | 42.9 | 39.7 | 38.9 | 36.1 | 33.1 | 29.4 | 25.1 | |
| (GDP 대비 비율) | (2.3) | (2.1) | (1.9) | (1.7) | (1.5) | (1.4) | (1.3) | (1.1) | (1.0) | (0.8) | |
| 관리재정수지 | -86.2 | -97.3 | -83.1 | -80.6 | -76.1 | -73.4 | -69.5 | -65.2 | -60.3 | -54.6 | |
| (GDP 대비 비율) | (-3.9) | (-4.2) | (-3.4) | (-3.2) | (-2.9) | (-2.7) | (-2.4) | (-2.2) | (-2.0) | (-1.7) | |
| 국가채무 | 1,128.8 | 1,200.9 | 1,287.8 | 1,372.0 | 1,453.0 | 1,541.7 | 1,630.6 | 1,715.8 | 1,796.4 | 1,872.1 | |
| (전년 대비 증가율) | (5.8) | (6.4) | (7.2) | (6.5) | (5.9) | (6.1) | (5.8) | (5.2) | (4.7) | (4.2) | 5.8 |
| (GDP 대비 비율) | (51.1) | (52.1) | (53.2) | (54.1) | (54.8) | (55.9) | (56.9) | (57.7) | (58.2) | (58.5)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나. 총수입

### (1) 개관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 재정전망은 기준전망에 비해 연도별로 0.4~0.9조원 작으며, 10년 동안 총 5.1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37]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수입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중기재정전망(A) | | | | | | | | | | | |
| 총수입 | 571.2 | 604.5 | 649.4 | 683.4 | 716.8 | 749.6 | 783.0 | 816.7 | 851.2 | 886.8 | 5.0 |
| 국세수입 | 340.3 | 361.4 | 390.4 | 416.6 | 438.8 | 461.8 | 484.0 | 507.2 | 531.1 | 556.1 | 5.6 |
| 국세외수입 | 230.9 | 243.2 | 259.0 | 266.8 | 278.1 | 287.7 | 299.0 | 309.5 | 320.2 | 330.7 | 4.1 |
| 기준전망(B) | | | | | | | | | | | |
| 총수입 | 571.2 | 605.5 | 650.0 | 684.0 | 717.4 | 750.1 | 783.5 | 817.2 | 851.7 | 887.2 | 5.0 |
| 국세수입 | 340.3 | 362.3 | 391.1 | 417.2 | 439.3 | 462.4 | 484.5 | 507.7 | 531.5 | 556.5 | 5.6 |
| 국세외수입 | 230.9 | 243.2 | 259.0 | 266.8 | 278.1 | 287.7 | 299.0 | 309.5 | 320.2 | 330.7 | 4.1 |
| 차 이(A-B) | | | | | | | | | | | 합계 |
| 총수입 | 0.0 | -0.9 | -0.7 | -0.6 | -0.6 | -0.5 | -0.5 | -0.5 | -0.4 | -0.4 | -5.1 |
| 국세수입 | 0.0 | -0.9 | -0.7 | -0.6 | -0.6 | -0.5 | -0.5 | -0.5 | -0.4 | -0.4 | -5.1 |
| 국세외수입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 국세수입

중기재정전망의 국세수입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과 비교할 경우 연도별로 0.4~0.9조원 작으며, 10년 동안 5.1조원 작다. 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세수효과를 반영한 결과로, 세법개정안은 국세수입 총액을 기준으로 세수를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등, 법인세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으며, 기타 세목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등이 있다.

[표 38]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국세수입

(단위: 조원)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합계 |
|---|---|---|---|---|---|---|---|---|---|---|---|
| 국세수입 | 0.0 | -0.9 | -0.7 | -0.6 | -0.6 | -0.5 | -0.5 | -0.5 | -0.4 | -0.4 | -5.1 |
| 소득세 | 0.0 | -0.9 | -0.7 | -0.6 | -0.5 | -0.4 | -0.4 | -0.4 | -0.3 | -0.3 | -4.4 |
| 법인세 | 0.0 | 0.0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8 |
| 부가가치세 | 0.0 | 0.0 | 0.0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4 |
| 기타 세목 | 0.0 | 0.0 | -0.1 | -0.1 | -0.1 | -0.1 | -0.2 | -0.2 | -0.1 | -0.1 | -1.1 |

주: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에서 기준전망의 전망치를 뺀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 대비 연도별로 0.3~0.9조원 작으며, 10년 동안 4.4조원 작다. 이는 중기재정전망에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해외근로자 비과세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의 세수 감소 효과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등의 세수 증가 효과를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

[표 39] 주요 정책 변화: 소득세

| 구 분 | 주요 정책 변화 |
|---|---|
| 소득세 | ○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br>–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완화(총소득 기준 4천만원 미만 → 7천만원 미만)<br>–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 인상(80만원 → 100만원)<br>○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상향<br>–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월 300만원 → 500만원)<br>○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br>–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만원 → 20만원)<br>○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br>–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배당소득에 곱하는 배당가산율 하향 조정(11% → 10%) |

법인세는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 대비 연도별로 0.1조원 크며, 10년 동안 0.8조원 크다. 이는 중기재정전망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를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

[표 40] 주요 정책 변화: 법인세

| | 주요 정책 변화 |
|---|---|
| 법인세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br>– 세액공제율 상향(기업규모별 3~10% → 5~15%)<br>– 국내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하는 추가공제율 신설 (기업규모별 10~15%)<br>○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확대<br>–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유상감자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금액 등 추가 |

기타 세목은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 대비 연도별로 0.1~0.2조원 작으며, 10년 동안 1.1조원 작다. 이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표 41] 주요 정책 변화: 기타 세목

| | 주요 정책 변화 |
|---|---|
| 기타 세목 | ○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br>–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5년 → 20년) |

## 다. 총지출

### (1) 개관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중기재정전망의 총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연도별로 1.9~4.8조원 크며, 10년 동안 총 29.5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량지출의 경우 정책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기준전망과 재정전망 간 총지출 차이는 모두 의무지출에서 발생한다.

[표 4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중기재정전망(A) | | | | | | | | | | | |
| 총지출 | 607.6 | 655.2 | 689.3 | 724.2 | 756.6 | 787.8 | 820.3 | 853.4 | 887.1 | 921.4 | 4.7 |
| 의무지출 | 321.3 | 346.5 | 373.8 | 401.8 | 427.4 | 451.7 | 477.2 | 503.4 | 530.1 | 557.3 | 6.3 |
| 재량지출 | 286.2 | 308.7 | 315.5 | 322.4 | 329.2 | 336.1 | 343.2 | 350.0 | 357.0 | 364.2 | 2.7 |
| 기준전망(B) | | | | | | | | | | | |
| 총지출 | 607.6 | 653.3 | 687.0 | 721.7 | 753.8 | 784.7 | 816.9 | 849.3 | 882.6 | 916.6 | 4.7 |
| 의무지출 | 321.3 | 344.6 | 371.5 | 399.3 | 424.6 | 448.6 | 473.8 | 499.3 | 525.6 | 552.5 | 6.2 |
| 재량지출 | 286.2 | 308.7 | 315.5 | 322.4 | 329.2 | 336.1 | 343.2 | 350.0 | 357.0 | 364.2 | 2.7 |
| 차 이(A–B) | | | | | | | | | | | 합계 |
| 총지출 | 0.0 | 1.9 | 2.3 | 2.6 | 2.8 | 3.1 | 3.4 | 4.1 | 4.5 | 4.8 | 29.5 |
| 의무지출 | 0.0 | 1.9 | 2.3 | 2.6 | 2.8 | 3.1 | 3.4 | 4.1 | 4.5 | 4.8 | 29.5 |
| 재량지출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 의무지출

중기재정전망의 의무지출은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과 비교할 경우 연도별로 1.9~4.8조원 크며, 10년 동안 총 29.5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전망과 비교하여 중기재정전망의 의무지출이 큰 이유는 의무지출 분야에 따라 다른데, 복지 분야 의무지출의 경우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결과 10년 동안 28.3조원 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전재원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로 10년 동안 2.0조원 작고, 이자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중기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10년 동안 3.2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의무지출의 경우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결과가 동일하다.[32]

32) 기타 의무지출의 경우 2024년도 예산안 등에 정책 변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준전망을 중기재정전망과 동일하게 가정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표 43]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의무지출

(단위: 조원)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합계 |
|---|---|---|---|---|---|---|---|---|---|---|---|
| 의무지출 | 0.0 | 1.9 | 2.3 | 2.6 | 2.8 | 3.1 | 3.4 | 4.1 | 4.5 | 4.8 | 29.5 |
| 복지 분야 | 0.0 | 2.2 | 2.5 | 2.6 | 2.8 | 3.0 | 3.2 | 3.8 | 4.0 | 4.2 | 28.3 |
| 고용보험 | 0.0 | 0.2 | 0.4 | 0.4 | 0.4 | 0.5 | 0.5 | 0.5 | 0.6 | 0.6 | 4.2 |
| 건강보험 | 0.0 | 0.5 | 0.6 | 0.6 | 0.7 | 0.7 | 0.8 | 1.2 | 1.2 | 1.3 | 7.5 |
| 노인장기 | 0.0 | -0.1 | -0.1 | -0.1 | -0.1 | -0.1 | -0.1 | 0.0 | 0.0 | 0.0 | -0.4 |
| 기초생활보장 | 0.0 | 1.3 | 1.3 | 1.4 | 1.5 | 1.6 | 1.7 | 1.7 | 1.8 | 1.9 | 14.3 |
| 영유아보육료 | 0.0 | 0.2 | 0.2 | 0.2 | 0.2 | 0.2 | 0.3 | 0.3 | 0.3 | 0.3 | 2.3 |
| 지방이전재원 | 0.0 | -0.4 | -0.3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2.0 |
| 이자지출 | 0.0 | 0.0 | 0.1 | 0.2 | 0.3 | 0.3 | 0.4 | 0.5 | 0.6 | 0.7 | 3.2 |
| 기타 의무지출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주: 1.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에서 기준전망의 전망치를 뺀 값임
2. 복지 분야의 하위 항목은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의무지출에 한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항목별로 보면, 먼저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4.2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3.3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6+6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 대상자 수 및 지급단가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는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0.7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의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수급자 규모를 반영한 결과이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0.1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될 계획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2024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인 난임치료휴가 급여[33]는 10년 동안 0.1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33)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7.5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4년 예산안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대비 국고지원 비율이 상승하여 이를 전망에 반영한 결과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0.4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건강보험료율(7.09%)이 2023년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과 연동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이 기준전망에 비해 줄어들기 때문이다.

[표 44] 주요 정책 변화: 사회보험

| | 주요 정책 변화 |
|---|---|
| 고용보험 의무지출 | ○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설<br>–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br>○ 육아휴직 기간 연장<br>–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을 추가 부여(1년→1년6개월)하고, 연장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br>○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사용기간 연장<br>– 만 8세 또는 2학년 → 만 12세 또는 6학년<br>○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연장(5일→10일)<br>○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br>–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
| 건강보험 의무지출 | ○ 2024년 보험료율 동결(7.09%)<br>○ 2024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국고지원금: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2.2%<br>○ 건강보험에 대한 과징금 지원 규정 삭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2023.11.20. 시행 예정)<br>– 현행 과징금 수입의 50%(2023년 기준 130억원 배정) 지원 규정 삭제 |
| 노인장기 의무지출 | ○ 2024년 건강보험료율(7.09%) 동결로 건강보험료 수입과 연동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 감소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14.3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10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다인·다자녀·도서벽지 수급권자의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완화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2.0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정책에 따라 수급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정책에 따라 재산 공제 지역 구분 방식을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을 1.95억~3.64억원으로 상향하는데 따른 수급자 수 확대를 반영한 결과이다. 교육급여는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0.1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2023년 대비 평균 11.1%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주거급여는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2.4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7%에서 48%로 완화되고, 기준임대료가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1.1만원~2.7만원(3.2~8.7%)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표 45] 주요 정책 변화: 공공부조

| 구 분 | 주요 정책 변화 |
|---|---|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br>○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09% 인상(「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개정(개정 2023.8.16., 시행 2024.1.1.)<br>–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대상자 및 생계급여액 증가<br>○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의 30% → 32%)<br>○ 다인·다자녀·도서벽지 수급권자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100% → 4.17%)<br>–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소득 환산율(4.17%) 적용<br>○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br>– 1대는 재산가액에서 산정 제외, 생업용인정 승용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1,600cc → 2,000cc)<br>○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br>– 40만원 공제 + 나머지 금액 30% 추가 공제(24세 이하 → 30세 미만)<br><br>(의료급여)<br>○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2024.1.1.)<br>– 수급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br>*단, 연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 이상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br>○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시행 2024.1.1.)<br>– 부양의무자 재산 공제 지역 구분방식을 개편(3급지 → 4급지)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기본재산공제액 상향<br>* (기존) 10,150～22,800만원 → (개선) 19,500～36,400만원<br><br>(교육급여)<br>○ 교육활동지원비 인상<br>–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2023년 대비 11.1%인상<br>*초 461,000원, 중 654,000원, 고 727,000 (연 1회 지급)<br><br>(주거급여)<br>○ 수급기준 완화(현행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48% 이하)<br>○ 급여단가 인상<br>– 임차가구: 가구당 월평균 17.89만원 → 19.07만원으로 월평균 1.18만원 인상<br>– 청년가구: 가구당 월평균 22.5만원 → 24.36만원으로 월평균 1.86만원 인상 |

보훈 분야 의무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0.4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보훈급여금 대상자 수 전망, 보상금 및 수당 단가 인상율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

영유아보육료는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2.3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보육료 단가 인상과 2024년에 신설된 영아반 개설(유지)인센티브에서 기인한다.

[표 46] 주요 정책 변화: 기타 복지지출

| | 주요 정책 변화 |
|---|---|
| 보훈 | ○ 보상금 및 수당 등의 단가는 국회 예산 확정 후 연말 또는 익년도 1월에 각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결정<br>– 보상금 5.5% 인상 → 5% 인상(상이등급 7급 7% 인상(2% 추가))<br>– 무공영예수당 4만원 인상 → 3만원 인상 (6.4% 인상)<br>– 참전명예수당 4만원 인상 → 3만원 인상(7.7% 인상)<br>– 4·19혁명공로수당 4만원 인상 → 3만원 인상 (7.5% 인상)<br>– 간호수당 5.5% 인상 → 5% 인상<br>– 6·25자녀수당 5.5% 인상 (신규승계자녀 추가 20.5% 인상) → 5% 인상(신규승계자녀 17.5% 인상(12.5% 추가))<br>– 제대군인전직지원금 동결 → 10% 인상 |
| 영유아 보육료 | ○ 영아반 개설(유지)인센티브<br>–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br>○ 보육료 단가 인상<br>– 0~2세 영유아(장애아) 보육료 단가 전년 대비 5% 인상 |

지방이전재원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2.0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지방이전재원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중기재정전망의 국세수입이 기준전망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이자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3.2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에 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진 것에 기인한다.

### (3) 재량지출

중기재정전망의 재량지출은 기준전망과 동일하며, 2023년의 경우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세수 결손으로 지출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본예산(298.4조원)보다 12.2조원 감소한 286.2조원으로 전망하였다.

2024년의 재량지출은 예산안(308.7조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2025년 이후는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에 따라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12.9%에서 2032년 11.4%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7] 중기재정전망: 재량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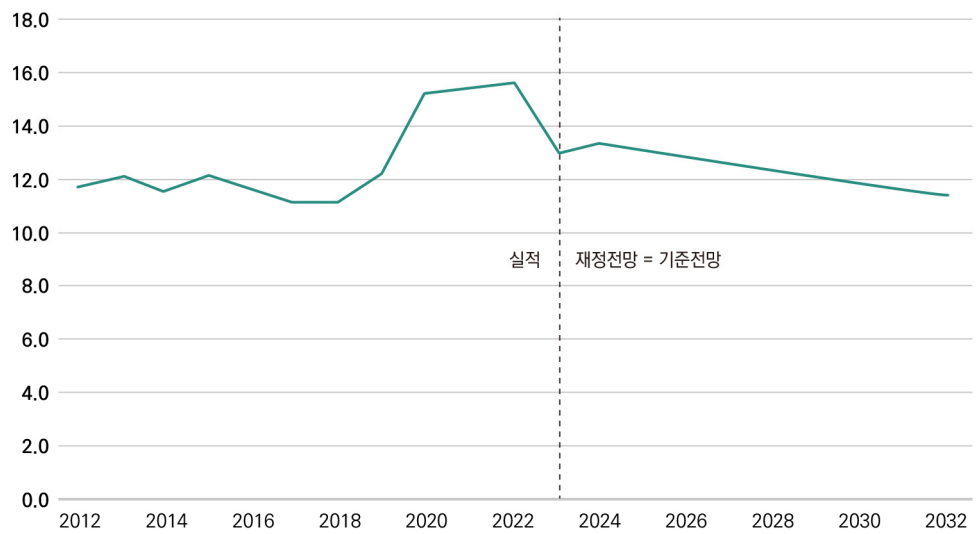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재량지출 | 286.2 | 308.7 | 315.5 | 322.4 | 329.2 | 336.1 | 343.2 | 350.0 | 357.0 | 364.2 | 2.7 |
| (GDP 대비 비율) | (12.9) | (13.4) | (13.0) | (12.7) | (12.4) | (12.2) | (12.0) | (11.8) | (11.6) | (11.4)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7]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량지출

(단위: G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 라. 재정수지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및 의무지출의 증가 등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중기재정전망의 통합재정수지는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총 34.6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는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30.4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8]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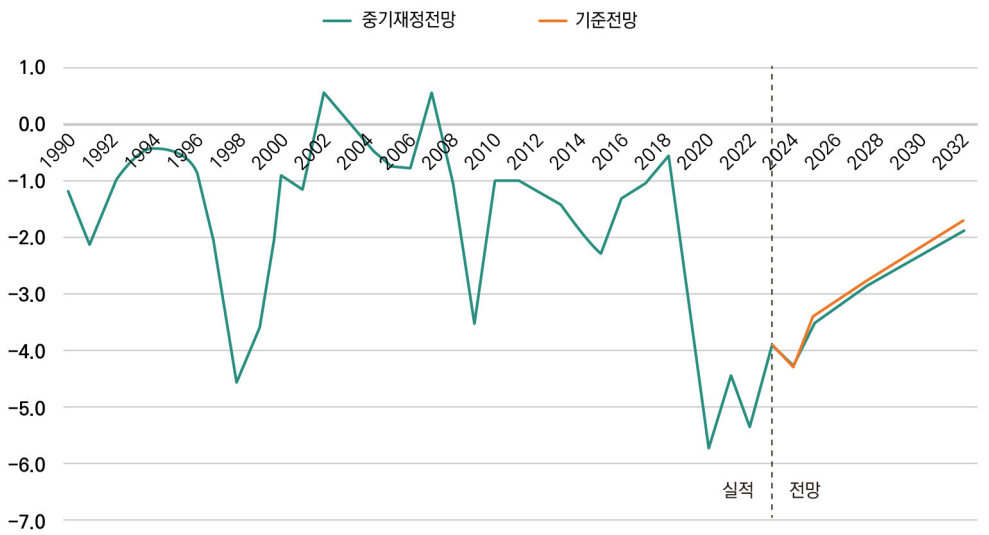
(단위: 조원, %, %p)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중기재정전망(A) | | | | | | | | | | | |
| 통합재정수지 | -36.4 | -50.6 | -39.9 | -40.9 | -39.8 | -38.2 | -37.3 | -36.7 | -35.9 | -34.7 | |
| (GDP 대비 비율) | (-1.6) | (-2.2) | (-1.6) | (-1.6) | (-1.5) | (-1.4) | (-1.3) | (-1.2) | (-1.2) | (-1.1) |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49.8 | 49.3 | 45.7 | 42.5 | 39.3 | 38.4 | 35.6 | 32.6 | 28.8 | 24.5 | |
| (GDP 대비 비율) | (2.3) | (2.1) | (1.9) | (1.7) | (1.5) | (1.4) | (1.2) | (1.1) | (0.9) | (0.8) | |
| 관리재정수지 | -86.2 | -99.9 | -85.7 | -83.3 | -79.1 | -76.6 | -72.9 | -69.3 | -64.6 | -59.2 | |
| (GDP 대비 비율) | (-3.9) | (-4.3) | (-3.5) | (-3.3) | (-3.0) | (-2.8) | (-2.5) | (-2.3) | (-2.1) | (-1.8) | |
| 기준전망(B) | | | | | | | | | | | |
| 통합재정수지 | -36.4 | -47.8 | -37.0 | -37.7 | -36.4 | -34.5 | -33.4 | -32.1 | -31.0 | -29.4 | |
| (GDP 대비 비율) | (-1.6) | (-2.1) | (-1.5) | (-1.5) | (-1.4) | (-1.3) | (-1.2) | (-1.1) | (-1.0) | (-0.9) |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49.8 | 49.5 | 46.1 | 42.9 | 39.7 | 38.9 | 36.1 | 33.1 | 29.4 | 25.1 | |
| (GDP 대비 비율) | (2.3) | (2.1) | (1.9) | (1.7) | (1.5) | (1.4) | (1.3) | (1.1) | (1.0) | (0.8) | |
| 관리재정수지 | -86.2 | -97.3 | -83.1 | -80.6 | -76.1 | -73.4 | -69.5 | -65.2 | -60.3 | -54.6 | |
| (GDP 대비 비율) | (-3.9) | (-4.2) | (-3.4) | (-3.2) | (-2.9) | (-2.7) | (-2.4) | (-2.2) | (-2.0) | (-1.7) | |
| 차 이(A-B) | | | | | | | | | | | 합계 |
| 통합재정수지 | 0.0 | -2.8 | -3.0 | -3.2 | -3.4 | -3.6 | -3.9 | -4.6 | -4.9 | -5.2 | -34.6 |
| (GDP 대비 비율) | (0.0) | (-0.1) | (-0.1) | (-0.1) | (-0.1) | (-0.1) | (-0.1) | (-0.2) | (-0.2) | (-0.2) |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0.0 | -0.2 | -0.4 | -0.4 | -0.4 | -0.5 | -0.5 | -0.5 | -0.6 | -0.6 | -4.2 |
| (GDP 대비 비율) | (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관리재정수지 | 0.0 | -2.6 | -2.6 | -2.7 | -3.0 | -3.2 | -3.4 | -4.1 | -4.3 | -4.6 | -30.4 |
| (GDP 대비 비율) | (0.0)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8]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관리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 마. 국가채무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및 의무지출의 증가 등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는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간 총 29.7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32년 기준 59.4%로 기준전망(58.5%)에 비해 0.9%p 상승한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제외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는 기준전망과 중기재정전망을 동일하게 가정하므로 차이가 없다.

[표 49]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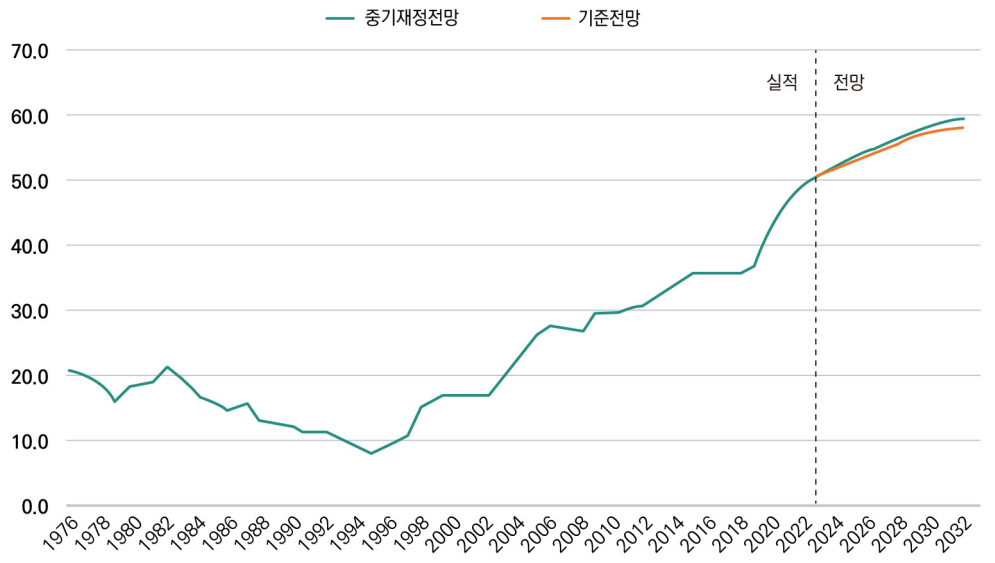
(단위: 조원, %, %p)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연평균 증가율 |
|---|---|---|---|---|---|---|---|---|---|---|---|
| 중기재정전망(A) | | | | | | | | | | | |
| 국가채무 | 1,128.8 | 1,203.2 | 1,292.4 | 1,379.3 | 1,463.2 | 1,555.0 | 1,647.4 | 1,736.6 | 1,821.6 | 1,901.8 | 6.0 |
| (GDP 대비 비율) | (51.1) | (52.2) | (53.4) | (54.3) | (55.2) | (56.4) | (57.5) | (58.4) | (59.0) | (59.4) | |
| 중앙정부채무 | 1,094.6 | 1,170.4 | 1,261.1 | 1,349.1 | 1,433.0 | 1,523.6 | 1,614.8 | 1,702.8 | 1,786.5 | 1,865.4 | 6.1 |
| 적자성 채무 | 683.8 | 766.7 | 837.6 | 912.8 | 984.0 | 1,057.2 | 1,130.4 | 1,199.8 | 1,264.7 | 1,324.0 | 7.6 |
| 금융성 채무 | 410.8 | 403.7 | 423.5 | 436.3 | 449.0 | 466.4 | 484.4 | 502.9 | 521.8 | 541.4 | 3.1 |
| 지방정부 순채무 | 34.2 | 32.8 | 31.3 | 30.1 | 30.2 | 31.4 | 32.6 | 33.8 | 35.1 | 36.4 | 0.7 |
| 기준전망(B) | | | | | | | | | | | |
| 국가채무 | 1,128.8 | 1,200.9 | 1,287.8 | 1,372.0 | 1,453.0 | 1,541.7 | 1,630.6 | 1,715.8 | 1,796.4 | 1,872.1 | 5.8 |
| (GDP 대비 비율) | (51.1) | (52.1) | (53.2) | (54.1) | (54.8) | (55.9) | (56.9) | (57.7) | (58.2) | (58.5) | |
| 중앙정부채무 | 1,094.6 | 1,168.2 | 1,256.6 | 1,341.9 | 1,422.9 | 1,510.3 | 1,598.0 | 1,682.0 | 1,761.3 | 1,835.7 | 5.9 |
| 적자성 채무 | 684.2 | 764.4 | 833.0 | 905.6 | 973.8 | 1,043.9 | 1,113.6 | 1,179.0 | 1,239.5 | 1,294.3 | 7.3 |
| 금융성 채무 | 410.3 | 403.7 | 423.5 | 436.3 | 449.0 | 466.4 | 484.4 | 502.9 | 521.8 | 541.4 | 3.1 |
| 지방정부 순채무 | 34.2 | 32.8 | 31.3 | 30.1 | 30.2 | 31.4 | 32.6 | 33.8 | 35.1 | 36.4 | 0.7 |
| 차 이(A-B) | | | | | | | | | | | |
| 국가채무 | 0.0 | 2.3 | 4.6 | 7.3 | 10.2 | 13.3 | 16.8 | 20.8 | 25.1 | 29.7 | 0.2 |
| (GDP 대비 비율)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
| 중앙정부채무 | 0.0 | 2.3 | 4.6 | 7.3 | 10.2 | 13.3 | 16.8 | 20.8 | 25.1 | 29.7 | 0.2 |
| 적자성 채무 | -0.4 | 2.3 | 4.6 | 7.3 | 10.2 | 13.3 | 16.8 | 20.8 | 25.1 | 29.7 | 0.3 |
| 금융성 채무 | 0.4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지방정부 순채무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9]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단위: G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 3.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수입은 2023년 본예산 기준 625.7조원에서 2027년 722.3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하고,[34] 총지출은 같은 기간 638.7조원에서 736.9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수지는 개선되는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도 예산안 기준 92.0조원 적자에서 2027년 65.8조원 적자로 개선된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국가채무는 증가하고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7년에 53.0%로 상승한다.

34) 다만, 정부의 세수 재추계를 기준으로 보면, 2023년 총수입은 세수 결손 59.1조원으로 인해 566.6조원으로 예상되며, 동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6.3%로 높아진다(이때 국세외수입의 경우는 본예산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표 50]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 | 2023 본예산 | 2024 예산안 | 2025 계획 | 2026 계획 | 2027 계획 | 연평균 증가율 |
|---|---|---|---|---|---|---|
| 총수입 | 625.7 | 612.1 | 661.5 | 692.0 | 722.3 | 3.7 |
| 국세수입 | 400.5 | 367.4 | 401.3 | 423.2 | 444.9 | 2.7 |
| 국세외수입 | 225.2 | 244.7 | 260.2 | 268.8 | 277.4 | 5.4 |
| 총지출 | 638.7 | 656.9 | 684.4 | 711.1 | 736.9 | 3.6 |
| 의무지출 | 340.3 | 348.2 | 373.3 | 394.0 | 413.5 | 5.0 |
| 재량지출 | 298.4 | 308.7 | 311.1 | 317.1 | 323.4 | 2.0 |
| 통합재정수지 | -13.1 | -44.8 | -22.9 | -19.2 | -14.6 | |
| (GDP 대비 비율) | (-0.6) | (-1.9) | (-0.9) | (-0.7) | (-0.5) | |
| 관리재정수지 | -58.2 | -92.0 | -72.2 | -69.5 | -65.8 | |
| (GDP 대비 비율) | (-2.6) | (-3.9) | (-2.9) | (-2.7) | (-2.5) | |
| 국가채무 | 1,134.4 | 1,196.2 | 1,273.3 | 1,346.7 | 1,417.6 | |
| (GDP 대비 비율) | (50.4) | (51.0) | (51.9) | (52.5) | (53.0) | |
| 경상GDP 성장률 | 4.0 | 4.9 | 4.6 | 4.4 | 4.2 | |

주: GDP 대비 비율은 정부의 경상GDP 전망치 기준임(경상GDP 성장률은 2023년의 경우 본예산 확정 시 4.0%이었으나, 2024년도 예산안 제출 시 3.4%로 조정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 9.

## 나.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 (1) 거시경제변수 차이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의무지출 관련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지만, 전망의 기초가 되는 거시경제변수와 전망모형 등이 정부와 달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차이가 있다.

먼저, NABO와 정부의 경상GDP 성장률을 비교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용된 경상GDP 성장률은 2023년 4.0%[35]에서 2024년 4.9%, 2025년 4.6%, 2026년 4.4%, 2027년 4.2% 수준이다. 반면, NABO가 전망에 적용한 경상GDP 성장률은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정부보다 낮지만, 2025년 이후는 정부보다 0.2~0.4%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상GDP 성장률의 차이로 인해 총수입과 총지출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의 전망치뿐 아니라 재정총량의 GDP 대비 비율도 차이가 발생한다.

35) 2023년 전망치는 2023년 본예산 확정 시 기준이며, 2024년도 예산안 제출 시점 기준으로는 3.4%이다.

[표 51]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경상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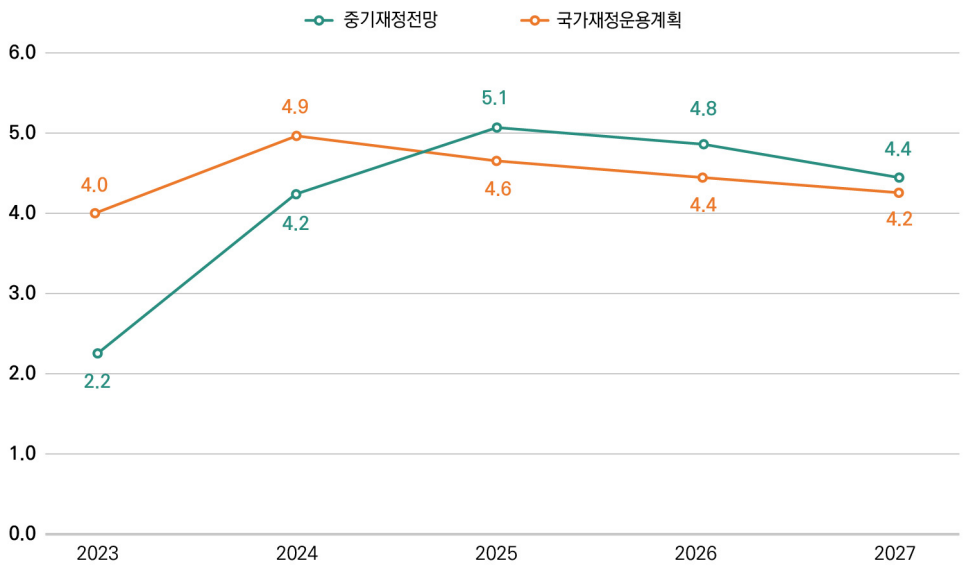
(단위: %, %p)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 중기재정전망(A) | 2.2 | 4.2 | 5.1 | 4.8 | 4.4 |
| 국가재정운용계획(B) | 4.0 | 4.9 | 4.6 | 4.4 | 4.2 |
| 차이(A-B) | -1.8 | -0.7 | 0.4 | 0.4 | 0.2 |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3년 전망치는 2023년 본예산 확정 시 기준이며, 2024년도 예산안 제출 시점 기준으로는 3.4%이므로 NABO와 정부의 차이는 1.2%p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10]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경상GDP 성장률

(단위: %)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3년 전망치는 2023년 본예산 확정 시 기준이며, 2024년도 예산안 제출 시점 기준으로는 3.4%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 (2) 재정총량 차이

총량 수준에서 NABO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하면, 총수입의 경우 5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88.3조원 작으며, 총지출은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4.9조원 큰 수준이다. 총수입은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작고, 총지출은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크

기 때문에 중기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동안 76.5조원 크고,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7년 기준으로 2.2%p 높다.

다만, 정부의 세수 재추계[36]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의 2023년 총수입은 세수 결손 59.1조원으로 인해 566.6조원으로 예상되므로[37]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차이는 감소하여 중기재정전망이 5년 동안 29.3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52]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증감)

(단위: 조원, %p)

| | 2023 | | 2024 | 2025 | 2026 | 2027 | 합계 | |
|---|---|---|---|---|---|---|---|---|
| | 본예산 | 세수재추계 | | | | | 본예산 | 세수재추계 |
| 총수입 | -54.5 | 4.6 | -7.5 | -12.2 | -8.6 | -5.5 | -88.3 | -29.3 |
| 국세수입 | -60.2 | -1.1 | -6.0 | -10.9 | -6.6 | -6.1 | -89.8 | -30.7 |
| 국세외수입 | 5.7 | | -1.6 | -1.3 | -2.0 | 0.6 | 1.5 | |
| 총지출 | -31.2 | | -1.7 | 4.9 | 13.1 | 19.7 | 4.9 | |
| 의무지출 | -19.0 | 3.5 | -1.7 | 0.5 | 7.8 | 13.9 | 1.6 | 24.0 |
| 복지 분야 | 2.6 | | 0.7 | 8.1 | 13.6 | 20.0 | 45.0 | |
| 지방이전재원 | -22.4 | 0.0 | -2.2 | -7.1 | -4.5 | -4.2 | -40.4 | -18.0 |
| 이자지출 | 0.8 | | -0.1 | -0.5 | -1.3 | -1.9 | -3.0 | |
| 기타 의무지출 | 0.0 | | 0.0 | 0.0 | 0.0 | 0.0 | 0.0 | |
| 재량지출 | -12.2 | | 0.0 | 4.4 | 5.3 | 5.8 | 3.3 | |
| 통합재정수지 | -23.3 | | -5.9 | -17.0 | -21.7 | -25.2 | -93.1 | |
| (GDP 대비 비율) | (-1.0) | | (-0.3) | (-0.7) | (-0.9) | (-1.0) | | |
| 관리재정수지 | -28.0 | | -7.9 | -13.5 | -13.8 | -13.3 | -76.5 | |
| (GDP 대비 비율) | (-1.3) | | (-0.4) | (-0.6) | (-0.6) | (-0.5) | | |
| 국가채무 | -5.6 | | 7.0 | 19.1 | 32.5 | 45.6 | | |
| (GDP 대비 비율) | (0.7) | | (1.2) | (1.5) | (1.8) | (2.2) | | |

주: 1.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를 뺀 값임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3년 전망치는 2023년 본예산 기준이며, 음영 부분은 정부의 2023년 세수 재추계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36) 기획재정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2023. 9. 17.
37) 정부의 2023년 국세외수입 전망은 본예산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주요 항목별로 차이를 보면, 국세수입의 경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연도별로 1.1~10.9조원 작으며, 2023~2027년 동안 총 30.7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와 NABO의 전망기간 중 경제지표의 전망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 NABO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2023년 2.2%, 2024년 4.2%로 정부보다 각각 1.2%p, 0.7%p 낮게 전망하였다. 2025년 이후에는 NABO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정부 전망치를 상회하지만, 2023~2024년의 낮은 전망으로 인하여 2027년까지 경상GDP 규모는 정부보다 NABO가 지속적으로 낮게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기 세수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3년 국세수입을 NABO가 정부보다 1.1조원 적게 전망한 점과 국세수입의 경상성장률 대비 탄력성(세수부양성)의 수준을 2024~2027년 기준 연평균 1.41로 정부(연평균 1.49)보다 낮게 예상한 점도 정부보다 적은 국세수입을 전망하는데 일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외수입의 경우,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도별로 △2.0~5.7조원의 차이가 있으며, 2023~2027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총 1.5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수입과 세외수입의 전망 차이에서 기인한다. 2023년은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큰데, 이는 국민연금의 재산수입과 세외수입 등의 2023년 수납 실적이 양호한 것에 기인한다. 2024~2026년 기간은 NABO가 정부보다 산재보험 기여금은 1.8조원, 세외수입은 3.2조원 작게 전망하고 있어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작으나, 2027년 이후에는 중기재정전망의 국민연금 기여금 증가 추세에 따라 NABO가 정부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표 53]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원인: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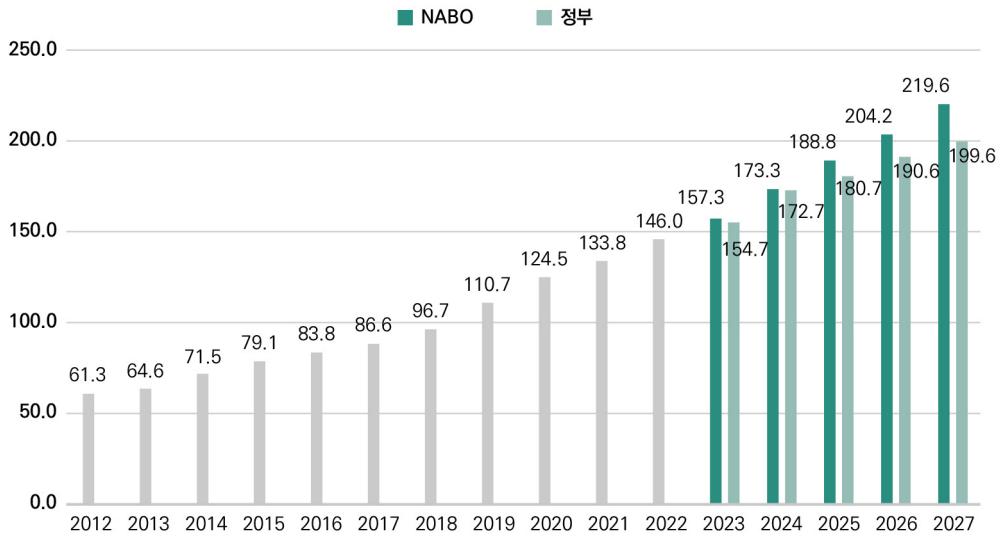
| | 주요 요인 |
|---|---|
| 국세수입 | ○ 2023년 국세수입 전망 차이: 정부 전망 대비 △1.1조원<br>– 2023년 전망은 향후 세수전망의 베이스이므로 이후 전망에도 영향<br>○ 2023~2024년간 경상성장률 및 이후 경상GDP 규모 전망 차이<br>– 경상성장률 전망: (NABO) '23년 2.2, '24년 4.2 vs. (정부) '23년 3.4, '24년 4.9<br>– 경상GDP 전망: (NABO) '25년 2,421조원, '26년 2,538조원, '27년 2,651조원<br>(정부) '25년 2,454조원, '26년 2,564조원, '27년 2,672조원<br>○ 경상GDP 성장에 따른 세수부양성 차이<br>– 2024~2027년 간 GDP성장에 따른 세수부양성: 정부 1.49 vs. NABO 1.41 |
| 국세외수입 | ○ (국민연금) 2023년은 7월까지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결과 차이 발생, 2024년 이후는 가입자 수 및 기준소득월액 전망 등 전망모형의 차이<br>○ (산재보험) 장래 사업대상자에 대한 전망모형의 차이와 취업자 수, 임금근로자 수,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 등에 대한 전망 차이<br>○ (세외수입) 2023년은 8월까지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결과 차이 발생, 2024년 이후는 전망모형과 거시경제변수 등에 대한 전망 차이 |

의무지출의 경우 2023~2027년 5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1.6조원 큰데,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2023년 지방이전재원의 감액(23조원 내외)을 고려하면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차이가 확대되어 중기재정전망이 5년 동안 24.0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동안 45.0조원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하위항목별로 보면 공적연금 25.1조원, 사회보험 10.9조원, 공공부조 9.0조원 등이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최근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 추세 및 2024년 정책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계획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일부 의무지출 항목(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지원, 의료급여 등)은 연도별로 동일 금액으로 계획되어 그 차이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에 대한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복지 분야 의무지출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는 실적치, 2023년 이후는 정부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NABO의 경우 중기재정전망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이전재원은 2023년의 경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2.4조원 작은데,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이전재원 감액을 고려하면 정부와 NABO 간 차이는 크지 않다.[38] 2024년 이후 지방이전재원의 차이는 NABO와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 차이에서 기인한다. 한편, 이자지출은 2023년의 경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2023년 본예산)보다 0.8조원 큰데, 이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조기상환 등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지출 증가,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따른 청약저축 이자지급 증가 등을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 2024년 이후 정부와 NABO 간 이자지출의 차이는 주로 국고채 이자지출에서 발생하는데, 적자국채 발행 규모와 이자율 차이에서 비롯된다. 중기재정전망은 2024~2027년 동안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76.7~88.9조원 수준으로 전망하여 국고채 이자지출이 2023년 19.6조원에서 2027년 28.2조원으로 연평균 9.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64.6~81.8조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국고채 이자

38) NABO 중기재정전망의 2023년 지방이전재원에는 2022년 지방교부세 정산분(0.4조원)을 포함하였는데, 동일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정부의 2023년 지방이전재원에도 동 정산분을 포함하였다.

지출을 2023년 19.2조원에서 2027년 30.0조원으로 연평균 11.8%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NABO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보다 크게 전망하였으나, 국고채 이자율은 최근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재량지출의 경우 중기재정전망은 2023년의 경우 세수 결손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298.4조원)보다 12.2조원 감소한 286.2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정부가 올해 59.1조원(정부 세수 재추계 기준)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어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은 본예산보다 감액할 계획이나, 여유재원(28조원, 세계잉여금 4조원 및 기금여유재원 24조원)을 확보하여 "통상의 지출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기재정전망은 NABO의 총수입 및 의무지출 전망치에 근거하여 관리재정수지가 본예산 대비 28조원 확대되는 수준에서 재량지출을 전망하였다. 2024년은 예산안(308.7조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2025년 이후는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의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증가율('24년 전년 대비 증가율 3.4%, '25년 0.8%, '26년 1.9%, '27년 2.0%)은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아 2025년 이후 중기재정전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원인: 총지출

| | 주요 요인 |
|---|---|
| 의무지출 | (복지 분야)<br>○ (국민연금) 2023년은 7월까지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결과 차이 발생, 2024년부터는 수급자 수 및 평균연금급여 수급액 전망 등 전망모형의 차이<br>○ (사학연금) 2023년은 7월까지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결과 차이 발생, 2024년부터는 명목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와 수급자 수 및 평균 연금급여 수급액에 대한 전망 차이<br>○ (기초연금) 2023년은 7월까지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결과 차이 발생, 2024년부터는 유형별 수급자 수 및 감액자의 급여 감액률 등 전망 차이<br>○ (고용보험) 장래 사업대상자 수에 대한 전망모형의 차이 및 실업률,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 등에 대한 전망 차이<br>○ (산재보험) 급여별 사업대상자 수에 대한 전망모형의 차이와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 등에 대한 전망 차이<br>○ (건강보험) 2025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가입자 지원 금액이 동일하여 차이 발생<br>○ (노인장기요양보험) 2025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이 동일하여 차이 발생<br><br>(지방이전재원)<br>○ 총수입 중 내국세와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전망 차이<br><br>(이자지출)<br>○ 적자국채 발행 규모 및 국고채금리 등 차이 |
| 재량지출 | ○ (2023년) 중기재정전망은 세수 결손 등을 고려하여 전망하였으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본예산 기준<br>○ (2024년)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동일<br>○ (2025~2027년) 중기재정전망은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 전망 |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3년의 경우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2023년 본예산)보다 23.3조원 큰데, 이는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여유재원 확보를 통해 지방이전재원을 제외하고 통상의 지출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 NABO의 국세수입 전망이 정부보다 1.1조원 작으나 국세외수입은 5.7조원 커 통합재정수지 차이는 여유재원의 확보에 따른 지출 규모 28.0조원보다 작은 23.3조원으로 전망된다. 중기재정전망의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여유재

원의 확보에 따른 지출 규모 28.0조원만큼 국가재정운용계획(2023년 본예산)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39] 2024년 이후 NABO의 재정수지 적자가 정부보다 큰 것은 중기재정전망의 국세수입 등이 정부보다 작으나 총지출은 크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가채무의 경우 2023년은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2023년 본예산)보다 5.6조원 작은데, 이는 2023년 세계잉여금의 국고채 상환(△2.9조원), 국민주택채의 잔액 감소(△3.7조원) 등에 따른 차이로 이를 반영할 경우 중기재정전망과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은 동일한 수준이다.[40] 2024년 이후 정부와 NABO의 차이는 총수입 및 총지출 차이에서 비롯되는 관리재정수지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관리재정수지 차이만큼 국고채 발행 규모가 커져 중기재정전망의 국가채무가 정부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 다. 중기재정운용 평가

### (1) 복지 분야 의무지출 계획의 적정성

NABO의 중기재정전망 결과와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를 통해 정부의 중기재정운용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데, 정부의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복지 분야 의무지출을 상대적으로 낮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23년 154.7조원이며, 2024년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172.7조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7년 199.6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NABO의 중기재정전망은 2023년 157.3조원에서 2027년 219.6조원으로 연평균 8.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연평균 증가율은 2.1%p 높은 수준이다. 중기재정전망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 변화를 반영한 전망 결과이므로 두 전망 간 차이는 의무지출 사업별 수급자 수 또는 단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39) 정부는 세수 재추계 기준으로 2023년 재정수지를 전망하고 있지 않아 NABO 중기재정전망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40) 국가채무 금액이 동일함에도 GDP 대비 비율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정부와 NABO 간 경상 GDP 차이에 따른 것이다.

[표 55]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복지 분야 의무지출

(단위: 조원, %, %p)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연평균 증가율 |
|---|---|---|---|---|---|---|
| 중기재정전망(A) | 157.3 | 173.3 | 188.8 | 204.2 | 219.6 | 8.7 |
| 국가재정운용계획(B) | 154.7 | 172.7 | 180.7 | 190.6 | 199.6 | 6.6 |
| 차이(A-B) | 2.6 | 0.7 | 8.1 | 13.6 | 20.0 | 2.1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차이를 하위 항목별로 보면,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023~2027년 5년 합계 기준으로 45.0조원 큰데, 공적연금의 경우 25.1조원, 사회보험은 10.9조원, 공공부조는 9.0조원 크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차이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6] 복지 분야 의무지출의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증감)

(단위: 조원)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합계 |
|---|---|---|---|---|---|---|
| 복지 분야 의무지출 | 2.6 | 0.7 | 8.1 | 13.6 | 20.0 | 45.0 |
| 공적연금 | 3.0 | 1.0 | 4.1 | 7.1 | 9.9 | 25.1 |
| 국민연금 | 2.8 | 0.9 | 4.1 | 7.0 | 10.2 | 25.0 |
| 사학연금 | 0.3 | 0.3 | 0.1 | 0.1 | 0.0 | 0.7 |
| 공무원연금 | -0.1 | -0.1 | 0.0 | 0.1 | -0.3 | -0.4 |
| 군인연금 | 0.0 | 0.0 | 0.0 | 0.0 | -0.1 | -0.1 |
| 사회보험 | -0.5 | -0.5 | 2.4 | 4.0 | 5.6 | 10.9 |
| 고용보험 | 0.0 | -0.3 | 1.5 | 2.0 | 2.3 | 5.5 |
| 산재보험 | -0.5 | -0.1 | -0.2 | -0.2 | -0.2 | -1.2 |
| 건강보험 | 0.0 | -0.2 | 0.7 | 1.6 | 2.5 | 4.7 |
| 노인장기요양보험 | 0.0 | 0.1 | 0.4 | 0.6 | 0.9 | 2.0 |
| 공공부조 | 0.2 | 0.2 | 1.6 | 2.7 | 4.4 | 9.0 |
| 국민기초생활보장 | 0.1 | 0.0 | 0.8 | 1.5 | 2.4 | 4.8 |
| 의료급여 | 0.0 | 0.0 | 0.7 | 1.6 | 2.4 | 4.7 |
| 기초연금 | 0.1 | 0.1 | 0.8 | 1.3 | 1.9 | 4.2 |
| 기타의무지출 | 0.0 | 0.0 | 0.0 | -0.2 | 0.2 | 0.0 |

주: 1.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를 뺀 값임
2. 표는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차이가 있는 주요 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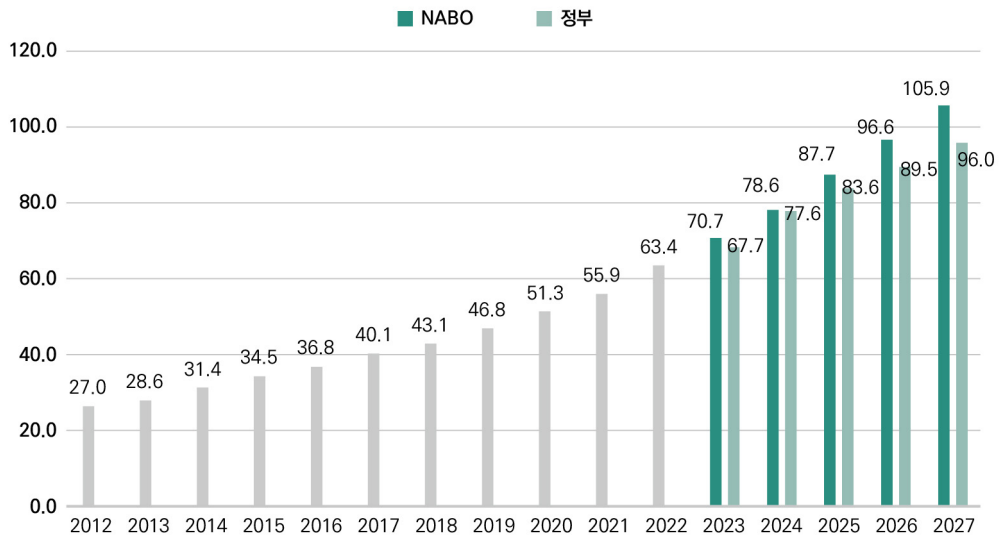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첫째, 국민연금의 경우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합계 기준으로 25.0조원 크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급여는 2023년 36.2조원에서 2027년 53.3조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NABO 재정전망에서는 2023년 39.0조원에서 2027년 63.5조원으로 연평균 1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수급자 수와 평균 연금급여 수급액에 대한 전망모형 및 가정의 차이와 명목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의 전망 차이에 기인한다. 과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연금급여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8.7%~16.8% 수준이었고, 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3.2% 수준이었다. 반면,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2025~2027년 국민연금급여의 증가율은 7.0~7.3%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수급자 수의 증가와 연급급여 단가의 증가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급여 증가율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의무지출에 대한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공적연금 의무지출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는 실적치, 2023년 이후는 정부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NABO의 경우 중기재정전망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둘째, 고용보험의 경우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합계 5.5조원 크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2023년 13.7조원에서 2027년 15.0조원으로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NABO 재정전망에서는 2023년 13.6조원에서 2027년 17.3조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고용보험 의무지출의 증가율을 4.4%로 전망하였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NABO는 동기간 각각 6.4%,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장래 사업대상자 수에 관한 전망모형의 차이 및 실업률,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2025년 고용보험 의무지출이 2024년 대비 0.2조원 감소하고,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0.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022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구직급여를 포함한 실업급여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였다. NABO 경제전망에서 2024~2025년 실업자수 및 실업률이 증가 추세이며, 최근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의 확대로 향후 관련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건강보험의 경우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합계 기준으로 4.7조원 크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2023년 12.0조원에서 2027년 13.6조원으로 연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NABO 재정전망에서는 2023년 12.0조원에서 2027년 16.1조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의 2025년부터 2027년 금액이 2024년 예산안(12.4조원)으로 동일하게 계획된 것에 기인한다.[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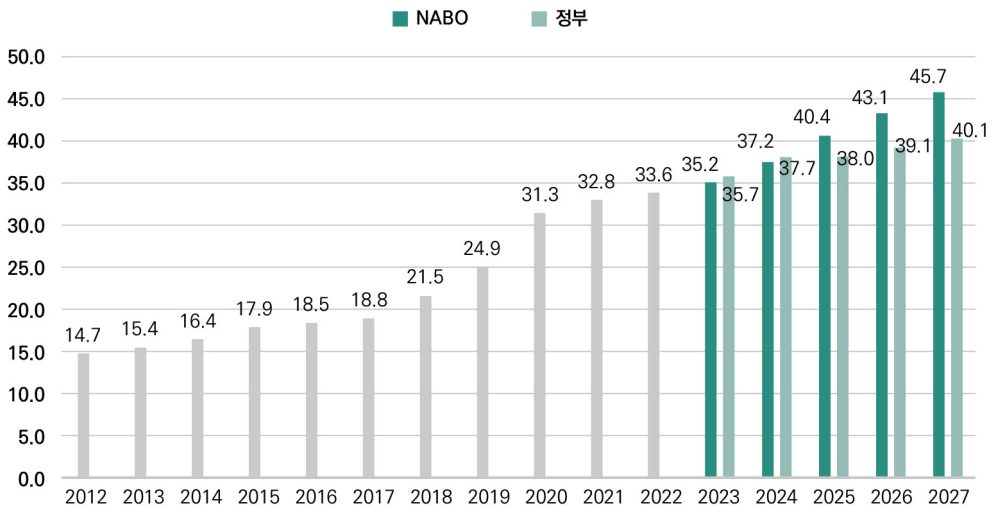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합계 기준으로 2.0조원 크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은 2023년 2.2조원에서 2027년 2.5조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NABO 재정전망에서는 2023년 2.2조원에서 2027년 3.4조원으로 연평균 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5년부터 2027년 금액이 2024년 예산안(2.5조원)으로 동일하게 계획된 것에 기인한다.[42] 참고로, 사회

41)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 및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출 증가 수준 관리, 보험료 수입 증가 요인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보험 의무지출(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사회보험 의무지출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는 실적치, 2023년 이후는 정부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NABO의 경우 중기재정전망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다섯째, 의료급여의 경우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합계 기준으로 4.7조원 크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2023년 9.1조원에서 2027년 8.9조원으로 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NABO 재정전망에서는 2023년 9.1조원에서 2027년 11.4조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5~2027년 금액이 2024년 예산안(8.9조원)으로 동일하게 계획된 것에 기인한다.[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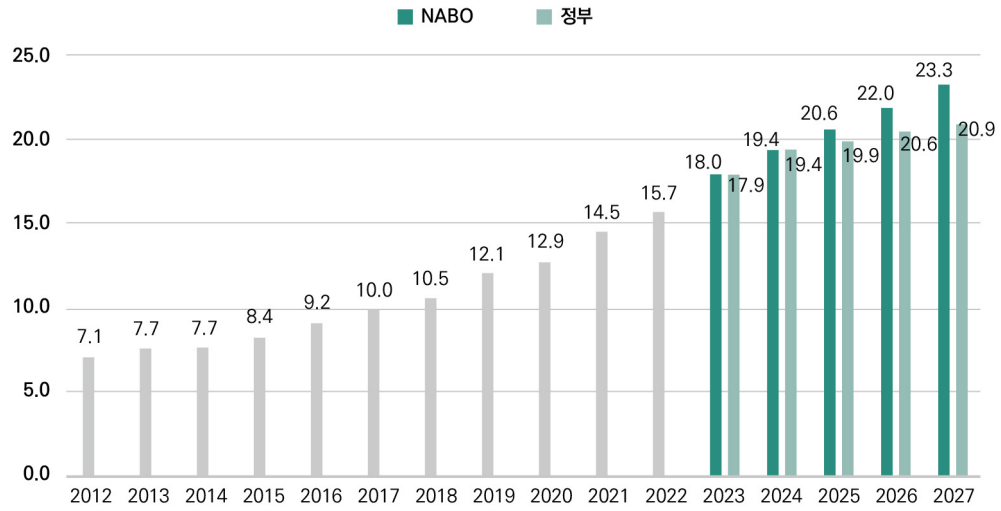
참고로, 의료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에 대한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42) 이에 대해 정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수입 전망 외에 국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43)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수급자 수 변동 추이 및 2024년 제도개선 등을 반영하되, 향후 의무지출 효율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추계한 것이라고 한다.

[그림 14]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초생활보장 의무지출

(단위: 조원)




주: 2022년까지는 실적치, 2023년 이후는 정부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NABO의 경우 중기재정전망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여섯째, 기초연금의 경우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합계 기준으로 4.2조원 크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23년 18.5조원에서 2027년 23.4조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NABO 재정전망에서는 2023년 18.6조원에서 2027년 25.3조원으로 연평균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전망기간의 유형별 수급대상자 비율, 감액수급률 및 감액자의 평균 감액률에 대한 가정,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의 차이에 기인한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 2021년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인상된 2022년(월 307,500원)의 수급자 수와 기초연금 지출액 실적을 살펴보면, 동 기간 수급자 수는 597.3만명에서 623.9만명으로 4.4%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8.9% 증가하였다. 수급자 수 증가율보다 지출액의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수급자 수 증가율에는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만 반영되는 반면, 기초연금 지출 증가율에는 인구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동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상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5.3%임을 고려할 때, NABO는 동 기간 기초연금 지출 증가율을 8.0%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 (2)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 필요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예산은 재정준칙을 준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기 국가채무 증가 억제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44] 정부가 법제화하려는 재정준칙(이하 “재정준칙(안)”)은 관리재정수지의 한도를 GDP 대비 △3%로 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동 한도를 △2%로 축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NABO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7]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재정수지 비율

(단위: GDP 대비 %, %p)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
| 중기재정전망(A) | -3.9 | -4.3 | -3.5 | -3.3 | -3.0 | -2.8 | -2.5 | -2.3 | -2.1 | -1.8 |
| 국가재정운용계획(B) | -2.6 | -3.9 | -2.9 | -2.7 | -2.5 | | | | | |
| 차이(A-B) | -1.3 | -0.4 | -0.6 | -0.6 | -0.5 | | | | | |

주: 1. 2023년의 경우 중기재정전망은 세수 결손을 고려한 전망치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본예산 기준임

2.. 음영 부분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3.0% 미만인 시점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 계획보다 큰 이유는 중기재정전망의 국세수입이 5년 합계 기준으로 30.7조원 작은 반면, 의무지출은 같은 기간 24.0조원 크기 때문이다. 중기재정전망의 국세수입이 정부보다 작아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지방이전재원(의무지출)이 작음에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지 분야 의무지출에 대한 NABO 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의무지출도 중기재정전망이 크다.

재량지출에 대한 중기재정전망은 2024년의 경우 정부 예산안(308.7조원)과 동일하게 가정하나, 2025년부터는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시 말해, 향후 재량지출은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나 2024년 수준의 실질가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정부는 2025~2027년

44)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2022. 7. 7.) 등을 통해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재량지출을 2025년 311.1조원(전년 대비 0.8% 증가), 2026년 317.1조원(1.9%), 2027년 323.4조원(2.0%)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으며, 2025~2027년 동안 정부 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다 15.5조원 작다. 하지만 정부의 재량지출 계획(2025~2027년)을 반영하더라도 2026년까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45]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58]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재량지출

(단위: 조원,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 중기재정전망 | 286.2 | 308.7 | 315.5 | 322.4 | 329.2 |
| (전년 대비 증가율) | (-15.4) | (7.9) | (2.2) | (2.2) | (2.1) |
| 국가재정운용계획 | 298.4 | 308.7 | 311.1 | 317.1 | 323.4 |
| (전년 대비 증가율) | (-11.7) | (3.4) | (0.8) | (1.9) | (2.0) |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3년 금액은 본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표 59] 재량지출 수준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비율 변화

(단위: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 중기재정전망 | -3.9 | -4.3 | -3.5 | -3.3 | -3.0 |
| 중기재정전망<br>(정부 재량지출 반영) | | | -3.4 | -3.1 | -2.8 |

주: 음영 부분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3.0% 미만인 시점을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5) 다만, 이러한 결과는 재량지출은 정부의 계획을 반영하였지만 총수입과 의무지출을 NABO 전망치에 근거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Ⅳ. 요약 및 결론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10년 기간의 재정총량을 전망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인 기준전망(baseline)과 비교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총수입은 2023년 571.2조원(GDP 대비 25.8%)에서 2032년 886.8조원(27.7%)으로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23년 607.6조원(GDP 대비 27.5%)에서 2032년 921.4조원(28.8%)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1.6%, 2024년 △2.2%, 2032년 △1.1%로 전망되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3.9%, 2024년 △4.3%, 2032년 △1.8%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2023년 1,128.8조원(GDP 대비 51.1%)에서 2032년 1,901.8조원(59.4%)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와 의무지출의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 등으로 총수입은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총 5.1조원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지출은 의무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로 기준전망에 비해 29.5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관리재정수지는 기준전망에 비해 30.4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가채무는 기준전망에 비해 29.7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32년 기준으로 59.4%로 기준전망(58.5%)에 비해 0.9%p 상승한다.

재정전망은 전망 당시의 인구 및 거시경제에 대한 일정한 가정 하에서 정부의 재정정책 및 그 기조가 유지될 경우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재정적 결과를 추계(projection)하는 작업인데, 이번 중기재정전망 결과를 통해 정부의 중기재정운용 계획을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수지가 개선되며, 2025년부터는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3.0% 미만으로 유지되어 정부의 재정준칙(안)이 준수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다만, NABO의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에 근거할 경우 2027년부터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처럼 2025년부터 재정준칙(안)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 | |
|---|---|
| 발간일 | 2023년 10월 |
| 발행인 |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
| 편 집 |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 발행처 | **국회예산정책처**<b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br>(tel 02·2070·3114) |
| 인쇄처 | ㈜디자인여백플러스 / 02-2672-1535 |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3776)

ISBN 979-11-6799-173-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 | |
|---|---|
| 발간등록번호 | 31-9700495-001979-01 |
| ISBN | 979-11-6799-173-7 |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